

참여복지 5개년계획 평가연구
－ 2차 평가 －

김승권 외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참여복지 5개년계획 평가분야별 연구진

분과	분야	저자
총괄	총괄	김승권
		조홍식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강혜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김승권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김미숙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김태완
	기초의료보장	이주열, 최병호
	자활지원	김안나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경로연금)	김수봉
	노인복지서비스(노인수발)	선우덕
	장애인복지서비스	윤상용
	가정 및 아동복지서비스(가정복지서비스)	김승권
	가정 및 아동복지서비스(아동복지서비스)	박세경
사회보험	국민연금	김수봉
	건강보험	이주열, 최병호
	고용보험	방하남
	산재보험	윤조덕
관련복지정책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이태진
	정보격차 해소	육주혜
	근로자복지정책 추진	윤조덕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보육)	서문희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문화예술, 체육, 관광분야)	김세훈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청소년분야)	김승권
	교육기회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김민

※ 연구지원 및 행정지원: 임성은, 이주연

목 차

요약	8
제1장 서론	5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5
제2장 정책평가 이론	61
제1절 정책평가 유형 및 평가지표의 개발	61
제2절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	63
제3장 평가대상 사업 및 평가틀	82
제1절 평가대상 사업	82
제2절 평가틀	83
제4장 2006년도 추진실적 평가	92
제1절 사회복지행정의 추진실적 평가	92
제2절 기초생활보장의 추진실적 평가	101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추진실적 평가	104
제4절 사회보험의 추진실적 평가	122
제5절 참여복지 관련 복지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136
제5장 평가결과의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173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논의	173
제2절 정책제언	180
참고문헌	206
부 록	208

표 목 차

〈표 2-1-1〉 정책평가지표 체계의 구성	62
〈표 2-2-1〉 전통적 성과관리 평가시스템과 전략적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의 특성 비교	71
〈표 2-2-2〉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틀	81
〈표 3-1-1〉 본 연구에서의 평가대상 사업	83
〈표 3-2-1〉 평가틀	84
〈표 3-2-2〉 평가지표	85
〈표 3-2-3〉 과제별 성과평가지표	86
〈표 4-1-1〉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93
〈표 4-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94
〈표 4-1-3〉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96
〈표 4-1-4〉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97
〈표 4-1-5〉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99
〈표 4-1-6〉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00
〈표 4-2-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02
〈표 4-2-2〉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03
〈표 4-2-3〉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05
〈표 4-3-1〉 ‘소득보장 체계 구축’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07
〈표 4-3-2〉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08
〈표 4-3-3〉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10
〈표 4-3-4〉 ‘의료보장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12
〈표 4-3-5〉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13

〈표 4-3-6〉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15
〈표 4-3-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16
〈표 4-3-8〉 ‘가정관련 교육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18
〈표 4-3-9〉 ‘아동권리의 증진’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20
〈표 4-3-10〉 ‘국내입양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22
〈표 4-4-1〉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24
〈표 4-4-2〉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25
〈표 4-4-3〉 ‘급여(보장성 강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27
〈표 4-4-4〉 ‘재정(재정건실화, 부담 형평성 확보)’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28
〈표 4-4-5〉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30
〈표 4-4-6〉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32
〈표 4-4-7〉 ‘산재보험 수혜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134
〈표 4-4-8〉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135
〈표 4-5-1〉 ‘최저소득층 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37
〈표 4-5-2〉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39
〈표 4-5-3〉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40
〈표 4-5-4〉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142
〈표 4-5-5〉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143
〈표 4-5-6〉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145
〈표 4-5-7〉 ‘보육료 지원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46
〈표 4-5-8〉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48
〈표 4-5-9〉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50
〈표 4-5-10〉 ‘생활체육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52
〈표 4-5-11〉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참여기회 증진’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54

〈표 4-5-12〉 ‘청소년분야(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55
〈표 4-5-13〉 ‘특수교육강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57
〈표 4-5-14〉 ‘유아교육기회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59
〈표 4-5-15〉 ‘저소득층 교육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60
〈표 4-5-16〉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62
〈표 4-5-17〉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64
〈표 4-5-18〉 ‘귀국학생 교육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65
〈표 4-5-19〉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67
〈표 4-5-20〉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68
〈표 4-5-21〉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70
〈표 4-5-22〉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구축’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71
〈표 4-5-23〉 ‘민간의 참여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173
〈표 5-1-1〉 분과별 평가결과	174
〈표 5-1-2〉 분야별 평가결과	175
〈표 5-1-3〉 사회복지행정분과 과제별 평가결과	176
〈표 5-1-4〉 기초생활보장분과 과제별 평가결과	176
〈표 5-1-5〉 사회복지서비스분과 과제별 평가결과	177
〈표 5-1-6〉 사회보험분과 과제별 평가결과	178
〈표 5-1-7〉 관련 복지정책분과 과제별 평가결과	179
〈부표 1-1〉 연도별 미신고시설 수(1월 말 기준)	227
〈부표 3-1〉 전체 가구 및 장애인 가구 빈곤율	265
〈부표 3-2〉 재활병상 충족율	271
〈부표 3-3〉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충족율	275
〈부표 3-4〉 전국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280
〈부표 5-1〉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목표 및 실적	378
〈부표 5-2〉 문화바우처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384
〈부표 5-3〉 프로그램 및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	389

〈부표 5-4〉 문화기반시설 건립 추진실적	389
〈부표 5-5〉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확대 만족도 결과	394
〈부표 5-6〉 생활체육활성화 추진 실적	395
〈부표 5-7〉 복지관광 만족도	399

그림 목 차

[그림 1-2-1] 사업수행체계	57
[그림 1-2-2] 사업추진 흐름도	58
[그림 2-2-1] BSC 전략지도	72

요 약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사회보장발전계획 중 제2차 계획(2004~2008년)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 수립됨.
 - －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의 구축, 문화서비스 확대 등 광의의 복지 영역을 전제로 포괄적인 정책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정책평가는 계획의 내용, 집행, 집행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정임.
- 2005년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에서는 계획의 수립 및 정기적인 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는 복지영역의 종합적인 정책평가로서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복지정책의 평가로서 의미를 가짐.
- 본 연구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2006년도 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평가대상 사업 선정
 - － 2006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후, 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우

선대상으로 선정함.

- 정책 평가와 복지정책 평가의 특성 등에 관한 이론 검토를 통하여 평가틀을 마련함.
 - 계획·집행·성과단계로 구분하여 각 3~5개로 세분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평가요소의 척도는 계량화를 원칙으로 함.
- 정부의 정책 환경의 변화, 정책 수행의 과정, 정책으로 인한 결과 및 영향 등에 대한 양적, 질적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2006년도 추진현황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실시함.
 - 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그 함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참여복지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정책적 의미를 규명함.
- 참여복지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함.
 - 참여복지가 당초의 의미를 살리고, 복지발전을 위하여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함.
 - 계획의 수정과 새로운 계획의 보강 등으로 참여복지계획이 향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함.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정책 평가 이론 및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 관련 문건을 검토함.
- 관련 2차 자료의 분석
 -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환경요인의 변화 또는 정책집행 관련 2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참여복지계획 수립 및 집행 관련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평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함.

- 학계전문가, 정책전문가 등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과정의 전반적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 수집된 자료의 해석 등 전반적인 평가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청취함.

□ 사업수행체계

- 보건복지부 및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를 총괄함.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평가단 구성 및 평가를 구축, 그리고 정책평가 과정 및 분석 등 본 연구를 추진 및 총괄함.
- 총 5개 분과를 구성함으로써 참여복지평가를 위한 연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함.
 - 사회복지행정분과, 기초생활보장분과, 사회복지서비스분과, 사회보험분과, 관련복지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인, 외부학자 1인, 관계 공무원 5인 이내, 민간복지기관 2인으로 이루어짐.

□ 사업수행 세부 절차

- 보건복지부는 중앙 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 평가지침 통보
- 중앙 행정기관 및 각 시·도는 전년도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평가 추진실적 및 2007년 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에는 추진실적, 자체평가결과, 향후과제 등 포함
-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평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평가단에 송부
- 평가단은 각 분과별로 평가 실시
 - 평가보고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
 - 평가보고서에는 권고안(건의사항) 포함
-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각 시·도에 통보
- 평가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 2006년 참여복지계획의 평가결과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정책제언 포함)

제 2 장 정책평가 이론

제1절 정책평가 유형 및 평가지표의 개발

1. 정책평가의 유형

□ 프로그램 평가론

- 프로그램 평가는 응용 사회과학의 확산에 따른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작업과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PPBS 움직임에 의해 진행됨.
- 전자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평가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과 예산을 연계함을 의미함.

□ 성과점검 및 검토

- 프로그램 평가 및 합리적 모형에 대한 확신의 약화, 방법론적인 엄격성 완화, 정부활동을 대상으로 한 평가, 효율성과 집행과정으로 확대된 평가 관심으로 인하여 점검(monitoring)을 강조하게 됨.
- 점검은 대다수 선진국 정부의 목표였던 비용통제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집행과정에서의 개선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빠르게 도입됨.

□ 성과감사

- 전통적인 감사는 세출이나 행위가 정해진 권한 내에서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책무성에 초점을 맞춤.
- 성과감사는 세출이나 행위가 관리적 측면에서 적절하였는가의 책무성도 평가함.
- 대체로 오늘날 평가의 유형은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인과분석 및 환류 등을 포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위의 세 가지 유형을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사용하는 추세임.

2. 평가지표의 개발

□ 지표의 개념

- 지표는 평가의 목적, 방법, 구조 및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의 의미로만 정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 지표는 '사회의 중요한 조건에 관하여 지수(indexes)로서 계량화된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정책의 차원에서는 '정책의 형성, 집행, 분석평가를 위한 경제, 사회조건의 변화에 관한 통계 및 측정자료'로 볼 수 있음.
- 성과측정치(performance measures)와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로도 지표를 구분할 수 있음.
 - 성과측정치는 산출과 성과의 변화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측정이 용이하여 성과를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성과지표는 활동 또는 산출과 성과간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측정이 어렵고 성과가 간접적이고 불명확한 경우에 적용됨.
- OECD는 사회현상의 광범위한 측정을 통해 성과측정치와 성과지표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지표체계 구성

- 지표체계는 효율성 개념을 토대로 한 객관적 지표와 대응성 개념을 반영한 주관적 지표로 구성됨.
- 체계분석 과정은 '환경과 투입(environment and inputs), 과정(conversion process), 산출과 환경(outputs and environment)'으로 구성됨.
 - 환경과 투입요소에는 정부투입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전문인력 현황, 보건 및 복지시설·기관 현황, 복지대상자 현황, 자원봉사자 현황, 주민참여 열망성이 포함됨.
 - 과정요소에는 비용편익비, 효율성, 기대성이 포함됨.
 - 산출요소에는 사회안전망 완비, 최저생활보장, 보편적 프로그램 확충, 소득재

분배 효과, 만족도 및 대응성이 포함됨.

□ 사회복지정책 평가지표 체계의 신뢰성과 타당성

- 사회복지정책 평가지표 체계는 연구자의 주관성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유의해야 함.
 - 객관적 지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신뢰성을 구축함.
 - 전문가 델파이를 통하여 평가 지표체계의 타당성을 추구함.
 - 관리·운영지표, 사회복지제도의 하위 구성요소들 간이나 사회복지제도 전체와 하위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통합지표를 형성함.

제2절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

1.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의 연혁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1951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성과개념이 도입되고 있음.
 -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 사전통제 중심에서 경영평가 중심의 사후 성과 관리체계로 전환함.
-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가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지향하면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미국은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Government Performance Result Act)'을 기초로 정책이나 기관이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outcome)에 초점을 맞춘 성과관리 제도를 실시함.
 - 영국은 대처정부 이후 성과측정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고 1998년 종합지출점검(Comprehensive Spending Review)과 행정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작성을 의무화함.
 - 종합지출점검은 각 부처의 목적과 목표체계 검토, 이 목표체계를 위한 지출계획의 효과성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 행정서비스협약은 부처별 임무 및 전략

목표,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었음.

- 프랑스는 2000년 신재정구축(Nouvelle Constitution Financière) 하에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지향함.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기획예산처는 성과주의예산제도, 중앙인사위원회는 성과급 보수제도와 직무성과관리제도, 행정자치부는 목표관리제(Management By Objectives) 등을 실시함.
 - 참여정부는 혁신을 모토로 자율·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공공서비스 품질제고, 세계일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혁신관리 기본계획(2005)’을 제정·운영함.
- 2006년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2001)’을 수정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한 후 본격적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장기계획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16개 정부 부처 외에 처, 청,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포함됨.
- 따라서 현재 성과관리 평가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부, 처, 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행정제도로서 확립되어 가고 있음.

2. 성과관리 평가 이론

- 성과관리 평가의 개념
 - 성과관리는 일반적으로 목표(goal)와 결과(result) 및 자원(resources)을 연계하여 제한된 자원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함.

-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적합성, 목표의 특성 파악 등이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짐.
- 정부부처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는 세계 각국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전략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됨.
-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에 결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공부문의 효과성과 대응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함.
 - 행정공무원과 실무자에게 중요목표에 대한 달성과 결과중심의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성과측정(performance-measurement)과 평가(evaluation)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이후 BSC(Balanced Scorecard)와 고객만족지수(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어떠한 요소를 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피드백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통합고객만족도 평가(ICSM, Integrative Customer Satisfaction Method) 관점을 적용하여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수용하도록 함.

□ 성과관리 평가 이론

- 전통적 성과관리 평가 방법은 PPBS, PBS, ZBB 등이 대표적이며, 원가, 수익 등과 같은 재무적 정보를 사용하므로 과거의 활동 결과 분석에 유리함.
 - 그러나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일관된 행동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성과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BSC는 전통적 성과관리 방법인 재무적 관점과 이를 보완하는 미래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성과동인임.
 -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세 가지 비재무적 측정지표로 구성됨.

3. 성과관리 평가의 내용

□ 성과관리 평가의 목적

- 성과평가 핵심 기준, 성과관리 설계 방법, 성과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인사 및 예산과의 연계방법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됨.
- 정부부처의 성과관리는 목적 및 가치적 차원에서 정부부처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로서 기능할 때 의미가 있음.

□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분류방법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시스템은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함.
 - BSC식 모형은 사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현재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중앙부처·청이 이 모형을 원용하고 있음.
 - Logic 모형은 results, inputs, throughputs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이 있으며, 특히 inputs(예산)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모형임.
 - 혼합 모형은 위 두 가지 또는 다른 기법(예: 6 시그마) 등을 통합하고 변형한 모형임.

□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분석의 단위

- 업무성과 평가는 정책(policy)보다 사업(program)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사업은 어떠한 업무가 독립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개념임.
 - 따라서 한 사업의 총괄적인 책임은 관리자(예: 과장 및 팀장 이상) 1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성과 평가는 기능적 혹은 직무분석적 평가방법, 전략적 업무 위주 평가방법, 능력 혹은 역량 분야별 평가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분석의 단위는 범부처 통합관리 차원에서 시스템 간의 분석단위를 일치시키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들을 연계할 수 있는 기본 토대

를 갖추어야 함.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성과관리 및 정부부처 업무평가와 관련한 평가항목은 분석의 단위, 평가대상,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됨.
 - 사업에 초점을 둔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처의 성과관리는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와 정부업무평가제도로써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사업중심 성과관리제도)를 원용함.
 - PART는 목적·설계, 전략적 기획, 관리, 성과와 책임성의 4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개별부처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의 평가항목 및 지표는 ‘사업관리적 접근방법(범부처 통합관리적 접근방법)’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공통으로 하고, 개별부처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처 나뉘대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평가주체

- 사업 수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성 평가(formative evaluation)에서 바람직한 평가주체는 내부평가자임.
 - 그러나 외부평가단의 평가가 보다 객관적일 수 있음.

□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평가 결과는 인센티브 차등지급, 포상금, 호봉승급, 그리고 연봉책정 등으로 나타남.

4. 성과관리 평가들

□ 우리나라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들은 성과관리과정에 대한 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로 구분됨.

- 성과관리과정은 성과관리 측정의 동기, 평가유형과 분야, 측정수준, 성과관리

측정과정, 결과의 활용, 보고, 문제점 등이 포함됨.

- 고객만족도는 정부부처 지표와 부처 내 실국 지표가 포함됨.

제 3 장 평가대상 사업 및 평가틀

제1절 평가대상 사업

□ 최근 추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 참여복지계획의 약 절반을 평가하고, 2008년도 평가에서 나머지 절반을 평가함.

- 전체 21개 분야의 50개 사업이 평가대상임.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등 4개 분야 6개 사업
-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자활지원 등 3개 분야 3개 사업
-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아동복지 등 4개 분야 10개 사업
-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8개 사업
- 기타 관련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정보격차 해소, 근로자복지정책 추진,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보육),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 교육기회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등 6개 분야 23개 사업

제2절 평가틀

1. 평가의 기본틀과 평가배점

□ 평가틀은 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달성도의 단계로 구분함.

- 계획의 적절성에는 계획수립의 적절성과 성과계획의 적정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됨.

- 사업의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계획의 적절성은 검토만 하고 평가점수에는 미반영함.
- 집행의 효율성은 시행과정의 효율성과 시행과정의 적절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됨.
- 성과달성도에는 최종점검 자체평가와 각 사업별 목표 달성도가 평가항목으로 포함됨.

□ 평가점수는 집행의 효율성 50점, 성과달성도 단계 50점으로 총 100점임.

□ 총 8개의 평가요소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되,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아직 자료가 산출되지 않아 자료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간점수를 부여함.

2. 평가지표 및 매뉴얼

□ 평가지표

- 집행이 효율성 단계와 성과달성도 단계는 모두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함.
- 단, 성과달성도 단계에서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로 개별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

□ 평가매뉴얼

- 8개의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측정기준 및 배점은 각기 다르게 적용되나 7개의 공통지표는 모두 10점 만점이 적용되며, 목표달성도의 지표는 30점 만점이 적용됨.

제 4 장 2006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1절 사회복지행정의 추진실적 평가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 과제명: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분야는 48점, 성과 달성도 분야는 41점임.
-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의 추진일정과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됨.
-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이 2005년에 추진됨에 따라 외부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충원”은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계획추진의 장애요인이 됨.
-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 만족도의 변화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전달체계 개편 정책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결론은 성급함.

□ 과제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1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분야는 48점, 성과 달성도 분야는 33점임.
- 중앙정부의 직접사업이 아닌 시·군·구의 민관이 자발성을 갖고 협의체를 운영토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은 이를 위한 기본 운영체계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시·군·구가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며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불균형 등으로 운영취지에 적합한 사업수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상당한 시간·노력·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단위 민·관 협의구조 정착의 중요한 기반으로 제안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실제 협의체 구조를 원활히 작동하게 할 세부사업의 활성화가 지속되어야 함.

2.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 과제명: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1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분야는 48점, 성과 달성도 분야는 33점임.
-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중복운영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제도 발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정책 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관리의 주체가 변화하였으므로 당초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근거는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과제명: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2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3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39점임.
- 집행의 효율성 측면은 대부분 원활히 이루어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의 효율성과 인지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성과달성도 측면에서 자체평가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조사의 보완도 필요함.

4.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 과제명: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6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6점임.
- 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과제를 진행하였으나, 자원봉사

육성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자원봉사 관련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원봉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달성도에 있어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80% 미만을 밑돌고 있어서 국민의 만족도 수준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함.
- 전반적으로 대국민 만족도 수준 제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과제명: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4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6점임.
- 집행상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성과달성도에 있어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파악, 사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홍보, 식품의 질과 양 및 신선도에 주력하여 국민만족도 제고를 향상시켜야 함.

제2절 기초생활보장의 추진실적 평가

1. 기초생활보장

□ 과제명: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6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39점임.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각 부처간의 업무 협조, 예산의 사전 확보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조 등은 매우 잘 이루어져 정책집행의 효율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자체평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수급자)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일정부분 사각지

대가 존재하고 있어 성과달성도 단계는 다소 미흡함.

- 지속적인 사각지대 축소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국민 및 수급자들의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2. 기초의료보장

□ 과제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3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6점임.
- 당초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
- 사업대상자에게 정책 변화를 개인별로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를 조사할 경우 사업내용을 고려할 때 불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3. 자활지원

□ 과제명: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4점임.
- 자활사업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선참여 후소득과약을 실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 근로능력 판정 매뉴얼 개발을 새로운 사업지침에 반영하여 참여자의 근로 능력 및 수준에 맞는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배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진과정에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함.

- 향후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 체계를 확립하며, '(가칭)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법' 제정을 통하여 자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추진실적 평가

1. 노인복지서비스

□ 과제명: 소득보장 체계 구축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5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50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5점임.
-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로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사각지대를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함.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로 2008년도부터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또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급여수준 향상이 기대되어 저소득층 노인들의 보다 윤택한 삶에 기여할 것임.

□ 과제명: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6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6점임.
-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제공자의 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도관련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함.
- 재가서비스시설의 경우 상당한 미충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복합이용,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인프라확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간병인 또는 가정부정도의 단순기술직이 아닌 전문기술을 습득한 인력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양성이 추진되어야 함.

2. 장애인복지서비스

□ 과제명: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3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27점임.
-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재확인됨.
-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공공부조형 소득보장제도의 지급 대상 및 수준 확대, 장애연금제도를 연금수급요건을 완화 등 현재의 장애 관련 소득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활사업의 전개 및 일자리창출사업 강화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계층의 탈빈곤을 유도해야 함.

□ 과제명: 의료보장 확대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71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1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30점임.
- 현재의 낮은 재활병상 충족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센터 확충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함.
-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사업에서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함.

□ 과제명: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1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1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0점임.
-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의 확충,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확대는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됨.
- 지금보다 나은 수준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해 최중증의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장애인생활시설, 그리고 지역

사회중심재활사업 확대 및 장애인복지관의 지속적인 설치가 필요함.

-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기관들의 협조 및 서비스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과제명: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38점임.
-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100%로 제고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야 함.
- 편의시설의 질적인 측면, 즉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가정복지서비스

□ 과제명: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5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7점임.
-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한 사업추진, 분야별 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방송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노력 등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중간점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를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제명: 가정관련 교육지원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8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1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7점임.
- 가정관련 교육지원에 있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지속적인 홍보, 정기적인 사업평가, 그리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를 통해 사업의 인지도와 효율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아동복지서비스

□ 과제명: 아동권리의 증진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6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0점임.
- 아동권리의 증진은 전체 아동복지 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합층적 정책방향을 내포하고 있어 개별 단위사업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홍보, 다양한 사업주체의 발굴 노력,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책 활동의 전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 추진하여 그 성과를 실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성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다소 미진하므로, 향후 보다 강력한 정책기제의 발굴과 추진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과제명: 국내입양 활성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2점임.
- 강한 혈연의식으로 인한 비밀입양, 고아수출국의 오명 등의 사회적 상황에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국내입양 활성화사업의 정책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투입을 통한 제도적 기반조성과 국내입양 문화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입양 이후의 사후적 대처 및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제4절 사회보험의 추진실적 평가

1. 국민연금

□ 과제명: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1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3점임.
-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는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소득 신고가 성실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음.
- 가입기간인정제도 도입과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으로의 전환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며, 가입자의 가입기간 확대에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임.

□ 과제명: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4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50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4점임.
- 연금수급 지연시 할증연금 도입, 조기 수급시 감액폭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에 가급적 오래 머물도록 함으로써 생애소득(life-cycle income)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 논란이 되어온 유족연금의 미지급문제, 남녀간 성차별문제 등을 해결하여 연금 급여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틀을 갖추었음.
- 장애연금의 지급개시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장애로 인한 소득중단 또는 감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2. 건강보험

□ 과제명: 급여(보장성 강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7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1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6점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보장성 효과에 대한 자체평가가 미흡하며, 특히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명: 재정(재정건실화, 부담 형평성 확보)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39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4점임.
- 보험재정 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이나 재원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3. 고용보험

□ 과제명: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2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1점임.
- 제도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정과 개선, 그리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건과 지원수준의 상향조정은 시장 및 기업 상황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수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됨.
- 기금자원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간 적정 배분 그리고 배당과 집행의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는 아직 객관적인 기준이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노동부는 향후 고용안정 과제들 중 유사·중복 프로그램들을 큰 틀의 정책목표와 목표 집단에 따라서 재분류·단순화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과제명: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6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39점임.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원래 의도대로 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특정 기관에만 집중되어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서비스 공급자위주로 편향되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가 시행되어야 함.
-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 사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부사업은 계속하되 자율적인 직업훈련비용 대부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사업의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사업평가 자료DB의 구축, 체계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산재보험

□ 과제명: 산재보험 수혜 확대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8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50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38점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하여 관계부처에서는 노·사들 관계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 2천만원 미만의 면허건설공사까지는 산재보험적용이 되도록 하였으나 무면허 건설공사에까지 산재보험적용이 확대되는 방안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 업무상질환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단체의 이의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과학적인 산업의학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파단의 과학성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 과제명: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7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50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37점임.
- 산재보험의 업종을 산업의 발전에 따른 개별업종의 성장, 쇠퇴에 부응하여 매년 업종 통폐합, 신규업종 별도분리 등의 재분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법정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하여 수지차의 발생을 계획하고 목표수리차액을 산재보험요율 산정시 반영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장요양관리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아직까지 높지 않으므로 보완 및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제5절 참여복지 관련 복지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1.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 과제명: 최저소득층 지원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1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6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5점임.
-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축소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국민과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노력은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성과달성도의 측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주거복지와 복지정책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대상자선정만을 중심으로 공급실적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취약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복지서비스 연계 즉,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

2. 정보격차 해소

□ 과제명: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3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5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8점임.
- 다른 부처와 자문단에 의해 설정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의 일환으로 그 목표와 취지에 맞게 비교적 적정하게 진행됨.
- 과제 수행에 있어 관계 부처와 사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비용 절감과 수혜자 중복을 예방한 실적은 향후에도 권장할만한 사항임.
- 수혜자 의견수렴과 홍보 사업은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일반 국민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본 과제의 인지도를 파악하는 데는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 과제명: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3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5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8점임.
- 다른 부처와 자문단에 의해 설정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의 일환으로 그 목표와 취지에 맞게 비교적 적정하게 진행됨.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정보화교육실정에 맞춘 11종의 계층별 과정의 공동 개발·보급을 통해 통합적인 부처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기 개발한 교육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관계 부처와 사업체들과의 적극적 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됨.
-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계층들의 요구 변화를 보다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 콘텐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 근로자복지정책 추진

□ 과제명: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7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9점임.
-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우수하나, 신청인원대비 선정율과 금액대비 선정율이 모두 60.0% 수준으로, 보다 많은 신청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기년도에는 계획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융자대상 선정이 매월 1회로 되어있어 급하게 융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대상자선정을 월 2~3회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이 자율이 3.4%로 인하되기는 하였으나, 더 낮은 금리로의 인하가 필요함.

□ 과제명: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7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9점임.
- 저소득근로자의 민간복지시설 이용대비 지원사업의 이용지원율 상향조정으로 사업의 수요자가 늘었으며, 또한 계획된 금액이 모두 소진된 점으로 미루어 차후에는 계획인원과 계획금액의 증원·증액이 필요함.
- 보다 많은 저소득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홍보의 확대가 필요함.
- 1가구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지원비용의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용대상 시설이 저임금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숙박·체육·문화시설로 국한되어 있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의료·보육·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과제명: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4점임.

-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확대 정책으로 경찰 등 극히 예외적인 직종을 제외하고 적용직종이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 차별금지 분위기 조성에 정부부문이 기여하고 있음.
- 민간부문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범위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도 장애인의무고용이 적용되어야 함.
- 장애인 창업이 매년 100여 명씩 신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업 이후 오랫동안 계속하여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효과적인,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함.

4.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과제명: 보육료 지원 확대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7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5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2점임.
- 국민이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활동은 정책 인지도 변화를 위해 중요하므로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 포함해야 함.
-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육료 지원수준 확대가 선결되어야 함.
- 사전 수요 추정 등 보다 정교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목표를 설정해야 함.

5.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 구현

□ 과제명: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4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6점임.
- 목표대비 실적치의 성과는 물론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타 부처 및 타

기관, 홍보매체 등을 적극 활용한 것은 부처간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문화정책 환경에서 매우 좋은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관련 사업의 자체평가의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변수까지 감안하여 일정계획 및 사업추진에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명: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4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39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5점임.
- 문화기반시설 건립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워 다른 지표와 차별성을 가진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기반시설 건립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다 세밀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문화환경 개선이 문화기반시설 건립 위주의 정책에서 효과적 운영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과제명: 생활체육 활성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8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0점임.
- 중앙정부의 역할이 전체 추진일정과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맞추어져 있으나, 향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확대와 같은 프로그램적 접근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와 정책적 여건을 정비, 개선해 나가는 제도적 접근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관련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므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학생,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어 이에 대응하는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관련 행정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과제명: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참여기회 증진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8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1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7점임.
- 취약계층 복지관광 사업의 시행이 1년의 중반이 지난 이후 시점에 시작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사업 계획을 사전에 보다 충실히 수립하여 추진일정을 준수해야 함.
- 국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많은 취약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고려된 홍보가 필요함.
- 사업목표 설정 및 목표치의 수립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인 설정이 필요함.

□ 과제명: 청소년분야(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2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6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36점임.
-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구축·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내용 및 방식을 갖춘 자체평가를 마련해야 함.
- 저소득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6.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 과제명: 특수교육강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8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3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5점임.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실적과 함께 인지도 확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발굴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과제의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과정에서 현실적 타당성을 보증하는 지표(안)개발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됨.
- 향후 특수교육전문성 함양 교사연수는 이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수과정의 효율성과 질, 교사의 참여의지, 연수과정 개설 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어야 함.

□ 과제명: 유아교육기회확대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5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4점임.
-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인지도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요청됨.
-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예상외로 낮아 이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원인파악을 통해 만족도를 향상하고,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

□ 과제명: 저소득층 교육지원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5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1점임.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인지도 제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실적 확보가 추후 요망됨.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일부 타당하게 표집, 측정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하여 사업성과의 만족도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과제명: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7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4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3점임.

- 대학 장애학생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대학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고, 국고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인지도 제고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요청됨.
-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실적보고서에 같이 취합되어 보고되는 것이 바람직함.

7.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 부적응 예방

□ 과제명: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39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39점임.
- 핵심인력에 대한 지도나 관리부문은 훌륭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상담교사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실적보고가 요청됨.
- 학교상담운영체제 혁신강화사업의 대국민 및 이해당사자 홍보 전략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문상담교사 및 순회교사 등에 대한 평가,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적시에 확보되어야 함.

□ 과제명: 귀국학생 교육지원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33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5점임.
- 범정부적차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 유학 중 재귀국하는 학생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방안 수립도 요청됨.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전략을 갖추어 정책과제를 널리 알리고 인지

도 제고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8.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 과제명: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확대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4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5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9점임.
- 사업의 성격상 홍보가 어렵다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 및 학부모 대상 사업의 인지도 파악은 필요하며, 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보해야 함.
- 사업 전체의 성과를 종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완료하여 이를 가급적 조속히 적용,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과제명: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5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7점임.
-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일부 소과제의 경우에는 중심부서가 전체 사업들을 평가지표에 따라 일관되게 실적들을 기술하여 보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 과제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 관련 실적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9.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과제명: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79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8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31점임.
- 외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넓히되 정책모니터링 등 내적 점검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 만족도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 정책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와 성과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10.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복지정책 추진체계 구축

□ 과제명: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구축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94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45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49점임.
- 인지도 제고 지표에 대한 계량적이고 객관화된 데이터 확보가 요청됨.
-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객관화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과제명: 민간의 참여활성화

-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7점으로 집행의 효율성 단계는 50점, 성과 달성도 단계는 37점임.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부서 차원의 현황·실태에 대한 파악이 요구됨.
-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지는 본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을 위한 정책계획이 필요함.

제 5 장 평가결과의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논의

1. 분과·분야별 평가결과

□ 사회복지행정분과는 85.3점으로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분야 93.0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분야 85.0점,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분야 82.0점, 사회복지 인력 운용제도 정비 분야 81.0점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분과는 88.7점으로 자활지원 분야 92.0점, 기초의료보장 분야 89.0점,

기초생활보장 분야 85.0점으로 나타남.

- ☐ 사회복지서비스분과는 87.5점으로 노인복지서비스 분야 93.5점, 가정복지서비스 분야 91.5점, 아동복지서비스 분야 88.0점,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 77.0점으로 나타남.
- ☐ 사회보험분과는 87.3점으로 국민연금 분야 92.5점, 산재보험 분야 87.5점, 건강보험 분야 85.0점, 고용보험 분야 84.0점으로 나타남.
- ☐ 관련복지정책분과는 90.1점으로 근로자복지정책 분야 95.3점, 정보격차해소 분야 93.0점,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분야 91.0점,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 분야 87.6점,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보육) 분야 87.0점, 교육기회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분야 86.5점으로 나타남.

2. 과제별 평가결과

- ☐ 사회복지행정분과의 과제별 평가결과
 - －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94점,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가 92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89점,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82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81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81점임.
- ☐ 기초생활보장분과의 과제별 평가결과
 - －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92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가 89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85점임.
- ☐ 사회복지서비스분과의 과제별 평가결과
 - － 소득보장체계 구축 95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95점,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92점, 국내입양활성화 90점, 가정관련 교육지원 88점,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와 아동권리의 증진 86점,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81점, 의료보장 확대 71점,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70점임.

□ 사회보험분과의 과제별 평가결과

-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94점,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91점, 산재보험 수혜 확대 88점, 급여보장성 강화와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이 87점,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85점, 재정건실화, 부담형평성 확보와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83점임.

□ 관련 복지정책의 과제별 평가결과

-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와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97점,
-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구축,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확대,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가 94점,
-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과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가 93점,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장애인고용의 활성화가 92점, 최저소득층 지원 91점, 유아교육 기회확대 89점,
- 생활체육 활성화,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참여기회 증진, 특수교육 강화가 88점,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보육료 지원, 민간의 참여활성화가 87점, 저소득층 교육지원 86점,
- 청소년분야(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과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84점,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 79점, 귀국학생 교육지원과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이 78점임.

제2절 정책제언

1. 사회복지행정의 정책제언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 과제명: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운영
 - 지자체 조직과 인력관련 개편방안의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업무수행 방안의 지역특성에 따른 모델, 가이드라인 등의 제시가 지

속되어야 함.

-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방안 및 복지직과 행정직의 업무분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안제시가 요청됨.

－ 과제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제도화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례 확산을 위한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 과제명: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 전문성을 함양한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실습기관 및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기관의 인증제도 적용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하나의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과제명: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 사회복지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관리기준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시설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사회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형평성이 있는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시설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욕구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설 감독 및 지원에 활용해야 함.

□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 과제명: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

- 자원봉사에 사후관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나 지역사회 영향력 등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의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과제명: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신선도와 맛과 양 등을 보증하고 이용자가 안전하

게 음식을 기탁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주력해야 함.

2. 기초생활보장의 정책제언

□ 기초생활보장

－ 과제명: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단계적인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폐지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인 수요와 대안을 도출해야 함.

□ 기초의료보장

－ 과제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병의원에 대한 관리·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의료급여 관리사를 사례관리 책임자로 활용해야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책임자(case manager)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자활지원

－ 과제명: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법적 근거에 따라 근로빈곤층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되어야 함.
-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기초로 수행되어야 함.
-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급여에 관한 규정, 전달체계인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보장기관별 성과평가, 정책수혜자인 대국민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법제화하고, 객관적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제언

□ 노인복지서비스

－ 과제명: 소득보장체계 구축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와 급여수준이 점차 확대에 대비한 효율적 재원 마련 및 자치단체간 재정분담 문제 등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재원조달에 있어 연금급여의 사각지대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함.

－ 과제명: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 현재 산재되어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을 비롯하여 각종 노인복지서비스관련 제도를 재정비하여 필요이상의 급여서비스수요를 억제해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적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함.
- 재가서비스기관의 확보, 친구나 이웃 등 비공식자원의 활용방안과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급여체계의 개선 재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복지서비스

－ 과제명: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 단계적으로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100% 보전하는 수준인 16만원까지 인상되어야 함.
-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의학적 손상 중심의 연금수급요건을 개편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함.
- 가입 이전의 장애에 대해서 일부 수급권을 인정하여 장애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활사업의 전개 및 일자리창출사업 강화 등을 통해 기초보장수급계층의 탈빈곤을 유도해야 함.
- 장기적으로 사회수당 혹은 사회부조방식의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을 적극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제명: 의료보장 확대

-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센터 확충 계획을 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재활병상 충족율을 향상시켜야 함.
- 중증 장애인의 중장기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전문병원’ 체계를 도입하고 재활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함.
-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사업에서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함.

－ 과제명: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 장애인의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시설의 공급량을 확충해야 함.
- 장애인 생활시설(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지속적인 설치,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의 요양시설 입소 요건을 개편, 장애인복지관의 신규 설치를 시행해야 함.
- 지역사회기관간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과제명: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 편의증진법 등에 의무 설치토록 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의 편의에 맞게 100% 설치되어야 함.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 수준으로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2008년까지 도시철도 역사 내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를 완료해야 함.

다. 가정 및 아동복지서비스

－ 과제명: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사업 계획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처우수준을 개선해야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전문인력을 모집·교육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

- 외국의 선진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함.

－ 과제명: 가정관련 교육지원

- 신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사후평가 등을 통해 가정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
-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문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 가족 내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과제명: 아동권리의 증진

- 아동권리에 대한 보다 전략적 홍보와 교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함.
-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아동권리의 옹호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권리 증진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과제명: 국내입양 활성화

- 아동이 출생한 원가정(family of origin)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양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
- 입양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정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4. 사회보험의 정책제언

□ 국민연금

- 과제명: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 기업연금제도인 퇴직연금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야 하고, 퇴직금제도 비적용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를 위한 '2층 연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개인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비되어야 함.
- 과제명: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기간 인정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가급급여의 현실화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건강보험

- 과제명: 급여(보장성 강화)
 - 무한정의 보장성 강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에 대한 철학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과제명: 재정(재정건실화, 부담형평성 확보)
 -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보험 가입자에 대한 징수율이 향상되어야 하므로 건강보험공단의 책임경영제 도입이 고려되어야 함.
 -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당청구가 확인된 병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고용보험

- 과제명: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 고용취약계층별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분류 및 추진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의 취업과 고용안정사업, 중·고령자의 정년연장과 고용안정에 대해 큰

들의 정책디자인과 장기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과평가와 적절한 환류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과제명: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 훈련취약계층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인센티브제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대기업 근로자 중심의 재직자 훈련비용 지원제도 위주의 사업은 지양되어야 함.
- 실업자, 신규 미취업자, 영세 지역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 실시를 통해 취업능력향상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사업평가 자료DB의 구축, 체계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산재보험

－ 과제명: 산재보험 수혜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산재보험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무면허 건설공사장에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과제명: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 출퇴근 중에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5. 참여복지 관련 복지정책의 정책제언

□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 과제명: 최저소득층 지원

- 저소득층이 소득 외에도 가구원수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복지정책이 보완되어야 함.
- 국민임대주택의 재정안정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요구됨.
- 다양한 명칭의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를 통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입주 자격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임대주택 내 사회적 혼합을 달성하고, 공공임대주택사이의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정보격차 해소

－ 과제명: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 보조기기보급을 위해 지속성 있는 전달체계 구축에 예산과 인적·물적 조직이 확보되어야 함.
- 보조기기보급을 위한 전달체계는 지역별로 자격 있는 보조공학 전문가(재활공학 전공자 또는 자격 있는 보조공학사)를 배치하여 보조기기보급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함.
-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 지원 예산과 품목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보조기기의 상품화와 국산화를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함.

－ 과제명: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 소외계층이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실행이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근로자복지정책 추진

- 과제명: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안정자금대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대부지원 선정율을 확대해야 함.
- 용자대상 선정 횟수를 융통성 있게 월 2~3회 수준으로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과제명: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 근로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민간복지시설 이용대상 시설을 의료·보육·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자가 다양한 생계 및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명: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강화된 장애인고용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이 노동시장으로 통합·고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과제명: 보육료 지원 확대

-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부모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으로 높여가야 함.
- 정교한 자료를 근거로 주변 환경의 변동요인을 잘 파악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의 부족이나 미사용 예산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유산 분야

- 특정 사업 목표 아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우, 전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함.
- 문화시설이나 생활체육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는 업무의 시행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복지관광 프로그램 등의 수혜대상 범위 및 규모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산출을 통하여,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분야

- 공부방 이용 후 사후관리 및 평가내용을 점검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본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식과 평가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평가의 형평성, 객관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부방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담당부처가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 － 각 교육소외계층은 정책영역에서는 뚜렷이 범주화되고 구분될 수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중복적인 대상자일 수 있으므로 사업별·부서별 정책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 유아에서 아동(초등), 아동에서 청소년(중등), 청소년에서 청년(고등)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연계성과 정책성과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구안할 필요가 있음.
- － 전통적인 교육소외계층 외에 새로이 대두하는 새터민·외국인노동자·결혼이주여성·이혼가정 자녀 등 신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발굴과 대처가 요구됨.

- 보다 완전한 평가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서별로 가시적인 국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와 실증적인 정책성과 및 결과에 대한 확보와 관리가 요구됨.
-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참여복지5개년계획평가를 EBP(Evidence-based Policy) 중심의 평가체제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사회보장발전계획 중 제2차 계획(2004~2008년)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 수립되었으며, 참여정부의 복지이념을 구현할 새로운 복지정책 구상을 담아 「참여복지5개년계획」이라 명명하였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의 구축, 문화서비스 확대 등 광의의 복지영역을 전제로 포괄적인 정책계획을 담고 있다.

정책평가는 계획의 내용, 집행, 집행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정이다. 정책평가의 세부적인 목표는 ①정부의 책임성 강화, ②유인책, 보상, 제재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③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 ④예산결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⑤정책결정을 위한 실증적 자료제공, ⑥정부프로그램과 정책의 향상, ⑦선출된 관료와 서비스 관리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⑧성과평가지표를 예산·재정 예측모형과 연계시켜 다년간 수행될 서비스를 계획 또는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을 들고 있음이 보편적이다.

정책평가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작업으로서 정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여 2005년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에서는 계획의 수립 뿐 아니라 정기적인 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는 복지영역의 종합적인 정책평가로서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복지정책의 평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2006년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해당사업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평가대상 사업 선정

- 평가단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 2006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대상으로 선정

나. 참여복지 5개년계획 평가 틀 마련

- 정책 평가, 복지정책 평가의 특성 등에 관한 이론 검토를 통하여 평가 틀 마련
- 평가는 계획, 집행, 성과로 구분하며, 각 평가항목은 3~5개로 세분
 - 평가요소의 척도는 계량화를 원칙으로 하여 정량지표로 구성함

다. 참여복지계획 2006년도 추진현황 평가

- 정부의 정책 환경의 변화, 정책 수행의 과정, 정책으로 인한 결과 및 영향 등에 대한 양적, 질적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한 정책적 분석
- 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그 함의와 한계 제시
 - 계획의 미집행, 계획 추진상의 오류 등을 밝히고 그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계획의 수정, 또는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참여복지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정책적 의미 규명

라. 참여복지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의 제안

- 참여복지가 당초의 의미를 살리고 복지발전을 위하여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 모색
- 계획의 수정과 새로운 계획의 보강 등으로 참여복지계획이 향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국내외 정책 평가 이론 및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 관련 문건을 검토함.

나. 관련 2차 자료의 분석

-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환경요인의 변화 또는 정책집행 관련 2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

다.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참여복지계획 수립 및 집행 관련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평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함.
 - 학계전문가, 정책전문가 등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과정의 전반적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 수집된 자료의 해석 등 전반적인 평가 내용 등에 대한 자문 청취

3. 사업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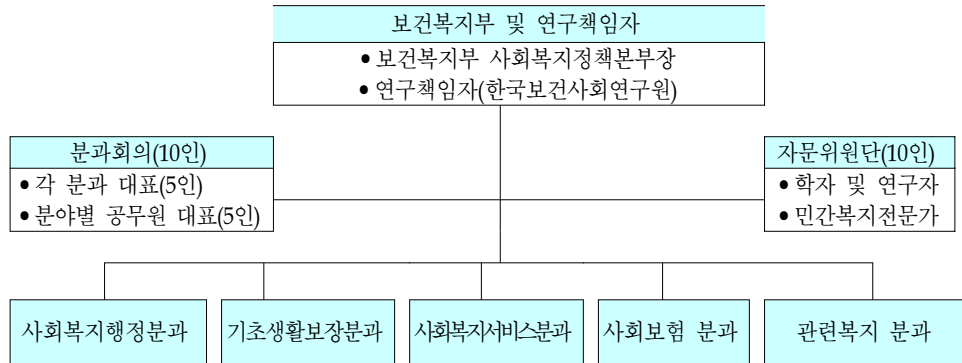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및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를 총괄함.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평가단 구성 및 평가를 구축, 그리고 정책 평가 과정 및 분석 등 본 연구를 추진 및 총괄함.

□ 총 5개 분과를 구성함으로써 참여복지평가를 위한 연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함.

- 사회복지행정분과, 기초생활보장분과, 사회복지서비스분과, 사회보험분과, 관련 복지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인, 외부학자 1인, 관계 공무원 5인 이내, 민간복지기관 2인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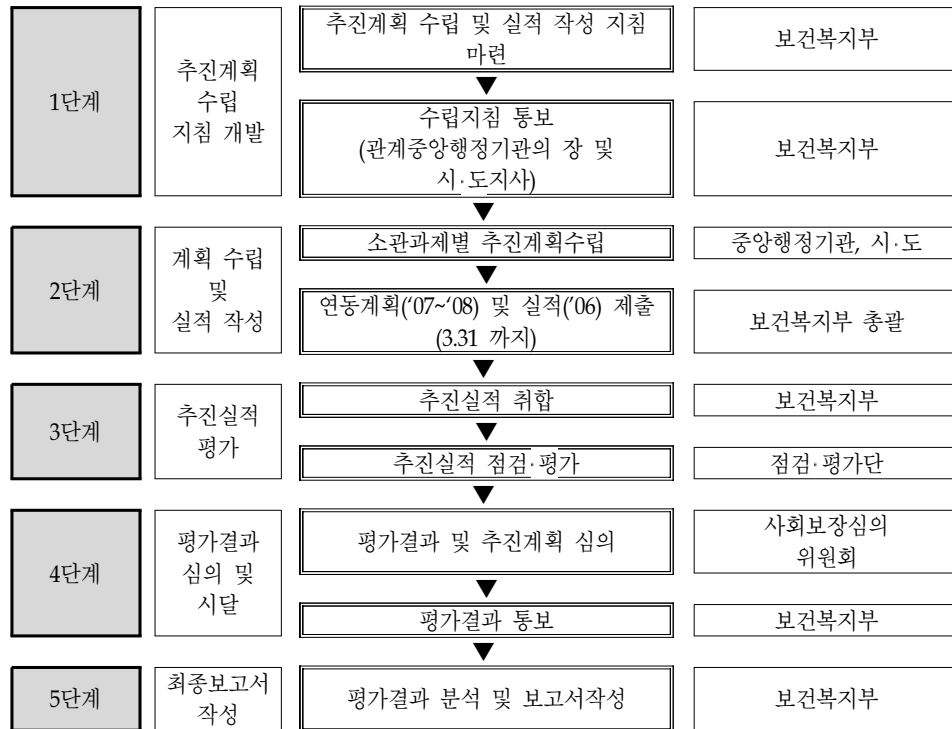
[그림 1-2-1] 사업수행체계



□ 사업수행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는 중앙 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 평가지침 통보
-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는 전년도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평가 추진실적 및 2007년 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에는 추진실적, 자체평가결과, 향후과제 등 포함
-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평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평가단에 송부
- 평가단은 각 분과별로 평가 실시
 - 평가보고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
 - 평가보고서에는 권고안(건의사항) 포함
-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각 시·도에 통보
- 평가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 2006년 참여복지계획의 평가결과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정책제언 포함)

[그림 1-2-2] 사업추진 흐름도



제 2 장 정책평가 이론

제 1 절 정책평가 유형 및 평가지표의 개발

1.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는 프로그램 평가, 성과점검 및 검토 그리고 성과감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전술한 순으로 정책평가가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은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평가론

Chelimsky(1985)에 의하면, 프로그램 평가는 응용 사회과학의 확산에 따른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작업과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PPBS 움직임에 의해 진행된다. 전자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평가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과 예산을 연계함을 의미한다. 점차적으로 평가연구에 대한 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구분하기 어려워졌으며 양자가 혼합되었다.

1960년대 후반 PPBS가 실패하여 정책평가에서 과학적 합리성의 성취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응용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추진되었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역시 사회적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평가방향에 수정이 가해졌다.

나. 성과점검 및 검토

성과점검 및 검토는 첫째, 프로그램 평가 및 합리적 모형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고 방법론적인 엄격성의 완화가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둘째, 평가 대상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정부활동 전반으로, 평가의 관심은 효과성으로부터 효율성과 집행과정으로 확

대됨으로써 평가방법으로서 점검(monitoring)을 강조하게 되었다.

점검은 당시 많은 선진국 정부의 목표였던 비용통제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집행과정에서의 개선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빠르게 도입되었다. 프로그램 평가의 경험 역시 적절한 자료의 확보가 불가결의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점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 결과 각국의 감사 기관들은 전통적 감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감사의 범위와 감사기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정부 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프로그램평가보다는 정책평가라는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을 촉진·확산시켰다.

다. 성과감사

전통적으로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성된다. 그러나 Gray, Jenkins, & Segsworth(1993)는 예산, 감사 및 평가의 관계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를 수행하면서, “감사는 전통적인 범위를 넘어서 정부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실적,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넓은 정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통칭하여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라 부른다.

전통적인 감사는 세출이나 행위가 정해진 권한 내에서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책무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성과감사는 세출이나 행위가 관리적 측면에서 적절하였는가의 책무성도 묻는다. 따라서 감사관들은 그들이 효율성을 다룰 때는 경영자문관처럼 기능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다룰 때는 정책분석가나 정책평가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Gray, Jenkins & Segsworth, 1993).

이렇게 볼 때, 대체로 오늘날 평가의 유형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을 측정함과 동시에 측정되고 산정된 결과를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인과 분석 및 환류 등을 포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위의 세 가지 유형을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사용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평가지표의 개발

가. 지표의 개념

복지정책과 사업의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살펴보면, 지표의 개발과 이용이 핵심주제가 된다. 그런데 지표를 어떠한 개념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목적, 방법, 구조 및 유형의 측면에서 지표가 갖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박성복(1996)은 '지표란 사회의 중요한 조건에 관하여 지수(indexes)로서 계량화된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의 차원에서 정의를 했을 때는 '정책의 형성, 집행, 분석평가를 위한 경제, 사회조건의 변화에 관한 통계 및 측정자료'로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지표의 개념은 성과측정치(performance measures)와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로 양분되어 있다. 우선, 성과측정치는 산출과 성과의 변화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측정이 용이하여 성과를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성과지표는 활동 또는 산출과 성과간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측정이 어렵고 성과가 간접적이고 불명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가 하면 현재 지표사업을 광범위하면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OECD의 경우는 사회현상의 광범위한 측정을 통해 이 둘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다.

나. 지표체계 구성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 평가 지표체계의 구성은 <표 2-1-1>과 같다. 여기서 객관적 지표는 주로 효율성 개념을 토대로 하며, 주관적 지표는 대응성 개념을 반영한다. 그리고 체계분석의 전체 과정과 관련하여 '환경과 투입(environment and inputs), 과정(conversion process), 산출과 환경(outputs and environment)'을 중심으로 지표체계가 구성될 수 있다.

투입요인과 관련한 평가지표는 첫째,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는 국가예산, 전문인

력의 수, 보건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수, 사회복지대상자 등 사회복지 자원, 둘째, 사회복지 의식으로 사회가 사회복지에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하려 하며, 투입되는 자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해 얼마만큼의 열망을 갖는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지표는 국방, 경제 등 다른 국가사업에 비해 사회복지가 제도로써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를 보여주며, 또 사회복지의식은 사회복지에 어느 정도의 자원이 투입되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정요소는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사회복지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투입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과정요소와 관련한 정책평가 지표로는 정책분석과 관련된 대안평가 기준이 해당될 것이며, 객관적 평가지표에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용편익비(cost-benefit ratio)가 주요한 척도가 될 것이고, 주관적 지표로서는 앞에서 성과지표와 관련한 기대성(소망성)에 대한 평가기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산출요소는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이라는 측면과 집행된 결과, 그리고 사회적 영향 등을 포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평가의 과정이다. 사회복지체계에서 산출된 정책이 초래한 여러 효과와 그러한 효과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요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들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간접적 소득재분배의 효과와 최저생활보장, 사회안전망 완비, 보편적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충 등의 객관적 지표들과 함께, 대응성과 만족도가 해당된다.

〈표 2-1-1〉 정책평가지표 체계의 구성

지표 체계(system)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환경과 투입 (environment and inp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투입 사회복지재정(예산) • 사회복지전문인력 현황 • 보건 및 복지시설·기관 현황 • 복지대상자 현황 • 자원봉사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열망성
과정 (conversion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편익비 •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성(소망성)
산출과 환경 (outputs and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안전망 완비 • 최저생활보장 • 보편적 프로그램 확충 • 소득재분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 대응성

다. 사회복지정책 평가지표 체계의 신뢰성과 타당성

사회복지정책 평가지표 체계의 문제는 연구자의 주관성 측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의 출발점은 객관적 지표를 중점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객관적 지표에서 산출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주관적 지표에서 산출항목의 점수도 높게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을 통하여 나름대로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가 델파이를 통하여 평가 지표체계의 타당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델파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다양해서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려면 무엇보다도 통합지표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의 사회복지제도가 있다면 그 출발은 그 제도의 목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또 그 목표에 따른 제도운영이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제도를 평가하는 지표체계는 우선 제도의 목표를 전제하는 성과지표와 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성숙을 말해주는 관리·운영지표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사회복지제도의 하위 구성요소들 간이나 사회복지제도 전체와 하위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통합지표를 형성함으로써 정책과정에 활용하게 될 환류적 정보가 완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 2 절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

1.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의 연혁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1951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가졌고 본래 평가에 초점을 두고 출발하였으

나 점차 평가제도에 성과개념이 도입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김선명, 2006).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의 시장역량과 경제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에도 자율성을 부여하기 시작하여 1984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 사전통제중심에서 경영평가 중심의 사후 성과 관리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조직성과 평가는 대부분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한 재무제표 중심의 전통적인 성과측정 방법인 PPBS, PBS, ZBB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그 후 세계 각국이 국경 없는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하면서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당면과제로 대두되면서부터 세계 각국의 정부가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전략적 개념으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는 1990년대에 들어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의 지속적 확대, 행정에 성과주의 원칙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제기법의 적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Government Performance Result Act)’을 기초로 성과관리 제도를 본격화하였다. 이 법은 투입(input)위주의 행정관리 기본틀에서 벗어나 정책이나 기관이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outcome)를 통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방기관이 “무엇을 하는가?”로부터 “무엇을 달성하였나?”에 관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은 대처정부 이후 성과측정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고 1998년 종합지출점검(Comprehensive Spending Review)과 행정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특히 영국의 종합지출점검은 각 부처의 목적과 목표체계 검토, 이 목표체계를 위한 지출계획의 효과성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 행정서비스협약은 부처별 임무 및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2000년 신재정구축(Nouvelle Constitution Financière)하에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지향하였는데, 예산을 150개의 부처별 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자의 재량권 확대와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었다(윤광재, 2006).

이러한 세계적인 영향과 함께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1998)'과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심사평가지침(2000)',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2001)'이 마련되어 운영되어 왔다. 공공구분의 성과 증진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즉, 기획예산처는 성과주의예산제도, 중앙인사위원회는 성과급 보수제도와 직무성과관리제도, 행정자치부는 목표관리제(Management By Objectives) 등을 실시하였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평가, 특정과제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소속기관 평가 등이다.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전략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정도를 측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성과급 보수제도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보수를 차등화하고 직무성과관리제도는 직무책임분석 등을 통해 직무값의 상대비교, 직무등급을 설정하고 평가결과를 보수에 적용하였다. 목표관리제는 조직목표에 맞추어 개인목표를 설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과급 및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후 참여정부는 혁신을 모토로 자율·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공공서비스 품질제고, 세계일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혁신관리 기본계획(2005)'을 제정, 운영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부처의 성과평가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2006년 3월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2001)'을 수정하여 제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다.

이 법은 본격적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확보되게 성과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기관의 전략목표 등을 명백히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성과 목표 등이 포함된 성과관리전략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

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각 부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작성하고 3년마다 수정 보완해야 하며,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2006년 9월 국무총리 소속 하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장기계획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고 있어 중장기계획이 진행되는 5년간, 즉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예상되는 성과 및 전략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2항에서는 성과계획을 작성할 때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성과 결과 및 성과 계획 등이 작성되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실제 성과 실적 자료이며,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성과 목표치 자료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 실적 자료 및 성과 목표 자료는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치로 계상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계획 및 성과계획은 총 4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6개 정부 부처 외에 처, 청,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최성락·박민정, 2007).

이처럼 현재 성과관리 평가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부, 처, 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행정제도로서 확립되어 가고 있다.

2. 성과관리 평가 이론

가. 성과관리 평가의 개념

성과관리는 일반적으로 목표(goal)와 결과(result) 및 자원(resources)을 연계하여 제한된 자원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행정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찍이 Rogers(1999)는 성과관리는 첫째, 정해진 목적에 의해 진행되는 성과관리는 목적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이고, 둘째, 성과를 모니터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과 구성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되어진 책임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accountability)이며, 셋째,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조직목표의 달성여부가 양적인 형태로 표시되는 수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number)이며, 마지막으로 적절한 보상과 처벌 기제를 활용하여 조직이나 구성원들을 목표달성을 향해 매진하도록 유도하는 보상과 처벌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reward and punishment)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성과관리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 평가 등을 통하여 해당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총괄적인 관리 체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관리에서는 우선적으로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적합성 등이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목표관리제에서도 목표설정과 목표관리를 통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기저로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Milkovich & Boudreau, 1997). 즉, 성과관리, 목표관리제 등에서는 목표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목표설정과 피드백의 긍정적인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관된 연구결과는 높은 목표설정을 유도할 시, 목표에 대한 노력과 몰입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신상열·양혁승, 2005).

사실상 정부부처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는 세계 각국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전략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성과관리는 시민(고객)중심의 관리, 시장중심의 관리와 함께 행정개혁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간의 경쟁, 분권화, 정부계층의 간소화, 시민선택의 확대, 벤치마킹, 산출측정, 성과계약, 재정인센티브 부여, 민간부분의 관리기술도입 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분에 결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공부분의 효과성과 대응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공무원과 실무자에게 중요목표에 대한 달성과 결과중심의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성과측정(performance-measurement)과 평가(evaluation)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신공공관리의 조류 하에서 성과관리는 과거 행정관리에 대한 통제를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접근에 대응되는 것으로 정책집행을 비롯한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과정상의 적절성이 아닌 업무수행 결과 즉, 성과에 입각하여 행정관리를 도모하는 것이었다(박중훈, 2004).

그러나 그 후 새로운 성과관리 평가유형으로서 BSC(Balanced Scorecard)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BSC는 하버드 대학의 Kaplan과 Norton(1992)에 의해 BSC 관련 논문이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3, 1996, 2000년에 걸쳐 BSC를 적용한 조직들의 사례연구 및 운영 등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왜냐하면 BSC는 “비행기 조정실의 계기판과 유사하여 관리자에게 동시에 수많은 정보를 주고 있기”(Kaplan & Norton, 1992)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확보하는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고객의 만족도 평가와 관련하여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고객만족지수(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부처 전반에 대한 평가모델로서 특정 서비스의 만족도 측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특정 서비스의 품질특성 중 어떠한 요소를 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피드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통합고객만족도 평가의 관점에서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조방

정식모델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통합고객만족도조사(ICSM, Integrative Customer Satisfaction Method)는 기존의 고객만족도조사와 비교하여 첫째, 기업 및 제품의 특성과 고객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둘째, 어떠한 고객만족도 구성요소의 개선이 전체 고객만족도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할 것인지를 도출하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통합고객만족도조사는 기존의 행정서비스현장과 이행표준을 중심으로 한 고객만족도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BSC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한 기관에서 정성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표간의 인과관계를 재설정하고, 논리구조를 이에 맞게 재구조화한 고객만족도모형이다. 통합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①전체 만족도지표의 점수가 인과적으로 묶여 계산된 기관전체 차원의 만족도 점수, ②각 개별적인 만족도지표의 점수, ③항목별 개별 점수 등 다양한 점수가 도출될 수 있다(박석희 외, 2006).

이를 정부부처에 적용해 보면, 고객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정성지표는 정부부처지표, 정부부처 실국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정부부처지표의 경우 정부부처서비스 만족도, 정부부처청렴도, 정책만족도, 행정서비스 환경만족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체 만족도, 민간단체의 협력만족도, 성과관리 만족도, 근무환경지수가 지표에 포함될 수 있고, 정부부처 실국지표의 경우 예산편성 만족도, 행정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홈페이지 만족도 등이 지표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부처지표의 경우 부처 차원의 성과를, 실국지표의 경우 실국 차원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표의 조사주기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기가 단축될 경우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는데, 대체로 고객만족도지표의 조사주기는 연간과 반기로 구분될 수 있다.

나. 성과관리 평가 이론

일반적으로 성과관리 평가 이론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전통적인 성과측정 이론과 전략적 성과 측정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관리 평가이론으로 BSC를 들 수 있다.

1) 전통적 성과관리 평가 이론과 전략적 성과관리 평가 이론

전통적 성과관리 평가 이론은 관리회계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과지표들이 재무지표에 국한되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PBS, PBS, ZBB 등이 해당되며 경영학에서 발달한 회계기법의 공공기관 적용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과관리 평가방법은 원가, 수익 등과 같은 재무적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활동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유리하나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일관된 행동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또한 다양한 성과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 재무제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주가치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재무성과의 동인이 되는 비재무적 성과는 소홀히 하기 쉽고, 특히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중심의 성과측정은 성과지표들이 조직 전체의 목표를 향해 인과관계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전략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발생된다.

이러한 전통적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무적 측정치 외에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예측지표 즉 국민만족도, 직원만족도, 효율성, 공익기여도, 환경비용 부담률, 혁신정도 등과 같은 비재무적 측정치(조직프로세스 중심)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합당한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성과피라미드 모델(Performance Pyramid Model), 성과 프리즘 모델(Performance Prism), 서비스이익사슬(Service profit chain), BEM(Business Excellence Model), 6시그마 모형, 균형성과지표(Balanced Scorecard) 등으로 대표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전략적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이라는 범주에 포함된다(김재훈·최홍석, 2007).

이상의 전통적 성과관리 평가시스템과 전략적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의 특성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 <표 2-2-1>과 같다.

〈표 2-2-1〉 전통적 성과관리 평가시스템과 전략적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의 특성 비교

전통적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전략적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특성	내용	특성	내용
재무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지향 - 재무성과측정 - 생산전략과 불연계 -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내외부 목적 달성을 추구하므로 유동성이 낮음 	프로세스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지향 - 재무성과와 고객만족 - 생산전략과 연계 - 하나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므로 유동성이 높음
부분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절감 - 수직적·기능적 보고 	시스템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향상 - 수평적·핵심프로세스 보고
단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생산량·품질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 - 상충관계 미반영 	통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납기·시간·원가를 종합적으로 평가 - 상충관계 반영
개인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학습 - 개인적인 보상시스템 	집단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인 학습 - 그룹보상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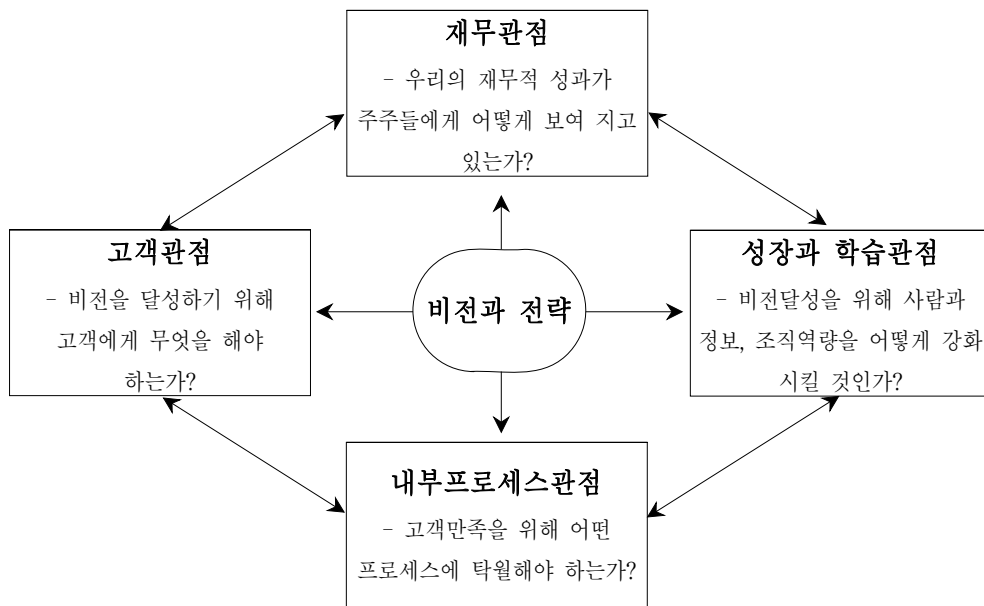
자료: Lynch and Cross(1995)

2) 공공기관 성과평가 이론으로서 BSC

BSC는 재정적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고객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 등의 균형적 결합을 통해 재무·비재무, 단기·장기, 내부·외부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balanced) 성과관리를 추구하고 있다(행정부·한국행정연구원, 2005). 이는 기존의 성과관리가 재무적 성과만을 중요시한데서 탈피하여 재무적 성과 외에 미래의 재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비재무적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윤수재 외, 2005). 즉, BSC는 과거 전통적 성과관리 방법인 재무적 관점과 이를 보완하면서 미래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성과동인으로서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세 가지 비재무적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BSC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성장과 학습 등 4개의 관점에서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을 도출하고 이러한 성공요인을 계량화된 지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산출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목표와 핵심성공요인 및 성과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략지도(strategy map)를 통해 도식적으로 표현된다(그림 2-2-1 참조).

[그림 2-2-1] BSC 전략지도



자료: 김재훈·최홍석(2007)

이러한 BSC의 장점으로 인해 현재 많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균형성과지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있는 BSC는 위의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일부를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허청의 경우, 이해관계자 관점, 재무적 책임관점, 업무수행관점, 정책관점, 학습 및 혁신관점 하에서 BSC를 운영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05).

3. 성과관리 평가의 내용

성과관리 평가의 주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과관리 평가의 목적

성과관리 평가의 목적은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됨과 동시에 성과관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성과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인사 및 예산과 어떻게 연계하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과 관련하여 우선 “성과관리의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

성과관리로 무슨 성과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는 궁극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어떤 성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성과관리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공동성·윤기웅, 2007).

첫째, 경제적 관점으로서 비용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결과 중심의 관점(결과물로서의 성과를 얼마나 산출하였는가?), 투입 중심의 관점(재정적 및 인적 자원의 절감은 얼마나 되는가?), 효율 중심의 관점(결과 대 투입은 효율적이었는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효과성은 가장 가시적인 성과라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과거 10~20여 년에 걸쳐 성과관리를 시행해 온 선진국, 특히 미국, 영국 등의 경우도 아직 종합적인 평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과관리 평가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고, 효율 중심의 비용효과성 보다는 결과 중심의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종합적인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은 아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성과관리는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의 민주성 및 정부의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강화 측면과 정부역량(government capacity)의 강화 측면 등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다.

전자는 법적 또는 기관장에 대한 책무성에서 국민 또는 고객에 대한 책무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행정의 민주성 및 대응성(responsiveness)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및 업무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회계중심(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목적 및 성과중심(사업별 예산제도)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국민 참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정부부처의 성과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가능케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정부부처의 인적, 기술적, 조직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국정관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또는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무엇을 하느냐,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부처의 성과 관리는 단순히 효율적인 차원에서보다는 목적 및 가치적 차원에서 정부부처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해주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로서 기능할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나.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분류방법

하나의 정부조직인 정부부처가 원용하는 성과관리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공동성·윤기웅, 2007).

첫째, BSC식 모형이다. 이는 사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도 최근 적용사례가 늘고 있는 접근방법이다. 현재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중앙부처·청이 이 모형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 Logic 모형이다. 이는 결과(results)뿐만 아니라 inputs, throughputs도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특히 inputs(예산)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모형이다.

셋째, 혼합 모형이다. 실제 모형은 하나의 모형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위 두 가지 또는 다른 기법(예: 6 시그마 등) 등을 통합하고 변형한 혼합모형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개별부처 성과관리시스템은 모두 혼합모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분석의 단위

성과관리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션, 비전, 전략 등 목표지향적인 전략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설계하고, 인적 및 재

정적 자원을 재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즉, 효과적인 성과관리는 전략적 사업·과제, 부서, 개인을 통합적으로 정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의 고저에 대해 누가(사업, 부서, 개인)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 인과적 추론은 쉬운 과정이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책임규명 및 성과평가의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하는가에 대한 범정부적 합의는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분석 단위(평가대상)는 재정사업이며,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분석 단위(평가대상)는 해당기관,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등이며, 직무성과계약제도의 분석 단위(평가대상)는 개인이다.

이렇게 볼 때, 성과관리 평가는 크게 사업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와 개인성과 평가로 구분된다. 업무성과 평가는 정책(policy)보다는 사업(program)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책은 관리대상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개념이다. 정책의 평가는 가치적이고, 주관적이며,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므로 사업평가와 쉽게 연계되어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은 어떠한 업무가 독립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하나의 사업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독립적인 평가가 타당한가?” 등의 “관리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업의 총괄적인 책임은 관리자(예: 과장 및 팀장 이상) 1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사업의 중요도, 예산, 정치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은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업’은 사업적 성격을 띤 업무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또한 재정사업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기획·계획 성격을 띤 업무라 할지라도 하나의 관리자에게 총괄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관리상 가능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예: 주요정책과제, 관리과제의 상당부분이 이에 속할 수 있음)에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단위과제(unit task)는 한 명의 담당자가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 업무로서 단위과제에 대한 책임은 되도록 1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단위활동(activity)은 하나의 단위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말하는데, 이는 업무수행의 과정(process) 관점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그리고 개인성과 평가방법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공동성·윤기웅, 2007).

첫째, 기능적 혹은 직무분석적 평가방법이다. 이는 조직관리적 구조에 적합하다. 한 개인이 수행한 모든 단위과제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중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지고 있는 직무 전체를 포함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개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 직위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수행한 업무 및 사업(개인의 기여도)을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평가의 주기는 개인 업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한 예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성과계약제도를 들 수 있다.

둘째, 전략적 업무 위주 평가방법이다. 이는 사업관리적 구조에 적합하다. 한 조직이 전략적으로 중요시하는 사업이나 업무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주로 사기업의 BSC식 성과관리에서 활용하는 접근방법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 접근방법은 초기에는 평가업무량이 적으나, 정권교체나 장관의 교체 등으로 인한 잦은 변경이 요구되어 장기적으로 시간낭비 및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능력 혹은 역량 분야별 평가방법이다. 이는 한 개인의 직급 및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 및 역량을 열거하고, 수행한 업무(실적)를 ‘증거’로 활용하여 (정성)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관련 상급자가 평가하되 평가의 근거(실적)를 명시하여야 하고, 상급자의 편파적 판단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의제기, 서청심사 등)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역량 개발(capacity building), 순환보직관리, 장기적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등과 긴밀히 연계되며, 또한 업무성격(기획, 지원, 집행, 연구 등)에 따른 평가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 각 개인이 수행한 직무 및 사업(기여도)이 평가분야별로 재분류된다.

그러면 어떤 단위가 적절한가? 이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관리단위로서 예산편성, 성과관리, 책임성 확보 등에 유용한 단위라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분석의 단위는 범부처에 걸친 업무를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여 그 효율성을 증대하며, 국정관리시스템과 개별부처 성과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범부처 통합관리 차원에서 시스템간의 분석단위를 일치시키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들을 연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성과관리 및 정부부처 업무평가와 관련한 평가항목은 분석의 단위, 평가대상,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첫째, 사업관리적 접근방법에 의한 평가의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PART(사업 중심의 성과관리제도: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평가항목으로 목적·설계, 전략적 기획, 관리, 성과와 책임성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처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에 초점을 둔 성과관리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둘은 미국의 PART를 원용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미국 PART를 간단히 한 것이라면,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간단히 하고 새로운 항목으로 '활용'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화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공동성·윤기웅, 2007).

첫째,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통일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업무평가의 '주요정책과제'를 현재와 같이 네 단계(계획, 집행, 결과, 활용)로 구분하는 것 보다는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및 미국의 PART와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활용'은 제외하는 것이 낫다.

셋째, 평가항목을 미국의 PART와 같이 명명하는 것이 그 뜻을 이해하는데 더 나을 것이다. 특히 '성과계획'이라는 용어 보다는 '전략적 기획'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넷째, 미국 PART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략적 기획' 평가항목의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몇 가지 평가지표들, 즉 PART의 2.2 사업의 성과목표치는 실현가능성이 있고 야심 찬 것이며, 장기적인 성과목표치와 연계되어 있는가? 2.5 관련·협조기관이 사업의 장기적 및 연차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하였는가? 2.8 전략기획상의 결점을 수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는가? 등은 첨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가지표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업의 평가지표는 성과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비용효과성은 성과관리의 핵심적인 기준(미국 PART의 평가지표 4.3)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적 접근방법에 의한 평가로서 개별부처의 특수성(기획 위주, 집행 위주, 사업 위주 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획일성 보다는 개별부처의 독자적인 접근방법이 유의미하다. 이는 개별부처의 특수성과 업무의 중복문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개별부처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의 평가항목 및 지표는 '사업관리적 접근방법(범부처 통합관리적 접근방법)'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공통으로 하고, 개별부처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처 나름대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이 좋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개별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체적으로 성과관리를 하면,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쉽게 취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경우 평가지표는 개별부처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통 평가지표와 추가평가지표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시스템간의 효율적인 연계도 가능케 하고, 부처별·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 평가주체

사업 수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성 평가(formative evaluation)에서 바람직한 평가주체는 내부평가자이다. 그러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단의 평가가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호주 등에서는 심지어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외부 기구에 의한 평가를 시행한다.

물론 내부평가자라 하더라도 각 부처로부터 차출된 직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편견의 개입이 적고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외부평가단 단독 평가 혹은 외부평가단에 내부인사가 참여하는 형태의 평가는 객관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기관 내부의 업무에 친숙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한계 때문에 평가의 효과성도 제약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가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에 대단히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의 활용은 성과평가 자체의 효과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 결과는 인센티브 차등지급, 포상금, 호봉승급, 그리고 연봉책정 등으로 나타난다.

4. 성과관리 평가틀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성과관리 평가틀은 성과관리과정에 대한 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성과관리과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및 성과관리 측정의 동기 부분을 들 수 있다. 평가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평가과정, 평가의 활용이 달라질 수 있다.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실 등 상위 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할 경우 평가과정에서 소극적일 뿐 아니라 평가결과의 활용면에서 형식적 활용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반면 자체적인 관리개선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식한 경우 평가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부처의 평가 및 성과관리의 동기가 무엇인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중앙부처 행정의 관리과정을 전략적 기획·관리 과정,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과정, 예산과정, 사업의 성공여부판단 과정, 서비스 질 및 벤치마킹, 환류단계로서 공무원의 인센티브와의 연계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평가 및 성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평가 및 성과관리가 사업종결시 일회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느냐 단기적 사업 뿐 아니라 장기적 시계를 갖는 시책에 대해 일관성 있게 평가 및 성과관리가 활용될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준다.

둘째, 평가유형, 평가분야 및 관리수준 부분을 들 수 있다. 평가유형은 그동안 정

부업무에 대해 다양한 평가유형이 도입·적용되어 왔는데 초기의 심사분석, 자체평가와 최근 성과관리, 기관역량평가, 핵심과제평가와 기타로 구분하여 다양한 평가유형 가운데 주로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정부부처의 평가분야는 업무분류기준에 따라 어떠한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평가가 미흡한지를 파악한다. 또한 평가를 위한 관리수준 면에서 평가기준이 추진완료, 미추진, 추진 등 구체적인 평가지표 없이 진도분석에 그친 사업심사분석, 사업의 단순 산출량의 파악하는 측정, 비용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률성,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파악하는 효과성 측정, 사업의 궁극적 목표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성 등이 업무분야에 따라 측정수준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평가지표의 설정과 참여자 부분을 들 수 있다. 평가 및 성과관리의 지표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표가 각 사업이나 부서의 목표와 연계되는지 여부, 평가지표설정이 일정한 합의과정을 거치는지 여부, 측정지표가 자료보다는 중요한 것을 측정하는지 여부, 장기간의 성과추적을 위해 활용하는지 여부, 각 부서 간, 프로그램 간, 타 부처와의 성과비교 여부 등에 대해서 파악한다. 또한 평가지표의 설정과정에서 참여자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평가가 일련의 정부업무과정에서 최종단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부처의 총체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가를 파악한다.

넷째, 결과의 활용정도, 활용의 실태, 문제점 부분을 들 수 있다. 평가 및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정도를 평가하게 하고, 활용이 낮은 경우 그 이유를 물을 수 있는데, 이는 평가결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결과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구체화한다. 여기에는 의사결정의 질 개선, 예산배정예의 변화,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변화,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변화, 프로그램 질의 향상, 비용절감, 관리자 책임성의 향상, 공무원의 사기 앙양, 공무원의 태도변화, 국민과의 관계개선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평가결과의 보고는 평가가 행정관리과정의 하나로 파악하느냐, 행정과 환경인 국민과의 관계개선으로 보느냐, 혹은 행정과 의회와의 관계 등과의 연계수단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또한 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어려운 점과 관련하여 성과지표

설정의 어려움, 공공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질 측정의 어려움, 성과자료 수집의 어려움, 담당자의 분석능력 부족, 담당인력의 부족, 상급자의 적극적 지원 여부 정도 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정부부처지표, 정부부처 내 실국지표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정부부처지표의 경우 정부부처 서비스만족도, 정부부처 청렴도, 정책만족도, 행정서비스 환경만족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체 만족도, 민간단체의 협력만족도, 성과관리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등을 지표에 포함하며, 정부부처 내 실국지표의 경우 예산편성 만족도, 행정서비스수요자 만족도, 홈페이지 만족도 등을 지표에 포함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평가틀은 다음 <표 2-2-2>와 같다.

<표 2-2-2> 정부부처 성과관리 평가틀

구분		항목
성과관리과정	성과관리 측정의 동기	o 성과관리 측정의 동기 o 평가활동의 행정과정에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
	평가유형과 분야, 측정수준	o 평가의 유형 o 평가분야 o 측정수준
	성과관리 측정과정	o 성과관리 지표설정과정 o 지표설정과정에서 참여자
	결과의 활용, 보고, 문제점	o 결과의 활용 정도 o 결과활용실태 o 결과보고 대상 o 평가 및 성과관리 측정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고객만족도	정부부처지표	o 정부부처 서비스만족도 o 정부부처 청렴도 o 정책만족도 o 행정서비스 환경만족도 o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체 만족도 o 민간단체 협력만족도 o 성과관리 만족도 o 근무환경 만족도
	부처 내 실국지표	o 예산편성 만족도 o 행정서비스수요자 만족도 o 홈페이지 만족도

제 3 장 평가대상 사업 및 평가틀

제 1 절 평가대상 사업

평가단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추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 참여복지계획의 약 절반을 평가하고, 2008년도 평가에서 나머지 절반을 평가토록 설정되었다. 전체 21개 분야의 50개 사업이 이번 연구의 평가대상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사회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6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고,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자활지원 등 3개 분야의 3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아동복지 등 4개 분야의 10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고,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8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기타 관련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정보격차 해소, 근로자 복지정책 추진,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보육),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 교육기회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등 6개 분야의 23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표 3-1-1〉 본 연구에서의 평가대상 사업

분과	분야	과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 •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기초의료보장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자활지원	•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 소득보장 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 의료보장 확대 •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가정복지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가정관련 교육지원
	아동복지서비스	• 아동권리의 증진 • 국내입양 활성화
사회보험	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내실화 •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건강보험	• 급여 보장성 강화 • 재정건실화, 부담 형평성 확보
	고용보험	•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산재보험	• 산재보험 수혜 확대 •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관련복지정책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 최저소득층 지원
	정보격차 해소	•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근로자복지정책 추진	•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보육)	• 보육료 지원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	•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 •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참여기회 증진 • 생활체육 활성화 • 청소년분야
	교육기회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 특수교육 강화 • 유아교육 기회확대 • 저소득층 교육지원 •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 귀국학생 교육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확대 •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 •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구축 • 민간의 참여 활성화

제 2 절 평가틀

1. 평가의 기본틀과 평가배점

평가틀은 <표 3-2-1>과 같다. 다만, 실제평가는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달성도의 두 개 부문만 실시하며, 계획의 적절성은 검토만 하고 평가점수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는 이번 평가가 사업계획 수립단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의 추진과 성과를 평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표 3-2-1> 평가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계획의 적절성 (무배점)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1. 계획 수립시 사전조사, 주민여론 수립의 충실성	-
		2. 사업계획의 정합성	-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2.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
2. 집행의 효율성 (50점)	① 시행과정의 효율성	1. 추진일정 준수여부	-
		2. 자원의 효율적 집행	-
	② 시행과정의 적절성	1.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중간모니터링, 의견수렴 등)	10점
		2.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10점
		3.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점
3. 성과달성도 (50점)	① 최종점검 자체평가	1.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점
	② 목표의 달성도	1.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점
		2.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점
	합계		100점

총 8개의 평가요소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개별과제를 평가하는데 있어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하며, 아직 자료가 산출되지 않아 자료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간점수를 부여한다.

2.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가. 평가지표

1) 기존 평가지표

전술한 평가요소에 기초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1~②-1은 각 과제별 실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그렇지만 ②-2는 개별평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후술하는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에서 제시한다.

〈표 3-2-2〉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지표	배점
집행의 효율성 (50점)	①시행과정의 효율성 (20점)	①-1.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10점
		①-2.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10점
	②시행과정의 적절성 (30점)	②-1.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10점
		②-2.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10점
		②-3.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10점
성과달성도 (50점)	①최종점검자체평가(10점)	①-1.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10점
	② 목표의 달성도 (40점)	②-1.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10점
		②-2. 개별평가지표로 대체	30점

2) 목표 달성도 측정을 위한 신규 평가지표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목표의 달성도 측정은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와 ‘개별사업의 성과평가지표’에 의한다. 특히, 후자를 위하여 개별과제별로 성과평가지표(30점 배점)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표 3-2-3〉 과제별 성과평가지표

과제	성과평가지표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 사회복지직공무원 신규 배치 인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빈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빈도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 사회복지인력 실태조사 실시여부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의견 수렴 여부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보완정도(국가자격시험 통합 일원화)
•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증감율
•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	•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푸드뱅크 지원체계 구축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기준완화에 의한 사각지대 축소효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확대 목표 달성율
•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자활사업지원 확대 및 강화
• 소득보장 체계 구축	• 수급자수의 증감 • 1인당 급여수준의 증감 • 제도개선 사항 여부
•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율 • 장기요양인프라 충족율
•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 전체 가구 대비 장애인가구 빈곤율
• 의료보장 확대	• 재활병상 충족율
•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충족율
•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표치 대비 설치율
• 가정관련 교육지원	• 가정관련 교육 수혜율
• 아동권리의 증진	•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이행과정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여부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추진 목표 대비 추진실적
• 국내입양 활성화	• 전체 입양건수 대비 국내입양 비율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추진 목표 대비 추진실적
• 국민연금제도내실화	• 소득과약을 • 가입기간확대 • 사업장가입자확대 • 징수율 • 4대 사회보험제도간 연계체계구축 정도 • 다층체계 연금제도 구축방안연구 마련
•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 노령연금 수급조건 개선 • 장애연금 수급조건 개선 • 유족연금 수급조건 개선 • 기타급여의 합리화-병급조정 제도 개선 • 기타급여의 합리화-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 기타급여의 합리화-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 급여 보장성 강화	• 암 환자 급여율
• 재정건실화, 부담 형평성 확보	• 건강보험료 징수율 • 재정수지 적자의 타당성
•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 고용안정 활성화
•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 산재보험 수혜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 • 업무상 인정기준 판단 개선·보완 여부

〈표 3-2-3〉 계속

과제	성과평가지표
•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 업종재분류 • 수지차의 목표달성 여부 • 최초 입원 산재환자 상담 여부 • 요양종결자의 평균사회복귀기간 단축여부
• 국민연금제도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과약률 • 가입기간확대 • 사업장가입자확대 • 징수율 • 4대 사회보험제도간 연계체계구축 정도 • 다층체계 연금제도 구축방안연구 마련
•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연금 수급조건 개선 • 장애연금 수급조건 개선 • 유족연금 수급조건 개선 • 기타급여의 합리화-병급조정 제도 개선 • 기타급여의 합리화-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 기타급여의 합리화-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 급여 보장성 강화	• 압 환자 급여율
• 재정건실화, 부담 형평성 확보	• 건강보험료 징수율
•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 재정수지 적자의 타당성
•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 고용안정 활성화
• 산재보험 수혜 확대	•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 • 업무상 인정기준 판단 개선·보완 여부
• 최저소득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 업종재분류 • 수지차의 목표달성 여부 • 최초 입원 산재환자 상담 여부 • 요양종결자의 평균사회복귀기간 단축여부
•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대비 공급실적 • 총 주택 수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 국민임대주택 준공실적 대비 입주율
•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 취약계층 접근격차 수준
•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 취약계층 역량격차 수준
•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치 대비 선발인원 비율 • 목표치 대비 금액 활용률 • 목표치 대비 선발인원 비율 • 목표치 대비 금액 활용률
•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문 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율 • 민간부문 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율 • 장애인 중심기업의(장애인 표준사업장) 신규고용창출 목표 달성율 • 장애인 창업지원 목표달성율
•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수 계획 대비 실적 비율 •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아동수 계획 대비 실적 비율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아동수 계획 대비 실적 비율

〈표 3-2-3〉 계속

과제	성과평가지표
•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 문화역량 제고	• 문화바우처 수혜 비율 • 문화예술교육 수혜 비율
•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 공공문화기반시설 확충성과
•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 참여율
•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참여기회 증진	• 취약계층 관광지원 수혜 비율
• 청소년분야	•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수혜비율(연인원) •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확대(연인원)
• 특수교육 강화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수 확대비율 • 학습자료개발 보급률 • 통합학급교원 특수교육관련 연수과정 확대비율 • 특수교육전문성 함양 연수과정 참가교원 확대비율
• 유아교육 기회확대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수혜율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수혜율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율
• 저소득층 교육지원	•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비율 •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계획대비 실적율
•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 장애인 특별전형 교육기회 확대비율 • 고등교육기관 저소득층 특별전형기회 확대비율
•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 전문상담교사 배치 • 상담자원봉사자 지원학교 확대 비율 • 배움터 지킴이 활용비율
• 귀국학생 교육지원	• 국내적응 프로그램 대상학생 만족도 • 한국어반 지도교사 직무연수 대상교원 만족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확대	• 대상학생 학력신장 향상정도
•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학교 도시문화체험학습 운영비율 •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 복식수업 교재 개발 보급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 농어촌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	• 학생인권보호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학교(06.12선정) 학생대상 학생인권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구축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역 수
• 민간의 참여 활성화	• 지역별 대학생 멘토링 실태 파악 정도 • 국민이해당사자 만족도 • 대학생 멘토링의 봉사학점 인정정도

나. 평가매뉴얼

8개의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측정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및 배점	
①-1.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 어 추진하였 는가(10점)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 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①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5점
		②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 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4점
		③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3점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2점
		⑤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1점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배점
①-2. 과제 추진을 위 한 자원은 효율 적으로 집행 하 였는가 (10점)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 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모두 적정	5점
		㉠㉡㉢㉣중 3개가 적정	4점
		㉠㉡㉢㉣중 2개가 적정	3점
		㉠㉡㉢㉣중 1개가 적정	2점
		㉠㉡㉢㉣가 모두 부적절	1점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총 4가지 평가요소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관리방법은 사업 운영방안을 의미함, 따라서 인력이나 조직, 예산 등을 어떤 식으로 운영·관 리해 나갔는지를 제시 · 법률 제·개정 등은 법률 통과를 위해 부처의견 수렴, 국무회의 상정, 법률 국회제출 등 법률 이 국회통과를 위해 각 단계별로 적절한 시기에 작성했는지가 관리방안임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및 배점	
② -1. 시행 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10점)	<평가요소> ㉠ 행정여건 및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 여 모니터링을 실시하 였는가의 여부【3점】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 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 하였는지 여부【7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10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8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 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6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3점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0점
㉠ 행정여건 및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의 여부 － 여기서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 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 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 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및 배점		
② -2.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 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10점)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 조체제를 구축하고 이 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 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10점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 하였으나 실적이 없는 경우		5점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실적도 없는 경우		0점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운영한 실적 제시)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봄 － 다만, 동 사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아울러,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배점
② -3.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해당사자에게 효 과적으로 홍보 하 였는가(10점)	<평가요소> ○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수행 하였는지 여부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 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10점
		홍보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5점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 도 낮은 경우	0점
		○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 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배점
①-1.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10점)	<평가요소> ①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2점】 ②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4점】 ③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4점】	①②③의 점수합계	0~10점
①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 최종점검을 하기 위하여 사업집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시행하였는가의 여부 ②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 자체평가의 평가방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③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자체평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근거자료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배점
②-1.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10점)	<평가요소> ○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이해당사자의만족도(%)	100% 만족	10점
		90~100%	9점
		80~90%	7점
		70~80% 미만	6점
		60~70% 미만	4점
		60% 미만	2점
○ 국민·이해당사자의 만족도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측정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수식{(성 과에 만족하는 인원(명)÷전체조사대상인원(명))×100)에 따라 환산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목표의 달성도 측정은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와 ‘개별사업의 성과평가지표’에 의한다. 특히, 후자를 위하여 개별과제별로 성과평가지표(30점 배점)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배점
②-2. 각 과제별로 개발된 성과평가지표(30점)	개별평가지표에 따라 개발	5점 척도/30점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평가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평가지표 당 배점은 ‘30점÷평가지표개수’로 적용 - 평가지표 개수는 평가자가 판단하여 결정	30점

제 4 장 2006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 1 절 사회복지행정의 추진실적 평가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가. 과제명: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9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분야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분야는 50점 만점에 41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10점 만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만 정책의 효율성 향상이 미비하여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에 있어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80% 이상이 만족하여 7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2005년 정원대비 7.8%의 충원이 달성되어 24점을 받았다.

〈표 4-1-1〉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4
	소계	50	41
	계	100	89

□ 평가결과의 함의 및 시사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2006년 계획안은 “사회복지사무소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전국 확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가배치” 등이 해당된다. “사회복지사무소”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반영된 동일한 맥락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안으로서 “주민생활지원행정개편”이 실현되었고, 이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의 추진일정과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참여복지 5개년계획 수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이 2005년에 추진됨에 따라 외부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충원”은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계획에 따른 추진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셋째,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 만족도의 변화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본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즉, 나타난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전달체계 개편 정책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결론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과제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1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분야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분야는 50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10점 만점을 받았으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만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에 있어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실시되지 않아 최저점인 2점을 받았으며,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빈도가 88.5%로 12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빈도가 53.3%로 9점을 받았다.

〈표 4-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2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1
	소계	50	33
계		100	81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2006년 계획안은 전국 시·군·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해당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직접사업이 아닌 시·군·구의 민관이 자발성을 갖고 협의체를 운영토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은 이를 위한 기본 운영체계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그러나 협의체는 정착 초기로서, 대부분의 시·군·구가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며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불균형 등으로 운영취지에 적합한 사업수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노력·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셋째, 지역단위 민·관 협의구조 정착의 중요한 기반으로 제안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실제 협의체 구조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세부사업의 활성화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가. 과제명: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1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분야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분야는 50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10점 만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만 정책의 효율성 향상이 미비하여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에 있어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평가내용 및 방식이 미흡하여 7점을 받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실시되지 않아 최저점인 2점을 받았으며,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목표치 대비 다소 미흡하게 달성된 부분이 있어 24점을 받았다.

〈표 4-1-3〉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7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2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4
	소계	50	33
	계	100	81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2006년도 사업은 당초 계획안에 제시된 내용과 추진내용상의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중복운동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제도 발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정책 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관리의 주체가 변화하게 된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당초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근거는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가. 과제명: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2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3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39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 향상이 미진하여 8점을,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변화를 알 수 없어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에 있어서는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목표치대로 모두 달성되었으나,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평가방식과 내용이 현실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다소 결여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7점을,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실시되지 않아 최저점인 2점을 받았다.

〈표 4-1-4〉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3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7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2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39
계		100	82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집행의 효율성 측면은 추진일정의 준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각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과 인지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성과달성도 측면에서 자체평가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변화하는 복지환경을 반영하는 평가지표 개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평가실시 등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미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4.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가. 과제명: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6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6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에 있어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 향상이 미진하여 각각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중간수준으로 6점을 받았으며, ‘사업목적 및 목표’도 모두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1-5〉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6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6
계		100	92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과제를 진행하였다. 다만, 자원봉사 육성 지원을 위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원봉사 관련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원봉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달성도에 있어서는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80% 미만을 밑돌고 있어서 국민의 만족도 수준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 과제는 대국민 만족도 수준 제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나. 과제명: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4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6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에 있어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중간수준으로 나타나 6점을 받았으며, '사업목적 및 목표'는 모두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1-6〉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6
계		100	94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 과제는 집행상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성과달성도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

셋째, 전반적으로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홍보, 식품의 질과 양 및 신선도에 주력하여 국민의 만족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기초생활보장의 추진실적 평가

1. 기초생활보장

가. 과제명: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5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6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39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추진일정준수 여부'에 있어 부양의무자 조사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예산 집행 파악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아 각각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라는 자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8점, 만족도 조사는 실시가 다소 곤란한 점이 있어 중간점수인 7점, 사각지대 축소효과가 다소 미흡하여 24점을 받았다.

〈표 4-2-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8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6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8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4
소계		50	39
계		100	85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축소라는 의미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판정기준 완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 하에서 목표보다 조기에 이를 달성함으로써 정부의 사각지대 축소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부양의무자 완화를 위한 정책 집행을 효율성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준 완화를 위한 각 부처간의 업무 협조, 예산의 사전 확보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조 등은 매우 잘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성과달성도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즉, 자체평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수급자)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또한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사각지대를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일정부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를 통해 살펴볼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 시행이후 일시적인 모니터링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민과 수급자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기초의료보장

가. 과제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9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3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6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8점을 받았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에 있어서도 인지도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인지도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파악되어 6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든 시·군·구에 사례관리요원이 1명 이상 배치되어 목표치가 달성되었으므로 30점을 받았다.

〈표 4-2-2〉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3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6
계		100	89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당초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둘째, 사업대상자에게 정책 변화를 개인별로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였다.

셋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를 조사할 경우 사업내용을 고려할 때 불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자활지원

가. 과제명: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4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켰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여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에 있어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의 평가자료가 미흡하여 8점을 받았으며, 자활사업만족도 조사는 2007년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2006년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79.5%의 만족도)를 대체하여 6점을 부여받았다.

〈표 4-2-3〉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8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4
계		100	92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 하의 정책은 사업 참여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선참여 후소득과약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근로능력 판정 매뉴얼 개발을 새로운 사업지침에 반영하여 참여자의 근로 능력 및 수준에 맞는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본 평가 결과 정책이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미흡하였다. 또한, 국민과 이해당사자가 정책을 만족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성과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

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체계를 확립하며, ‘(가칭)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법’ 제정을 통하여 자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추진실적 평가

1. 노인복지서비스

가. 과제명: 소득보장 체계 구축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5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50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5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모두 10점을 받아 모두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평가된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경로연금 주요 수급대상이 공적 연금가입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출생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에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었으나 수급자수가 2006년에 감소하였으므로 26점을 받았다.

〈표 4-3-1〉 ‘소득보장 체계 구축’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10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50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6
	소계	50	45
	계	100	95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소득보장 체계 구축’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로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사각지대를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로 2008년도부터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또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급여수준 향상이 기대되어, 저소득층 노인들의 보다 윤택한 삶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과제명: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6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6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있어 본인부담금 및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40%만이 사용되고,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않아 각각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모두 적합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의 경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추진율은 모두 달성되어 15점, 장기요양인프라 부문에 있어서는 재가시설이 뚜렷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12점을 받았다.

〈표 4-3-2〉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6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7
소계		50	46
계		100	92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 추진 중에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제공자의 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올바른

른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프라의 확충과 관련하여 입소시설의 경우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입소시설충족을 재산정해 보면, 제도 도입 이전까지 완전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가서비스시설의 경우에는 상당한 미충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생활권역으로 보나 행정구역단위로 보나 상당한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복합이용이나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인프라확충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력의 인프라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요양보호사인데, 이들의 직업윤리의식을 강력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간병인이나 가정부정도의 단순기술을 지닌 인력이 아닌 전문기술을 습득한 인력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교육양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장애인복지서비스

가. 과제명: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70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3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27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않아 8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정책인지도의 변화가 없어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에 있어 평가방식 및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7점, 만족도 조사는 실시되지 않아 최저점인 2점,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아 18점을 받았다.

〈표 4-3-3〉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3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7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2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18
소계		50	27
계		100	70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들이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에 있어서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장애인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동 비율에 비해 약 2.2배 높아 여전히 장애인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따라서 향후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 관련 소득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등 공공부조형 소득보장제도의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주요한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제도를 연금수급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활사업의 전개 및 일자리창출사업 강화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계층의 탈빈곤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 과제명: 의료보장 확대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71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1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30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여부'는 모두 10점을 받았으나, '추진일정준수 여부'에 있어 해당 시·도에서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의 경우에는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않아 각각 8점을 받았다. 또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에 있어서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변화를 제시하지 못해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평가방식 및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8점, 만족도 조사는 향후 실시될 예정이어서 4점, 재활병상충족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18점을 받았다.

〈표 4-3-4〉 ‘의료보장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8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1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8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4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18
	소계	50	30
	계	100	71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의료보장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권역별 재활센터 설치 추진의 경우 2006~2009년에 이르는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아직까지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재활병상 충족율은 약 16%에 그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2006년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나,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의 경우에는 제품의 개발보다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위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급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둘째, 향후 의료보장 확대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낮은 재활병상 충족율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센터 확충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사업에서의 획기적인 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과제명: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1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1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0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추진일정준수 여부'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여부'는 모두 10점을 받았으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있어서는 효율적 집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않아 각각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약 77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여 6점을 받았으며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충족율이 71% 수준으로 나타나 24점을 받았다.

〈표 4-3-5〉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1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4
	소계	50	40
계		100	81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희망한국 21’ 등의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이 꾸준히 확충되어 2006년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충족율은 71%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더불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2001년 사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6년에는 4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도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지금보다 나은 수준의 지역사회로의 참여 및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종종의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100% 수용하기 위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속적인 설치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확대 및 장애인복지관의 신규 설치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적 확충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서,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기관들의 협조 및 서비스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과제명: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6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향상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60~70%의 만족도 수준을 보여 4

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1.73%로 나타나 24점을 받았다.

〈표 4-3-6〉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4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4
소계		50	38
계		100	86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상기의 평가 점수를 볼 때, 타 영역에 비해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 지표 대상이 전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설치율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둘째,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100%로 제고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편의시설의 질적인 측면, 즉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가정복지서비스

가. 과제명: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5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7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향상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과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만점을 받았으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88%의 만족 수준을 나타내 7점을 받았다.

〈표 4-3-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7
계		100	95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가족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방송 매체 등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한 평가방식과 내용에 의거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를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과제명: 가정 관련 교육지원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8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1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7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추진일정준수 여부’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여부’는 모두 10점을 받았으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는 사후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불충분하고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자료가 불충분하여 각각 8점을 받았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정책 인지도 향상을 판단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과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만점을 받았으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88%의 만족수준을 나타내 7점을 받았다.

〈표 4-3-8〉 ‘가정 관련 교육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1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7
	계	100	88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가정 관련 교육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가정 관련 교육지원에 있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무원, 기업체 직원, 군부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속적인 홍보, 정기적인 사업평가, 그리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를 통해 사업의 인지도와 효율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서비스

가. 과제명: 아동권리의 증진

UN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우리나라는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여 이들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는 아동권리 증진과 관련된 이행과정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와 아동권리에 대한 국민 홍보 및 교육의 실시로 구분된다.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6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6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0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있어 정부예산 규모가 매우 제한적으로 집행되었고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실질적인 폭력예방 효과가 미흡하여 각각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사업추진팀이 직접 수행하는 자체평가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8점을 받았으며 만족도 조사는 미 실시되어 최저점인 2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3-9〉 ‘아동권리의 증진’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6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8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2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0
계		100	86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아동권리의 증진’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아동권리의 증진은 전체 아동복지 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합목적 정책방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단위사업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서 동 분야에 대한 적극 홍보와 함께 다양한 사업주체의 발굴 노력과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책 활동의 전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사업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 추진하여 그 성과를 실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성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외부의 개입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실감할 수 있는 발달환경 단위의 실질적 개선노력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향후 보다 강력한 정책기제의 발굴과 추진방안의 모색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나. 과제명: 국내입양 활성화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보호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하여 바람직한 발달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으나, 불가피한 경우 가정위탁 또는 입양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전통에 근거한 가족주의 및 강력한 혈연의식 때문에 입양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그 결과 매년 상당수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어 고아수출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 5개년계획은 국외입양을 대체하기 위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였는바, 동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2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있어서는 홍보예산을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전문한 실정이어서 자원의 집행규모가 부적절하여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평가 내용 및 방식이 다소 미흡하여 8점을 받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63%의 입양희망율을 나타내었으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7점으로 평가되었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전체 입양건수 대비 국내입양율이 41.2%로 나타나 12점을 받았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실적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15점을 받았다.

〈표 4-3-10〉 ‘국내입양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8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7
	소계	50	42
	계	100	90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국내입양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는 가정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부모와의 혈연적 관계가 없을 경우, 가족구성원으로 그 권리와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한 혈연의식으로 인해 비밀입양이 선호되고, 그나마도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고아수출국의 오명은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에 비추어 상당히 치명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간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비록 가시적인 국내입양 활성화사업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는 국민 개개인의 가치체계와 전통의식을 개편하여 입양에 관한 편견을 제거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투입을 통한 제도적 기

반조성과 국내입양 문화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아울러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과 연계되어 입양 이후의 사후적 대처와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입양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서 아동보호의 국가책임을 개별가정에 전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입양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모색하고, 한편에서는 기 입양된 해외 입양인을 포함하여 모든 입양인이 사회적 편견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내야 할 것이다.

제 4 절 사회보험의 추진실적 평가

1. 국민연금

가. 과제명: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1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3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는 납부예외 축소를 위한 사후관리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급여대체율 감소로 인하여 만족도가 다소 떨어질 것이므로 7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대부분 계획대로 달성되었으나 소득과악률과 정수율이 감소하여 26점을 받았다.

〈표 4-4-1〉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6
소계		50	43
계		100	91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는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증가, 납부예외자 증가 등은 소득과 악물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구조가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가 성실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가입확대에 역점을 두었던 국민의 정부와는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득신고 개선도를 보면 대체로 하위소득에 머물러 있던 계층들의 비율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노력과 가입자들의 연금인식도가 개선된 결과로 추정된다.

둘째, 가입기간인정제도 도입과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으로의 전환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며, 가입자의 가입기간 확대에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과제명: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4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50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4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모두 10점을 받아 효율성이 최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연금급여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작업과 방법이 다소 미흡하여 8점을 받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연금재정안정과 급여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였으므로 6점을 받았으며,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4-2〉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50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8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4
	계	100	94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노령연금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친화적인 급여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연금수급 지연시 할증연금 도입, 조기 수급시 감액 폭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에 가급적 오래 머물도록 함으로써 생애소득(life-cycle income)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유족연금의 미지급문제, 남녀간 성차별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연금급여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장애연금의 지급개시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장애로 인한 소득중단 또는 감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건강보험

가. 과제명: 급여(보장성 강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7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1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6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추진일정준수 여부’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는 모두 원활히 이루어져 각각 10점을 받았다. 그러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는 관리방법이 소극적이어서 8점을 받았고,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을 파악할 수 없어 8점을 받았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에 있어서도 인지도 향상 파악이 불가능하여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건강보험공단의 암 환자 대상 조사 결과 74.4%로 나타나 6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4-3〉 ‘급여(보장성 강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1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6
	계	100	87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급여(보장성 강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보장성 효과에 대한 자체평가가 미흡하였다. 특히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과제명: 재정(재정건실화, 부담 형평성 확보)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3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39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4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추진일정준수 여부’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는 모두 원활히 이루어져 각각 10점을 받았다. 그러나 ‘자원

의 효율적 집행 여부'는 관리방법 및 사후관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6점을 받았고,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을 파악할 수 없어 8점을 받았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에 있어서도 인지도 향상 파악이 불가능하여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보통수준으로 파악되어 4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4-4〉 '재정(재정건실화, 부담 형평성 확보)'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6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39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4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4
	계	10	83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재정(재정건실화, 부담 형평성 확보)'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보험재정 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둘째,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이나 재원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 고용보험

가. 과제명: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3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2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1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와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모두 10점을 받았으나, '추진일정준수 여부'는 일부 사업이 다기화되어 있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이 지연되었으며,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있어 관리방법이 지연되어 추진되었으므로 각각 8점을 받았다.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이 지연되어 6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나, 만족도 조사 결과 80%대로 나타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7점을 받았고,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거시적인 정책목표와 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체계 단순화의 효과가 미진하여 24점을 받았다.

〈표 4-4-5〉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8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2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4
	소계	50	41
	계	100	83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도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정과 개선, 그리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의 상향조정은 시장 및 기업 상황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수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집행과정의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그러나 사업과 프로그램의 확대 및 활성화가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평가와 효율성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노동부 자체의 정책적인 판단이나 상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에 따라서 수혜당사자인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었으나 기금자원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간 적정 배분 그리고 배당과 집행의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는 아직 객관적인 기준이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따라서 노동부는 향후 고용안정 과제들 중 유사·중복 프로그램들을 큰 틀의 정책목표와 목표 집단에 따라서 재분류·단순화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다. 특히 사업의 일방적인 확대나 지원수준의 상향조정은 사중소실이나 대체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부가효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과평가와 적절한 환류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과제명: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5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6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39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있어 관리방법이나 사후관리가 다소 취약하고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각각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평가내용의 실질성과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8점을 받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지원사업 수혜자 대상의 만족도 결과 90% 이상의 결과가 나타났으나 수혜자가 아닌 비교대상 집단 또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델파이 조사 등의 결과와 비교평가가 필요하므로 7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사업목적과 목표에 초점을 맞춘 사업성과 평가와 분석이 추후 필요하므로 24점을 받았다.

〈표 4-4-6〉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6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8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4
	소계	50	39
	계	100	85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기존 정책과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시행결과 사업 대상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 참여기관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 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특정 기관에만 집중되고, 그에 따라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서비스 공급자위주로 편향되게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가 필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 사업의 경우,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계속되는 사업으로 실적에 의하면 ‘학자금 대부 사업’에 사업 실적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효과가 측정하기 어려운 장기에 걸친 것으로 사업효과의 평가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부사업은 계속하되 자율적인

직업훈련비용 대부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사업의 경우, 취업취약 집단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내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면서 동시에 복잡한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므로 사업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평가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매년 감사에 대비한 일회성의 평가를 반복함으로써 평가자료와 결과가 누적되지 못하고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사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사업평가 자료DB의 구축, 체계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산재보험

가. 과제명: 산재보험 수혜 확대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8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50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모두 10점을 받아 효율화가 최대화되었으며,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자체평가를 실시한 근거는 없으나, 관계 법령개정(안) 입법공고, 관련 지침 제정 공포가 이루어져 5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관련단체에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산재보험법개정(안)과 보험료징수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으며,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업무지침과 업무상정신질환업무지침이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으므로 24점을 받았다.

〈표 4-4-7〉 ‘산재보험 수혜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50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5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4
	소계	50	38
	계	100	88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산재보험 수혜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하여 관계부처(노동부)에서는 노·사들 관계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 2천만원 미만의 면허건설공사까지는 산재보험적용이 되도록 하였으나 무면허 건설공사에까지 산재보험적용이 확대되는 방안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예: 독일사례 참조).

셋째, 업무상질환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단체의 이의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과학적인 산업의학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파단의 과학성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나. 과제명: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7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50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37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모두 10점을 받아 효율화가 최대화되었으며,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높지 않아 2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수지차의 목표달성도 중간수준으로 6점을 받아 전체적으로 25점을 받았다.

〈표 4-4-8〉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50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2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5
	소계	50	37
계		100	87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재보험의 업종(개별사업단위)을 산업의 발전에 따른 개별업종의 성장, 쇠퇴에 부응하여 매년 업종 통폐합, 신규업종 별도분리 등의 재분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법정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하여 수지차의 발생을 계획하고 목표수리차액을 산재보험요율 산정시 반영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현장요양관리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 및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절 참여복지 관련 복지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1.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가. 과제명: 최저소득층 지원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1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6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5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시기·규모 등을 고려한 ‘자원의 효율적 집행’은 사후관리의 개선이 요구되었고, ‘추진일정 준수 여부’는 국민임대 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2006년도 실적이 계획 대비 88%로 추진이 지연되어 각각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평가 주체가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국한되어 평가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8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 만족도’는 200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대비 공급실적이 88%로 나타나 8점을, 총 주택수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율과 국민임대주택 준공실적 대비 입주율은 10점을 받았다.

〈표 4-5-1〉 ‘최저소득층 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8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6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8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8
소계		50	45
계		100	91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최저소득층 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하에 시행된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축소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주거양극화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과 이해 당

사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노력은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성과달성도의 측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참여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시도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활노숙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그룹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주거복지와 복지정책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선정만을 중심으로 공급실적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취약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복지서비스 연계 즉,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유효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 정보격차 해소

가. 과제명: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3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5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8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홍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그 효과를 알 수 없으므로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평가내용이 다소 보완되어야 하는 점이 있어 9점을,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90% 이상의 만족 수준을 나타내 9점을,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5-2〉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5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9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8
	계	100	93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과제는 다른 부처와 자문단에 의해 설정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의 일환으로 그 목표와 취지에 맞게 비교적 적절하게 진행되었다.

둘째, 과제 수행에 있어 관계 부처와 사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비용 절감과 수혜자 중복을 예방한 실적은 향후에도 권장할만한 사항이다.

셋째, 과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같이 수혜자로부터의 의견수렴과 홍보 사업은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일반 국민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본 과제의 인지도를 파악하는 데는 미흡하여 향후에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과제명: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3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5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8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에 있어 정책인지도 향상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5점을 받았으며, 동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평가내용에 다소 보완할 점이 있어 9점을,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90% 이상의 만족수준을 나타내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5-3〉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5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9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8
계		100	93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기회 확대’ 과제와 마찬가지로 본 과제는 다른 부처와 자문단에 의해 설정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의 일환으로 그 목표와 취지에 맞게 비교적 적절하게 진행되었다.

둘째, 정부부처(농림부, 노동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2곳) 정보화교육실정에 맞춘 11종의 계층별 과정의 공동 개발·보급을 통해 통합적인 부처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해양수산부, 경북도청, 노동부)에 기 개발한 교육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관계 부처와 사업체들과의 적극적 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셋째,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계층들의 요구 변화를 보다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 콘텐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근로자복지정책 추진

가. 과제명: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7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9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은 고객의 대기시간이 긴 것이 개선점으로 지적되어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외부기관에 의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97.66%로 나타나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5-4〉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9
	계	100	97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우수하나, 신청인원대비 선정율(60.2%)과 금액대비 선정율(60.0%)이 모두 60.0% 정도로 보다 많은 신청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기년도에는 계획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융자대상 선정이 매월 1회로 되어있어 급하게 융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대상자선정을 월 2~3회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이 자율이 3.4%로 인하되기는 하였으나, 더 낮은 금리로의 인하가 필요하고 사료된다.

나. 과제명: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7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9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에서는 이용대상 시설의 제한으로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96.83%로 나타나 9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5-5〉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9
계		100	97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저소득근로자의 민간복지시설 이용대비 지원사업의 이용지원을 상향조정(80.0%)으로 사업의 수요자가 늘었으며, 또한 계획된 금액이 모두 소진된 점으로 미루어 차후에는 계획인원과 계획금액의 증원·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보다 많은 저소득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1가구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지원비용의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용대상 시설이 저임금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숙박·체육·문화시설로 국한되어 있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의료·보육·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 과제명: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4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키지 못하여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추가적인 영향평가 계획은 있으나 미실시로 인하여 8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장애인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창업자 중 74%가 만족하여 6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5-6〉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8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4
계		100	92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확대 정책으로 경찰 등 극히 예외적인 직종을 제외하고 적용직종이 대폭 확대되어 2006년도에 84%의 직종에 의무고용이 적용되어 장애인 차별금지 분위기 조성에 정부부문이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민간부문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범위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도 장애인의무고용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장애인 창업이 매년 100여 명씩 신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업 이후 오랫동안 계속하여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효과적인,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가. 과제명: 보육료 지원 확대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7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5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2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에 있어서는 최근의 정책인지도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5점을 받았으며, 동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파워리서치의 보육료 지원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약 87점의 만족수준을 나타내 6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수 계획 대비 실적율이 모두 달성되어 15점을,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아동수 계획 대비 실적율은 91.9%로 나타나 8점을,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아동수 계획 대비 실적율은 80.1%로 나타나 3점을 받았다.

〈표 4-5-7〉 ‘보육료 지원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5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6
	소계	50	42
	계	100	87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보육료 지원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민이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활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홍보 활동은 그 자체보다는 정책 인지도 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책인지도 변화 측정 역시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77점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만족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지원의 수준과 직결되므로 만족도 증진은 지원 수준의 확대의 선결을 필요로 한다.

셋째, 사업 목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적 목표치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사업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만5세아와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의 규모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특히 장애아동무상보육료 지원은 목표 대비 실적이 80% 정도로 타 사업에 비하여 낮다. 앞으로 사전 수요 추정 등 계획 수립시 보다 정교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5.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 구현

가. 과제명: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4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6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추진일정준수 여부’에 있어 유아·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여건 마련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8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점을 받아 효율성이 최대화된음을 알 수 있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도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70~80%의 만족수준을 나타내 6점을 받았다.

〈표 4-5-8〉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8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6
계		100	94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던 동 과제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목표대비 실적치의 성과는 물론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타 부처 및 타 기관, 홍보매체 등을 적극 활용한 것은 부처간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문화정책 환경에서 매우 좋은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자체평가의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분야별로 시행되는 여러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바우처 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평가척도가 상이하하여 이 두 사업에 대한 국민전체의 만족도를 산출하기 어려운 문

제점이 노출되는 등 관련 사업의 평가 기준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변수까지 감안하여 일정계획 및 사업추진에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과제명: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4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39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5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만 10점을 받았다. '추진일정준수 여부'는 미술관의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는 투입시기의 미흡함으로 인해,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뚜렷한 정책의 효율성 향상이 제시되지 않아 각각 8점을 받았다. '성과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정책의 인지도 향상이 다소 미흡하여 각각 5점을 받았다.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중 평가내용이 다소 보완될 필요성이 있어 9점을,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 70% 이상의 만족수준을 보여 6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5-9〉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8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39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9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5
	계	100	84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문화기반시설 건립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문화환경 개선에 문화기반시설 건립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법, 제도를 통해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평가지표에 있어 다른 지표와 차별성을 가진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기반시설 건립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다 세밀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획된 재정 투입규모가 적절히 산출되고, 지자체의 사업 지체나 유보로 인하여 사업자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자원의 효율적 집행,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 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특히 문화환경 개선이 문화기반시설 건립 위주의 정책에서 효과적 운영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 과제명: 생활체육 활성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8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0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증가된 근거가 부족하여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70% 이상의 만족수준을 보여 6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일부 사업에서 목표치를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하여 24점을 받았다.

〈표 4-5-10〉 ‘생활체육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4
소계		50	40
계		100	88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생활체육 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각 시·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획과 관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전체 추진일정과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맞추어져 있으나, 향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확대와 같은 ‘프로그램’적 접근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와 정책적 여건을 정비, 개선해 나가는 ‘제도’적 접근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관련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따라서 행정 및 상황변화에의 대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수를 감안하여 대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업의 조기 추진을 통하여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의 시

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생활체육은 계층별로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시행될 수 있다. 학생, 노인, 장애인 등은 이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특징을 보이는 계층으로 이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동일한 정책적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계층별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으며, 향후 이에 대응하는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또한 관련된 행정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과제명: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참여기회 증진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8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1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7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여부'가 모두 10점을 받았다. '추진일정준수 여부'는 복지관광 실시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는 자원투입시기에 약간의 차질이 발생하여 각각 8점을 받았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문화마우처 사업보다 다소 수동적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복지관광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결과 87.1%의 만족수준을 보여 7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5-11〉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참여기회 증진’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8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1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7
	계	100	88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참여기회 증진’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취약계층 복지관광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인 8월보다 1개월 지연된 9월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월 지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시행이 1년의 중반이 지난 이후 시점에 시작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사전에 보다 충실히 수립하여 추진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취약계층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용히 사업을 실시하려고 한 사업 방향이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고려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실적치가 목표치를 상회하고는 있지만, 당초 계획된 목표치가 1,000명에 불과해 그 효과가 관광소외계층 전반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목표 설정 및 목표치의 수립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인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 과제명: 청소년분야(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2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6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36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는 사후관리를 평가할만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 향상을 제시할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각각 8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에 있어 평가방식과 내용이 미흡하여 6점을,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2006년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 결과 95.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수혜비율이 99.2%로 나타나 12점,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확대가 전년대비 0.5% 감소하여 9점을 받았다.

〈표 4-5-12〉 '청소년분야(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8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6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1
	소계	50	36
계		100	84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청소년분야(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 공부방이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권 신장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구축·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내용과 방식을 갖춘 자체평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한 청소년의 수는 적절히 달성되었으나, 저소득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6.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가. 과제명: 특수교육강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8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3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5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추진일정준수 여부’는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어 8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정책의 인지도 향상을 제시할 자료가 불충분하여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80% 이상의 만족수준을 나타내 7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통합학급교육관련 연수과정 확대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모두 목표치대로 달성하여 28점을 받았다.

〈표 4-5-13〉 ‘특수교육강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8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3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8
	소계	50	45
	계	100	88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특수교육강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실적과 함께 인지도 확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발굴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수교육강화 과제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타 과제도 공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과제의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과정에서 현실적 타당성을 보증하는 지표(안) 개발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사업목적 및 달성수준 관련 지표(특수교육관련 연수과정 확대비율) 중 전년대비 올해의 연수과정 개설비율을 평가지표로 삼았는데, 이에 대한 추후 성과자료 요청과정에서 담당자의 견해를 청취하게 되었다. 성과지표 개발에는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자가 개발한 지표를 담당부서에서 검토·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셋째, 특수교육전문성 함양 연수과정 교원참여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

다는 점을 절대적인 연수과정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이전 지표의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향후 확실히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일단 계량적 수치에 대한 단순 해석은 이중적이다. 즉, 절대적으로 연수과정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현재 개설되어진 연수과정에 많은 교사가 집중되어졌거나, 반대로 교사의 연수수요에 근거해 연수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사참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확실한 점은, 향후 특수교육전문성 함양 교사연수는 이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연수과정의 효율성과 질, 교사의 참여의지 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수요에 더해 보다 다양한 교사연수과정을 개설해야 하는지, 아니면 효율적인 차원에서 많은 다수의 수요에 근거해 핵심적인 연수과정을 개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물론 이 판단의 핵심기준은 교사연수의 효과성이다.

나. 과제명: 유아교육기회확대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9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5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4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에 있어 정책의 인지도 향상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여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가정부담 경감에 대한 응답결과가 78.9%의 만족 수준을 나타내 6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수혜율과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수혜율은 모두 목표치대로 달성되었으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율은 목표치에 다소 못 미쳐 28점을 받았다.

〈표 4-5-14〉 ‘유아교육기회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5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8
	소계	50	44
	계	100	89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유아교육기회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역시 다른 과제와 마찬가지로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인지도 파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요청된다.

둘째,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예상외로 낮아(47.1%), 이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원인파악을 통해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과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중 어느 부문에 만족도가 낮은지, 그리고 만족도가 낮은 이유(지원절차의 복잡성, 차량기준의 불합리성)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요청된다.

다. 과제명: 저소득층 교육지원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6점이며, 집행의 효

울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5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1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에 있어 정책의 인지도 향상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여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평가방식 및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8점을 받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만족도수준이 78.9%로 나타나 6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비율은 목표치가 달성되었으나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계획대비 실적율은 목표치보다 다소 낮게 나와 27점을 받았다.

〈표 4-5-15〉 ‘저소득층 교육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5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8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6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7
	소계	50	41
계		100	86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저소득층 교육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인지도 제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실적 확보가 추후 요망된다.

둘째,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일부 타당하게 표집하여 측정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하여 사업성과의 만족도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 과제명: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7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4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3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대학의 의지에 따라 대학간 편차를 고려하여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여 8점이 부여되었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인지도의 향상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각 대학별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균점수화하기 곤란하여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평균점수인 7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장애인 특별전형 교육기회 확대비율이 다소 목표치에 미달하여 총 27점을 받았다.

〈표 4-5-16〉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3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7
소계		50	44
계		100	87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 장애학생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대학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도감독 방안도 구안하여야 한다. 대학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대학 장애학생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전파하거나, 장애인 관련 행사(장애인올림픽, 장애인의 날 등)와 더불어 대학 측(장애학생 포함)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인지도 제고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요청된다.

셋째,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실적보고서에 같이 취합하여 보고되었으면 한다. 대학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

부 대학의 결과를 실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사례중심으로 일부 대학이라 할지라도 본 과제에 해당하는 학생의 만족도 결과를 적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7.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 부적응 예방

가. 과제명: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78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39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39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는 모두 10점을 받다. 그러나 '추진일정준수 여부'는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보가 지연되어 8점을 받았고,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는 투입시기와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6점을 받았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인지도 제고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에 있어 평가 내용 및 방식이 다소 미흡하여 6점을 받았고,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2006년도 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95.5%로 나타나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모두 계획대로 달성되었으나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지연되어 24점을 받았다.

〈표 4-5-17〉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8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6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39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6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4
	소계	50	39
	계	100	78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의 핵심적 사업의 하나인 전문상담교사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2006년도 기준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핵심인력에 대한 지도나 관리부문은 훌륭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들 인력에 대한 배치계획(2006년 기준 203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실적보고가 요청된다.

둘째, 학교상담운영체제 혁신강화사업의 대국민 및 이해당사자 홍보전략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향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홍보 자체가 학업중단학생의 예방 및 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상담교사 및 순회교사 등에 대한 평가,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적시에 확보될 것이 요청된다.

나. 과제명: 귀국학생 교육지원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78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33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5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추진일정준수 여부’와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는 모두 10점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 자료가 미흡하여 8점을 받았고,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 부처나 기관이 제시되지 않아 5점을 받았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홍보가 실시되지 않아 최저점인 0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에 있어 평가방식 및 내용이 미흡하여 6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KSL 참여교사들의 연수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90%이상의 만족 수준을 보여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국내적용 프로그램 대상학생의 만족 수준은 84%로 나타났고, 한국어반 지도교사 직무연수 대상교원 만족도는 80% 이상이 만족하여 30점을 받았다.

〈표 4-5-18〉 ‘귀국학생 교육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5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0
	소계	50	33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6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5
계		100	78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귀국학생 교육지원’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관련기관 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다문화관련 정책사업들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수 사업들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과 운영이 요망된다. 물론 이들 기관과의 상호 연계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심역할을 하는 일종의 허브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효율성을 기준으로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기 유학을 하다 다시 귀국하는 학생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방안 수립도 요청된다.

둘째,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전략을 갖춰 정책과제를 널리 알리고 인지도 제고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8.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가. 과제명: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확대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4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5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9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9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대상을 대체하여 대체지표를 활용하였으며 목표치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5-19〉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5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9
	계	100	94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확대’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업의 성격상 과제에 대한 홍보가 어렵다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 및 학부모 대상 사업의 인지도 파악은 필요하다. 특히 이들 이해당사자의 사업인지도에 대한 파악 여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전체의 성과를 종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완료하여 이를 가급적 빨리 적용,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평가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업의 종단적 효과분석을 향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제명: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이며, 집행의 효

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5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7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여러 소과제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9점을 받았다. 또한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공립병설유치원만이 목표치에 미달하여 총 28점을 받았다.

〈표 4-5-20〉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5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28
	소계	50	47
계		100	92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업에 따른 소과제들이 방대하고 다양하여 일관된 평가지표로 각 소과제들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평가과정에서 각 사업과

제들을 총체적으로 전체 사업성격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나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평가지표에 따라 소과제의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기도 하다.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일부 소과제의 경우에는 중심부서가 전체사업들을 평가지표에 따라 일관되게 실적들을 기술하여 보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생각이 든다.

둘째, 역시 과제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 관련 실적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9.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가. 과제명: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79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31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여부'에 있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키지는 않아 8점으로 평가되었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은 평가 내용 및 방식이 미흡하여 6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조사 실시여부나 근거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중간점인 7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사업성과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아 중간점수인 18점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제시될 경우 평가점수에 이에 대한 반영이 가능하다.

〈표 4-5-21〉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8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48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6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7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18
	소계	50	31
	계	100	79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는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관심이 있는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정책모니터링과 중간점검이 요구된다. 특별히 이러한 과정에는 학교당사자 혹은 교육청 등의 기관 내에서만 평가하고 점검할 것이 아니라 외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외부기관과의 외연을 적극적으로 넓히되 정책모니터링 등 내적 점검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만족도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 정책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와 성과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10.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복지정책 추진체계 구축

가. 과제명: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구축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94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45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49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10점을 받았으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는 인지도 파악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5점을 받았다.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계획대로 달성되어 30점을 받았다.

〈표 4-5-22〉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구축'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5
	소계	50	45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30
	소계	50	49
	계	100	94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구축’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인지도 제고 지표에 대한 계량적이고 객관화된 데이터 확보가 요청된다.

둘째,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객관화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과제명: 민간의 참여활성화

□ 평가결과 종합

8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100점 만점에 87점이며, 집행의 효율성 단계가 50점 만점에 50점, 그리고 성과 달성도 단계는 50점 만점에 37점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효율성 단계에서는 모두 10점을 받아 효율화가 최대화되었으며, 성과 달성도 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0점을 받았으며,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여 9점을 받았다.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은 지역별 대학생 멘토링 실태 파악이 80% 이상의 수준을 보였고, 국민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3.8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멘토링의 봉사학점 인정정도는 70% 이상으로 나타나 총 18점으로 평가되었다.

〈표 4-5-23〉 ‘민간의 참여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종합

(단위: 점)

사업 단계	평가지표		
	지표명	만점	평가
집행의 효율성	• 추진일정준수 여부	10	10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	10	1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모니터링 실시) 여부	10	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여부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0	10
	소계	50	50
성과 달성도	•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0	10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10	9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30	18
	소계	50	37
	계	100	87

□ 평가결과 함의 및 시사점

‘민간의 참여활성화’ 과제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부서 차원의 현황·실태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지역별 대학생 멘토링 실태는 어떠하며, 대학생 멘토링의 봉사학점 인정이 대학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지는 본 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정책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과제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만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활성화라는 과제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멘토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업 중심으로 확대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의 성격으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서의 정책의지와 계획이 요청된다.

제 5 장 평가결과의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제 1 절 평가결과의 종합논의

1. 분과·분야별 평가결과

가. 분과별 평가결과

총 5개 분과에 대한 평가결과, 관련복지정책분과가 9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88.7점, 사회복지서비스 87.5점, 사회보험 87.3점, 사회복지행정 85.3점의 순이었다.

〈표 5-1-1〉 분과별 평가결과

(단위: 점)

분과	평가결과
사회복지행정	85.3
기초생활보장	88.7
사회복지서비스	87.5
사회보험	87.3
관련복지정책	90.1

나. 분야별 평가결과

사회복지행정에는 총 4개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점수의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분야가 93.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85.0점,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82.0,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81.0점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에는 총 3개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자활지원이 9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초의료보장 89.0점, 기초생활보장 85.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총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서비스가 93.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가정복지서비스 91.5점, 아동복지서비스 88.0점, 장애인복지서비스 77.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은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92.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산재보험 87.5점, 건강보험 85.0점, 고용보험 84.0점으로 나타났다.

관련복지정책은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근로자복지정책이 95.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정보격차해소 93.0점,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91.0점,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 87.6점,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보육) 87.0점, 그리고 교육기회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86.5점으로 나타났다.

〈표 5-1-2〉 분야별 평가결과

(단위: 점)

분과	분야	평가결과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85.0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81.0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82.0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93.0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85.0
	기초의료보장	89.0
	자활지원	92.0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93.5
	장애인복지서비스	77.0
	가정복지서비스	91.5
	아동복지서비스	88.0
사회보험	국민연금	92.5
	건강보험	85.0
	고용보험	84.0
	산재보험	87.5
관련복지정책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91.0
	정보격차 해소	93.0
	근로자복지정책 추진	95.3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보육)	87.0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	87.6
	교육기회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86.5

2. 과제별 평가결과

가. 사회복지행정분과의 과제별 평가결과

사회복지행정분과는 총 6개의 과제가 평가되었으며, 각 과제별 평가결과는 <표 5-1-3>과 같다. 이 중 푸드뱅크사업 활성화가 94점으로 평가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가 92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89점,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82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이 각각 81점으로 나타났다.

〈표 5-1-3〉 사회복지행정분과 과제별 평가결과

(단위: 점)

분야	과제	평가결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89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81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81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82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	92
	•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94

나. 기초생활보장분과의 과제별 평가결과

기초생활보장분과는 총 3개의 과제가 평가되었으며, 평가결과는 <표 5-1-4>와 같다.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가 9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가 89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85점으로 나타났다.

〈표 5-1-4〉 기초생활보장분과 과제별 평가결과

(단위: 점)

분야	과제	평가결과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85
기초의료보장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89
자활지원	•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92

다. 사회복지서비스분과의 과제별 평가결과

사회복지서비스분과는 총 10개의 과제가 평가되었으며, 평가결과는 <표 5-1-5>와 같다. 이 중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9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92점, 국내입양활성화 90점, 가정관련 교육지원 88점,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와 아동권리의 증진 86점,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81점, 의료보장 확대 71점,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가 70점으로 나타났다.

<표 5-1-5> 사회복지서비스분과 과제별 평가결과

(단위: 점)

분야	과제	평가결과
노인복지서비스	• 소득보장 체계 구축	95
	•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92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70
	• 의료보장 확대	71
	•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81
	•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86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95
가정복지서비스	• 가정관련 교육지원	88
	• 아동권리의 증진	86
아동복지서비스	• 국내입양 활성화	90

라. 사회보험분과의 과제별 평가결과

사회보험분과는 총 8개의 과제가 평가되었으며, 평가결과는 <표 5-2-4>와 같다. 평가결과 국민연금 급여합리화가 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91점, 산재보험 수혜 확대 88점, 급여보장성 강화와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이 87점,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85점, 재정건실화, 부담형평성 확보와 고용안정사업 활성화는 83점으로 나타났다.

〈표 5-1-6〉 사회보험분과 과제별 평가결과

(단위: 점)

분야	과제	평가결과
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91
	•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94
건강보험	• 급여 보장성 강화	87
	• 재정건실화, 부담 형평성 확보	83
고용보험	•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83
	•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85
산재보험	• 산재보험 수혜 확대	88
	•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87

마. 관련 복지정책의 과제별 평가결과

관련 복지정책분과는 총 23개의 과제가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가장 많은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먼저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와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 지원이 97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구축,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확대,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가 94점,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과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가 93점,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장애인고용의 활성화가 92점, 최저소득층 지원 91점, 유아교육 기회확대 89점, 생활체육 활성화,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참여기회 증진, 특수교육 강화가 88점,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보육료 지원, 민간의 참여활성화가 87점, 저소득층 교육지원 86점, 청소년분야(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과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84점,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 79점, 그리고 귀국학생 교육지원과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이 78점으로 나타났다.

〈표 5-1-7〉 관련 복지정책분과 과제별 평가결과

(단위: 점)

분야	과제	평가결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 최저소득층 지원	91
정보격차 해소	•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93
	•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93
근로자복지정책 추진	•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97
	•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97
	•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92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보육)	• 보육료 지원	87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	•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	94
	•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84
	• 생활체육 활성화	88
	•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참여기회 증진	88
	• 청소년분야(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84
교육기회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 특수교육 강화	88
	• 유아교육 기회확대	89
	• 저소득층 교육지원	86
	•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87
	•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78
	• 귀국학생 교육지원	78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확대	94
	•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92
	•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	79
	•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구축	94
	• 민간의 참여 활성화	87

제 2 절 정책제언

1. 사회복지행정의 정책제언

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1) 과제명: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운영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은 2006년 들어 본격적인 전국 사업의 실시가 추진되었다. 참여복지5개년계획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상반기 종료하고 전국 사업확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부문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회복지행정 영역의 변화가 있었고, 이는 지자체 조직, 인력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주도하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 개편’의 형태로 전국 확대가 추진되었다. 앞서 평가된 바와 같이 이는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의 폐기 내지는 정책의 실패로 평가할 수 없다. 새로운 개편의 방식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추진체계상의 이유로 인하여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서 실험된, 조직개편안의 상당부분, 시범사업의 성과와 제한점이 반영, 보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운영’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부문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조직과 인력관련 사안은 중앙정부 소관범위를 벗어나지만, 이러한 개편방안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 부처로서 복지부가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수행방식의 설계, 업무특성에 따른 역할분담 방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요청되는 절차와 필요업무의 적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수행 방안의 지역특성에 따른 모델, 가이드라인 등의 제시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방안 및 복지직과 행정직의 업무분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안제시가 요청된다. 참여복지5개년계획에서는 5개년간 5,6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2) 과제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시·군·구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의 추진은 자치역량이 성숙하지 않은 제한적 여건 속에서 이제 정착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자원의 편차가 크고, 협의의 경험은 대체로 일천하므로, 상당기간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관 협의구조 정착의 중요한 기반으로 제안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비롯하여, 제도화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례 확산을 위한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나.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1) 과제명: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2003년 사회복지사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그 이후 시험위원 및 자격제도위원회를 통해 시행되었으나 2006년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시험으로 시험관리기관이 통합,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추진되어 왔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함양한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하여 무엇보다 사회복지실습기관 및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기관의 인증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쉽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증 받은 사회복지 교육기관 및 교육담당자를 통해 전문적인 사회복지교육을 받아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험출제, 사회복지사 등급제도 관리, 합격자 관리 등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하나의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경되어온 시험관리기관에 대한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통합성을 보완하여 전문적인 자격제도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1) 과제명: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설의 규모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국고지원(복권기금) 강화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시설 전환 유도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따라서 시설관리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노력들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서비스 특성이 제각기 다르므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획일적인 관리기준과 운영기준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사회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형평성이 있는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에 있어서는 시설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욕구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설 감독 및 지원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라.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1) 과제명: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도 민간복지참여 활성화의 성과는 매우 괄목하다고 하겠다.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 사업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사업이 양호하게 진행되어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둘째, 자원봉사에 사후관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봉사참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나 지역사회에 주

는 영향력 등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

2) 과제명: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뱅크사업은 매우 충실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이 확산되고 기탁의 제고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아직까지 기탁된 식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신선도와 맛과 양 등이 보증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음식을 기탁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기초생활보장의 정책제언

가. 기초생활보장

1) 과제명: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아온 규정중의 하나이다.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형태와 과거와 달리 변모한 부모자식 혹은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공공부조 대상 속에 포함시켜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재 부양의무자 관련 연구는 2003년 이후 크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와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폐지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인 수요와 대안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나. 기초의료보장

1) 과제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병의원에 대한 관리·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7년 7월 의료급여제도의 일부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의 초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것으로 의료 수요자에 대한 관리만으로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의료 공급자에 대한 관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의료 공급자가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요자에 대한 관리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급자에 대한 관리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관리 인력을 증원시켜 내실 있는 심사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전국 시·군·구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 즉, 의료급여 관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기별로 해당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병의원을 신고하고, 이들 기관을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방문실사를 실시한다.

둘째, 의료급여 관리사를 사례관리 책임자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 관리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이다.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최소한 3개의 다른 영역 담당자가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담당자의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 개별 기관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접근할 경우 업무운영의 비효율성과 서비스의 중복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기본적으로 각 담당자의 업무 영역은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각의 영역을 엄격하게 나누어 담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책임자(case manager)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사례관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책임자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전체적인 운영체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일차적으로 접촉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 요구를 판정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에 연계하거나 읍·면·동 사회복지사,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모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으나 여기서 필요한 자원 연계는 의료급여 관리사로부터 연계 요청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책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 담당자의 기본 역할로 보거나, 의료급여 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관련된 업무만 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례관리 책임자는 의료급여 관리사가 되어야하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다. 자활지원

1) 과제명: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과제의 가장 큰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이며, 궁극적 목표는 ‘근로를 통한 탈빈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근로 중심 원칙’, ‘상호주의 원칙’, ‘노동의 가치를 중시’ 하는 이념을 기초로 자발적 참여와 사회 연대성, 민·관의 협력에 기초한 제도설계와 사업수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앞서 살펴 본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상의 목표와 원칙에 따른 ‘자활지원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법적 근거에 따라 근로빈곤층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에 준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와 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제도’로 법적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에게 온전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중심제도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활사업은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기초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지역단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서비스 연계기능을 구축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자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셋째,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급여에 관한 규정, 전달체계인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보장기관별 성과평가, 정책수혜자인 대국민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법제화하고, 객관적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제언

가. 노인복지서비스

1) 과제명: 소득보장체계 구축

‘소득보장체계 구축’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와 급여수준이 점차 확대될 것임으로 이에 대비한 효율적 재원마련 및 자치단체 간 재정분담 문제 등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단지 세수입에 의존하는 측면의 재원조달보다는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한 가입기간 부족에서 발생하는 연금급여의 사각지대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과제명: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과제의 평가를 통해서 추진하여야 할 정책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중등도 이상의 기능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능상태가 경증에 해당하는 노인인 경우에는 보험제도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여야 필요이상의 급여서비스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을 비롯하여 각종 노인복지서비스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적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시설의 방만한 운영을 통제하면서도 적정수준의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보전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원가에 충실하면서도 경영의 효율성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생활시설(요양시설)은 생활권역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충족이 가능하지만, 재가서비스기관은 전반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시설의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친구나 이웃 등 비공식자원의 활용방안과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급여체계의 개선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장애인복지서비스

1) 과제명: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수당의 경우, 2007년부터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지급수준도 중증은 7만원에서 13만원(차상위 9만원)으로, 경증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가구의 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100% 보전하는 수준인 16만원까지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의학적 손상 중심의 연금수급요건을 개편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개념에 소득가득능력이나 직업수행능력을 반영함으로써, 기능 손실이란 의학적 측면에서는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업수행능력이나 소득가득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장애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입 이전의 장애에 대해서 일부 수급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장애일지라도 가입이후 그 장애의 악화로 인해 수입 있는 활동에 종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면 일정한 최소가입기간(예컨대 3년 내지 5년)을 설정하여 충족하면 장애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활사업의 전개 및 일자리창출사업 강화 등을 통해 기초보장수급계층의 탈빈곤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존 제도의 개선 외에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을 제거하여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와 대등한 소득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수당 혹은 사회부조방식의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과제명: 의료보장 확대

‘의료보장 확대’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의료보장 확대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재활병상 충족율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2006~2009년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센터 확충 계획을 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는 인천과 강원지역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타 권역에서도 조속히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공공 영역에서의 재활병원 확충과 더불어 의료법의 요양병원제도 속에 중증 장애인의 중장기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전문병원’ 체계를 도입하고 재활수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최근 민간 영역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

중 일부를 재활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사업에서의 획기적인 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과제명: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의 지역사회로의 참여 및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선 최중증의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100% 수용하기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지속적인 설치가 필요하며, 더불어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의 요양시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 요건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신규 설치를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공급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러한 양적 확충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지역사회기관 간 네트워킹 구축이다. 시·군·구 사회복지과,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기관들 간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사례관리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과제명: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 및 사회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편의증진법 등에 의무 설치토록 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의 편의에 맞게 100%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100%로 제고하고, 근린생

활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편의시설의 질적인 측면, 즉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편의시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한 교통수단·시설이 대폭 확충되도록 저상버스를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2008년까지 도시철도 역사 내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다. 가정 및 아동복지서비스

－ 가정복지서비스

1) 과제명: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사업이 이양되어 2006년 현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0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2005년 이후 여성가족부는 사업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센터 수를 확장하였으며,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바와 같이 전문인력 확충, 시설 보강,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질적인 수준은 떨어지고 불균형적으로 양적인 성장만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센터의 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사업 계획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처우수준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전문인력을 모집·교육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의 선진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과제명: 가정관련 교육지원

가정관련 교육지원은 중앙 및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준비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을 개발·보급하여 가족문제 및 가족해체를 사전예방하고 가족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목적과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홍보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가정관련 교육지원’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 집행에 있어 사후관리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평가 등을 통해 가정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저출산 장려와 고령화 대비 등 가족정책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문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 가족 내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아동복지서비스

1) 과제명: 아동권리의 증진

아동권리의 증진은 아동이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의무로

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전체 사회구성원은 물론 국가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인정으로부터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출발선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인식하여 권리보장을 위한 기반조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권리의 증진’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의 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아동권리적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역량이 사회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천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동권리에 대한 보다 전략적 홍보와 교육활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아동권리의 옹호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도 강조된다. 셋째,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정책의 추진과정 전반에서 행정체계, 예산집행이 아동권리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권리 증진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과제명: 국내입양 활성화

‘국내입양 활성화’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는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입양은 보호대상 아동의 최우선 이익(Best Interests of Children)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출생한 원가정(family of origin)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종합 대책이 마련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종합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실천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양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같은 현금지원 위주의 제한적 정부지원이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양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정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사회보험의 정책제언

가. 국민연금

1) 과제명: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둘째,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다층소득보장제도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업연금제도인 퇴직연금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 비적용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를 위한 ‘2층 연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개인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 과제명: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인정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금번 법개정을 통해 출산 및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업, 질병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인정제도를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 및 기간에 대해

서는 타 사회보험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둘째, 가급급여의 현실화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008년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급자의 가족·부모로서 가급연금(2007년, 연 133,470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금세기 최대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제도 혜택을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가급급여의 현실화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의 일정수준(약 25%)까지는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현실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나. 건강보험

1) 과제명: 급여(보장성 강화)

‘급여(보장성 강화)’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보험재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무한정의 보장성 강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에 대한 철학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보건복지부 및 소수전문가 의견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과제명: 재정(재정건실화, 부담형평성 확보)

‘재정(재정건실화, 부담형평성 확보)’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재정 안정화 문제를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보험 가입자에 대한 징수율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건강보험공단의 책임경영제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국을 6개의 지역 거점으로 구분하여 거점본부별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매년 재정 운영의 성과를 공개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부당청구가 확인된 병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고용보험

1) 과제명: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고용사업사업 활성화’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은 참여정부 들어서 사업의 적용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사업내용이 다양화되어 사업의 집행실적은 향상되었으나 사업의 다기화와 분할로 인하여 전체적인 효율성은 떨어지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취약계층별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분류 및 추진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히 청년층의 취업과 고용안정사업, 중·고령자의 정년연장과 고용안정에 대해 큰 틀의 정책디자인과 장기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새롭게 짜여져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여왔으나 다기화되고 복잡한 사업체제로 인하여 그 효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상향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다기화된 사업의 통폐합을 통하여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업의 일방적인 확대나 지원수준의 상향조정은 사중소실이나 대체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부가효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중인 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과평가와 적절한 환류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과제명: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취약계층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인센티브제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대기업 근로자 중심의 재직자 훈련비용 지원제도 위주의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서는 실업자, 신규 미취업자, 영세 지역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 실시를 통해 취업능력향상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사업 시스템에서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훈련사업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매년 감사에 대비한 일회성의 평가를 반복함으로써 평가자료와 결과가 누적되지 못하고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사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사업평가 자료DB의 구축, 체계적인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산재보험

1) 과제명: 산재보험 수혜 확대

‘산재보험 수혜 확대’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하여 노동부를 위시한 관련부처에서는 노·사단체간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산재보험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무면허 건설공사장에서도 많은 산업재해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동자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무면허 공사장에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과제명: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환자에 대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요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 및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 자질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시설물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특히 증가하고 있는 출퇴근 교통사고 재해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를 시도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참여복지 관련 복지정책의 정책제언

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1) 과제명: 최저소득층 지원

‘최저소득층 지원’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국민임대주택이 기본적으로 소득 1~4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능력 등을 감안,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하나, 공시한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여 주거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소득 외에도 가구원수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복지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임대주택 사업비중 사업주체의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과도한 건설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의 90%이상을 건설하고 있는 주공의 경우 2005년 회사채 발행이 약 4조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성이 염려된다. 따라서 재정안정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명칭의 공공임대주택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며, 입주 자격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임대주택 내 사회적 혼합을 달성하고, 공공임대주

택사이의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다양한 전달주체로 인해 서비스 수혜의 차단현상·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복지센터 내지는 자치구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나. 정보격차 해소

1) 과제명: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본 과제는 당초 계획된 목적과 일정에 따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향후 장애인·고령자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보조기기보급을 위해 지속성 있는 전달체계 구축에 예산과 인적·물적 조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본 사업의 인식 개선과도 관련이 있다. 매년 일회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기기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점은 장애인·고령자 본인이 어떤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지 대다수 모른다는데 있다. 정보이용시설이나 체신청에 보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상시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고령자가 보조기기를 실제 작동해 보고 원하는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둘째, 보조기기보급을 위한 전달체계는 보조공학 전문가(재활공학 전공자 또는 자격 있는 보조공학사)의 투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 장애인·고령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보조기기의 요구 평가, 선택, 훈련·안내, 적용, 추후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으면 보조기기의 미사용, 중복 수혜 등 낭비와 비효율적 예산 사용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해결책이 지역별로 자격 있는 보조공학사의 배치 및 활용이다.

셋째,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 지원 예산과 품목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보조기기

의 상품화와 국산화를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 반도체 강국으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에 IT와 유비쿼터스 대한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들은 대부분 수입제품이다. 정보통신 보조기술을 향후 국가 산업으로 지정하여 보다 우리 국민의 신체와 감성, 문화에 적합한 보조기술 개발과 상품화로 아시아 시장형성의 주도 국가가 되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과제명: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과제는 당초 목표에 근거해 적절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향후 사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소외계층이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실행이 필요하다.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비문해자 등은 정보화교육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이 교육을 받아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의지 없이는 수요 창출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보다 개선된 컴퓨터들이 속출하는 것에 대한 대비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컴퓨터는 세상과의 소통,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수요가 많은 만큼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시·청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별로 강사진 구성과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근로자복지정책 추진

1) 과제명: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안정자금대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지원액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5,855명에게

387억원, 2006년에는 5,110명에게 338억원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되었다. 또한 대부지원 선정율 수준도 60%를 조금 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선정자를 확대하는 것이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도모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둘째, 용자대상 선정 횟수를 융통성 있게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매월 1회 용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급작스럽게 용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선정을 월 2~3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과제명: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저소득근로자 1가구 1인당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 근로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민간복지시설 이용대상 시설이 숙박·체육·문화시설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는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혜택과는 다소 관련성이 약하므로 의료·보육·교육 시설 등으로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자가 다양한 생계 및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과제명: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과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고용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시행되고 있어 장애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취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국한되어 있다. 비록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장애인고용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민간부문기업에서는 고용부담금을 지불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완전경쟁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게 보다 강화된 장애인고용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이 노동시장으로 통합·고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창업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1) 과제명: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부모들의 경우도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안다고 하여도 막연하게 아는 정도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액수를 아는 비율은 높지 않다. 일반 국민들 중에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보육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고, 또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므로 만족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보육사업 홍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부모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실 비용의 지원은 그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도 만족도 제고의 요인이 된다.

셋째, 사업별 목표치의 설정과 예산 확보 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자료에 기초하고 주변 환경의 변동요인을 잘 파악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의 부족이나 미사용 예산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유산 분야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유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접근한 문화향수 확대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 구현 사업은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적치 또한 대부분 90%를 전후하여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사업 목표 아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만 전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시설이나 생활체육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는 업무의 시행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 시작 시기가 늦추어짐으로써 후반기에 몰려 사업이 추진되는 점이나, 대국민 및 관계당사자들에 대한 홍보의 소극성, 프로그램의 세분화 및 전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된다. 셋째,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복지관광 프로그램 등의 수혜대상 범위 및 규모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산출을 통하여, 사업이 보다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문화 분야에서의 복지 구현 사업성과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소년분야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사업은 1990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간 학습 격차 해소 및 지역 청소년 건전 육성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관련법령과 예산·시설·인력 등의 인프라 부재로 인하여 어렵게 추진되어 왔다. 2006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추진일정을 준수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또는 청소년 관련시설과 연계하여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청소년분야(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청소년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양극화의 세습을 차단하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청소년 공부방에서는 학습교육 이외에도 심리·사회·문화·정서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공부방 이용 후 사후관리 및 평가내용을 점검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본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식과 평가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평가의 형평성, 객관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반영하여 청소년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공부방을 지원하는 담당 부처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공부방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바.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저소득, 장애인(장애학생 포함), 학업중단자, 농산어촌 학생 등 전통적인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은 현재 일정한 정책과제의 틀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각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① 각 교육소외계층은 정책영역에서는 뚜렷이 범주화되고 구분될 수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중복적인 대상자일 수 있다. 예컨대 빈곤계층 중에는 지역차원에서 농산어촌지역이 집중될 수 있고, 대상중심으로는 장애아를 둔 부모가 저소득층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부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부서별 정책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업별·부서별 협력전략 및 체계 등 정책추진체제에 대한 검토와 구안이 요구된다.
- ② 유아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평생교육) 교육복지 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각 생애발달단계의 정책들이 다

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떤 정책적 효과와 성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발달단계 간 정책연계성과와 그에 따른 고려·평가도 요구된다. 5개년계획이란 중장기 정책이니 만큼 유아에서 아동(초등), 아동에서 청소년(중등), 청소년에서 청년(고등)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연계성과 정책성과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구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책대상자가 불일치할 수 있으나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다.

③ 전통적인 교육소외계층 외에 새로이 대두하는 신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발굴과 대처가 요구된다. 최근 새터민·외국인노동자·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 등이 새로 등장하는 신교육소외계층이며, 이외에도 ‘이혼가정 자녀’, ‘위기아동 및 청소년(은둔형 외톨이, NEET족, 신가출성장세대 등)’ 등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신교육소외계층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대처가 요망된다. 특히 이와 관련한 정책사업들은 교육인적자원부 영역의 학교정책과 함께 타 주무부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처간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참여복지5개년계획 교육부문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가시적이고 실증적인 정책성과 및 결과에 대한 확보와 관리가 요구된다.

① 국민과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추진, 수행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가시적이고 실증적인 정책성과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부서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② 사업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달성수준 역시 평가기간 내에 실증적인 성과를 확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사업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달성수준 지표 개발에 있어 해당 부서 담당자의 이견(담당자의 교체 및 순환근무 등으로 인해 빚어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직전 다시 해당 부서 담당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참여복지5개년계획평가를 EBP(Evidence-based Policy) 중심의 평가체제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 ① 참여복지5개년계획 등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각 부처를 아우르는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구현을 위한 평가제도'로 본 평가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 ② 주지하다시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은 정책근거가 되는 정량적·정성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EBP(Evidence-based Policy)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영국은 1990년 말 이후 공공정책에서 "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강조하며 '정부의 현대화(Modernizing Government)'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미국연합(U.S. Coalition for Evidence Based Policy)'을 중심으로 EBP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 ③ 국내에서도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정책 추진체제의 서비스 역량 개선을 위한 평가체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현 참여복지 5개년계획 평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부처별 사업 중심 그리고 정책시행주체 중심의 평가체제 성격이 있는 바, 부처별 상호 연계협력 가능한 지점의 정책을 발굴, 지원하는 평가체제와 수요자가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를 보다 더 보완하는 평가체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공동성·윤기웅, 「범부처 성과관리와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자료집, 2007.
- 김선명, 「공공기관 평가에서 균형성과표(BSC) 도입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의 통합 행정혁신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2), 2006.
- 김재훈·최홍석,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07.
- 박석희 외, 「조직성과관리를 위한 고객만족도 평가지표의 설계와 측정: 교육인적자원부 BSC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06.
- 박성복, 「지역발전격차의 분석 시론: 1994년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2호, 1996.
- 박중훈, 「성과평가제도 및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4.
- 신상열·양혁승, 「성과주의 인사제도 구현을 위한 팀단위 평가제도」, 경영교육연구, 9(1), 2005.
- 윤광재, 「정부산하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문화국민생활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자료집, 2006.
- 윤수재 외, 「정부성과평가시스템에서의 BSC 모델 활용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5.
- 최성락·박민정, 「정부부처 성과관리에서의 톱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0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에 있어서 BSC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005.

- Chelimsky, Eleanor, *Old patterns and new directions in program evaluation*. In Eleanor Chelimsky (ed.). *Program Evaluation: Patterns and Directions*, Washington, D. C.: The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1985.
- Gray, Andrew, Bill Jenkins and Bob Segsworth, *Perspectives on budgeting, auditing, and evaluation: An introduction*, In Gray, Jenkins & Segsworth. 1993.
- Kaplan, R. S. and Norton, D. P., *The Balanced Scorecard-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1992.
- Lynch, R. L. and Cross, K. F.(1995). *Measure Up*. Blackwell, 1995.
- Milkovich, G. T. and Boudreau, J. W., *Human Resource Management(8th ed)*, McGraw-Hill: New York, 1997.
- Rogers, S.,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The Route to Best Value*. London: Financial Times Pitman Publishing, 1999.

부 록

☐ 각 분야별 과제의 세부 평가결과

- 사회복지행정분야
- 기초생활보장분야
- 사회복지서비스분야
- 사회보험분야
- 관련 복지정책분야

1. 사회복지행정

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1) 과제명: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6년 6월에 종료되었다. 전국 확대는 2005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재조정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에서 시범사무소의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200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군·구-읍·면·동’ 체계 개편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는 추진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취지의 전달체계 개편이 일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는 5.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 및 관리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충원 등 소요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매월 자체평가회의 및 운영현황 등을 통하여 시범지역 내의 상호 작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충원현황 파악 및 독려,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②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 개편”으로 추진되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서비스혁신단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 차원, 해당 시·군·구 차원의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졌고, 이후 주민생활지원 행정개편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및 주민생활지원 행정개편을 추진하면서 평가연구용역, 지역별 자체평가 회의, 연찬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자체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1차·2차년도 평가연구용역 결과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5점 척도로 조사된 수치는 평균 1~2점 사이로서, 환산하면 80~90% 미만의 만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 2006년 신규충원 인원은 711명으로서 2005년 말

현원 9,094명 대비 7.8%의 충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4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사회복지직공무원 신규 배치 인원	2006년 시·군·구별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 인원
	㉓ 2006년 신규충원 사회복지직이 2005년 정원대비 10% 이상
	㉔ 2006년 신규충원 사회복지직이 2005년 정원대비 7.5~10% 미만
	㉕ 2006년 신규충원 사회복지직이 2005년 정원대비 5~7.5% 미만
	㉖ 2006년 신규충원 사회복지직이 2005년 정원대비 2.5~5% 미만
	㉗ 2006년 신규충원 사회복지직이 2005년 정원대비 2.5% 미만

2) 과제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2006년 계획안 가운데 전국 시·군·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정에서 이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행자부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의 부처간 통합추진체계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서비스 행정전산망의 전반적인 체계 속에 포함,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②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배정되지 않았으나,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교육 등이 추진되었고, 시·군·구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있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복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중앙 차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국대회 행사 지원, 시·군·구 협의체의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경비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복지협의회 운영 공무원 교육, 민간위원 교육, 민간간사 교육 등으로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현장을 목소리를 청취하여 업무수행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복지협의회 운영 매뉴얼 개발 시에 관계공무원, 민간간사,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책변화를 반증하는 내용으로서, 법 시행 2년 만에 전국 232개 지자체에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실무분과의 구성율도 91%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뚜렷한 정책의 변화'라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20개 시·군·구의 지역대회」 개최를 유도하고, 지역대회를 통한 2006년 7월 전국대회를 합동 추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관계공무원, 민간위원, 민간간사 등 교육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

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의 수준 및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를 통해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어 자체점검의 내용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와 만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최저점인 2점을 부여하며, 향후 이를 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М·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 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대표협의체 회의 현황 자료가 파악된 226개 시·군·구 중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된 시·군·구는, 1회 이하 개최된 26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200개 시·군·구였으며 이는 88.5%에 해당된다.

또한 실무협의체 회의 현황 자료가 파악된 214개 시·군·구 중 회의가 3회 이상 개최된 시·군·구는, 2회 이하 개최된 100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114개 시·군·구였으며 이는 53.3%에 해당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각각 12점,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빈도	2006년 시·군·구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회의 회수
	⑮ 1년간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이상 개최한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90% 이상
	⑫ 1년간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이상 개최한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75~90% 미만
	⑨ 1년간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이상 개최한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50~75% 미만
	⑥ 1년간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이상 개최한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25~50% 미만
	③ 1년간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이상 개최한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25% 미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빈도	2006년 시·군·구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 회의 회수
	⑮ 1년간 실무협의체 회의 3회 이상 개최한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90% 이상
	⑫ 1년간 실무협의체 회의 3회 이상 개최한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75~90% 미만
	⑨ 1년간 실무협의체 회의 3회 이상 개최한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50~75% 미만
	⑥ 1년간 실무협의체 회의 3회 이상 개최한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25~50% 미만
	③ 1년간 실무협의체 회의 3회 이상 개최한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25% 미만

나. 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1) 과제명: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제도발전위원회는 2003년 처음 실시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련, 시험의 안정정착 등을 위해 구성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시험위원’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 의한 ‘자격제도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어 사회복지제도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어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보완(문제은행방식전환) 과제는 2006년 4월 세무사시험 중복출제 사고 발생을 계기로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시험 통합관리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험관리기관 통합으로 계획변경(대통령지시사항)되었다. 따라서 2006년도 계획으로 제안되었던 2개 과제에 대한 평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격제도위원회” 운영, “국가시험의 보완” 모두 지연사항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위하여 시험관리기관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자격관리와 원서접수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험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은 2006년도에 8억원이 배정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상황변화에 대한 사례로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사 양성과정’과 사이버교육 활성화로 20만명 이상 사회복지사가 배출된 현재 단기양성과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급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②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보건의료 국가시험원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등 협

조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관련사이트 <http://kasw.or.kr/> 국가시험 및 자격관리 안내)의 국가시험 및 자격관리 안내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반영한 것으로 자체평가를 가름한다고 제시되고 있어, 자체평가 실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1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

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7)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만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저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 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2006년 사회복지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2회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사회복지인력 실태조사 실시여부” 10점, “사회서비스 자격제도 의견 수렴 여부” 6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보완 정도”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사회복지인력 실태조사 실시여부	⑩ 실시 ② 미실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의견 수렴 여부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⑩ 1년간 3회 이상 ⑥ 1년간 1~2회 ② 1년간 미실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보완정도 (국가자격시험 통합 일원화)	⑩ 보완 완료 및 실시 ⑧ 보완 완료했으나 미실시 ⑥ 보완 중 ④ 보완 방향 수립 ② 미실시

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1) 과제명: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동 과제는 2004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의 여건변화에 부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매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내용을 변경하는 등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지연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에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는데,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기 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점차 그 예산액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2004년 506억, 2005년 230억, 2006년 200억으로 지난 3년간 총 936억원이 지원되었다. 노인·장애인·아동·부랑인 등 사회복지시설별로 총 71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신축·매입·증개축·개보수·환경개선 등의 사업집행을 통해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지속적으로 제기 및 지적되고 있는 미신고시설 생활자의 인권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2004년에는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보완하였으며, 2005년에는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 대책 안내, 미신고시설 후속관리대책 및 개인운영 시설 관리 안내를 마련하여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이 대형안전사고 예방 등 미신고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미신고시설 관련 대책 마련시에는 “한국민간복지시설협의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각 시·도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노인·아동·장애인 등 관련 사업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책자 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 등 중요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사 보도자료 배부, 관련

단체 및 협회에 해당자료 발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인지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제반 사회복지시설은 매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에 제1차 평가가 실시되었고 2004년에 제2차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그리고 2007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법령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인권보호 및 서비스의 질, 시설 및 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5개 영역에 대해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을 평가한다. 평가목적, 평가영역, 평가대상시설,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반영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평가내용과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평가지표가 현실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이 미흡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위탁주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7)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법인운영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 및 소방방재관련 자금 지원, 미신고시설의 신고 시설로의 전환조치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시설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각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 실적은 없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 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착안사항을 평가척도로 설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령은 2004년 9월이 이미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되었다.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집행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 강화를 위해 200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하였으며, 예산·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법인설립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시스템을 보급하고 국가복지정보시스

템과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방분권교부세 관련법을 2004년 12월에 제정하여 국고지원방식을 개선하고 복권기금 20,000백만원을 지원하여 미신고(개인운영) 복지시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5점에 해당된다.

2003~2006년의 미신고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03년 이후 미신고시설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44.4% 감소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5점에 해당된다. 두 평가지표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부표 1-1〉 연도별 미신고시설 수(1월 말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2003	2004	2005	2006
미신고시설 수	1,044	1,074	1,209	672
증감율	-	2.9	12.6	-44.4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7.

평가지표	평가척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 시설운영비·생계비 집행 신용카드사용 강화 • 예산·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표준운영비 및 체감예산제도 도입 • 미신고(개인운영)복지시설 발전방안 마련 <p>⑮ 평가척도 중 4개 이상 실시 ⑫ 평가척도 중 3개 이상 실시 ⑨ 평가척도 중 2개 이상 실시 ⑥ 평가척도 중 1개 이상 실시 ③ 평가척도 모두 미실시</p>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증감율	<p>$\frac{[(\text{현연도} - \text{전연도} \text{ 신고시설전환 미신고시설수}) \div \text{전연도} \text{ 신고시설전환 미신고시설수}] \times 100}{\text{}}$</p> <p>⑮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 ⑫ 전년대비 15~30% 미만 감소 ⑨ 전년대비 0~15% 미만 감소 ⑥ 전년대비 15~30% 미만 증가 ③ 전년대비 30% 미만 증가</p>

자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07;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라.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1) 과제명: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본 사업은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여부와 공적 지원의 확대 여부를 파악한 것이다. 평가 결과 모든 과제가 일정 계획에 맞게 추진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상해보험가입, 인증요원 육성 및 지원, 카드리더기 및 배지 제작, 통계연보 발간, 자원봉사대회 등 자원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운영방안, 사후관리 등이 적절하였는지를 평가하였는데, 사후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자원봉사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②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험수기 공모와 자원봉사자 ID카드 소지자 우대가맹점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

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국민과 정책고객에게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홍보와 정책자료를 발송하였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제고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최종점검 자체평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봉사현장 요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자원봉사활동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봉사예의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만족수준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 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착안사항에 제시된 5개 항목이 모두 시행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전산망의 통합화 시행 • 자원봉사활동 인증센터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자원봉사관리자 수당 지급 •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 자원봉사 참여율 및 경제적 가치조사 실시
	⑩ 평가척도 중 5개 모두 시행
	⑨ 평가척도 중 4개 시행
	⑧ 평가척도 중 3개 시행
	⑦ 평가척도 중 2개 시행
	⑥ 평가척도 중 1개만 실시 또는 미실시

2) 과제명: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장비지원, 푸드뱅크 지원체계 구축, 운영비 지원, 새로운 푸드뱅크 정착 등 사업이 추진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자원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운영방안 등은 적정하였으나,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이양된 푸드뱅크 사업의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실

시하였는데, 특히 기부식품 물류비용 지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우수 푸드뱅크 시상식 추진 등을 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전산체계를 구축하였는데, 특히 기존 서버장비의 보강, 무료급식소의 협조 하에 기부식품 나눔 행사 등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 시행하여 홍보하였고,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중 홍보하였으며 홍보물품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상승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전국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복지넷을 운영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푸드뱅크 기부업체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체의 의견은 수렴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참여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점검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푸드뱅크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모두 실시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⑮ 제정
	⑨ 법안 제정 중
	③ 미제정
푸드뱅크 지원체계 구축	⑮ 대표전화서비스 가입, 서버장비 보강,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푸드뱅크 홍보 모두 실시
	⑫ 위 5개 중 4개 실시
	⑨ 위 5개 중 3개 실시
	⑥ 위 5개 중 2개 실시
	③ 위 5개 중 1개만 실시

2. 기초생활보장

가. 기초생활보장

1) 과제명: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참여복지 계획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 조사방식개선,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라 할 수 있다. 2006년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판정기준 완화는 계획대로 착실하게 이루어졌으나, 부양의무자 조사방식에 대한 개선은 주어진 자료에 의할 경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연사항이 1개가 발생함에 따라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자원의 효율적 집행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해 목표된 것이 명확히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기에 사용하고 사후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본래 계획에 목표하고 있던 시기보다 조기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예산에 대한 준비(2006년 2,200억원 반영)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에 있어서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사후적으로 중앙현장 점검(2006년 하반기 14회)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사항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평가척도로 제시된 사항이 모두 이루어짐에 따라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목표를 설정하고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여건에 맞게 정책을 변경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되어진 사항을 점검·수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양의무자 개선은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계,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를 목표에 비해 조기에 반영한 것은 좋은 점이라 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해 사후적으로 14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개선이후의 상황을 대비하였다는 점도 관리를 위해 잘된 측면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를 위해 주어진 예산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개선을 위한 상황변화 및 모니터링은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예산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음에 따라 정책적 효율성도 충분히 개선시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판정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과정 중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은 물론 미리 예산도 마련하는 등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준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일선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의견수렴과 홍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판정기준 완화 이후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배포(60만부) 하였으며, 별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20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중앙부처, 지방행정기관, 언론, 국회, 금융기관 등에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국민들과 수급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제도 개선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및 방식을 살펴볼 경우, 현재 평가는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라는 단위과제로 복지부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살펴볼 경우 평가내용이 큰 단위사업 내의 하나의 내용으로 평가됨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라는 자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8)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경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일반국민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100%만족, 탈락시 사유에 따라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점수인 7점을 부여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 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판정기준의 완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던 사항이었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 하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함에 따라 사각지대의 축소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평가지표를 근거로 사각지대 축소효과를 분석시 2006년 기준 약 8.7% 정도의 빈곤감소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부양의무자

1)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할 경우 2005년 빈곤가구율(1인 가구 및 농어가 가구 제외)은 11.7%,

기준을 개선하고 판정기준을 완화하였지만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4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기준완화에 의한 사각지대 축소효과	$\left[\frac{\{2006\text{년도 빈곤가구율} - (2006\text{년도 수급가구수} \div 2006\text{년도 전국가구수})\} - \{2005\text{년도 빈곤가구율} - (2005\text{년도 수급가구수} \div 2005\text{년도 전국가구수})\}}{\{2006\text{년도 빈곤가구율} - (2006\text{년도 수급가구수} \div 2006\text{년도 전국가구수})\}} \times 100 \right]$
	㉔ 사각지대 축소효과가 9.7~12.0% 미만 ㉒ 사각지대 축소효과가 7.2~9.6% 미만 ㉐ 사각지대 축소효과가 4.8~7.2% 미만 ㉎ 사각지대 축소효과가 2.4~4.8% 미만 ㉆ 사각지대 축소효과가 0~2.4% 미만

나. 기초의료보장

1) 과제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장기의료이용자의 올바른 의료이용관행 지도,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 승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를 2003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하여 2004년 79명, 2005년 150명, 2006년 234명으로 확대 배치하였다. 연도별로 목표로 제시한 사업목표량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2006년은 11.2%로 나타남. 수급자 및 전국 가구수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2005년 및 2006년 자료를 사용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요원을 연도별로 확대하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가 체계적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제, 선택 병·의원제 등의 새로운 제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④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②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이용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활용하여 원활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별로 관련 홍보자료를 발송하여 정책 변화 등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였다. 다만,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 인지도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사업 추진과정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진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최종결과를 점검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는 의료이용을 제한시키므로 이해 당사자는 사업운영에 대해서 다소 불만족스러울 수 있으나 일반 국민 및 언론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들의 만족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М·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 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당초 2006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사례관리요원 1명 이상 배치를 목표치로 설정하였는데, 이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확대 목표 달성율	(사업실적:목표치)×100
	⑩ 사례관리요원 확대 목표치 대비 100% 이상
	⑭ 사례관리요원 확대 목표치 대비 95~100% 미만
	⑮ 사례관리요원 확대 목표치 대비 90~95% 미만
	⑫ 사례관리요원 확대 목표치 대비 85~90% 미만
	⑥ 사례관리요원 확대 목표치 대비 85% 미만

다. 자활지원

1) 과제명: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참여복지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04년부터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시작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활전담공무원의 의무배치 및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6년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 일자리 제공,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자활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및 중앙자활센터 설치를 포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2006. 12. 28)으로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자원의 투입과 집행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자활지원을 위한 배정금액은 260,821백만원이며 집행액은 251,240백만원으로 집행률 96.4%를 보였으며, 복권기금은 배정금액 65,900백만원, 집행액 61,198백만원으로 92.9%의 집행률을 보였다. 또한 매월 예산의 집행실적 및 과부족액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 예산을 조정하고(2006년 2회 변경내시 실시),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며, 시장진입이 가능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된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자활센터의 규모와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였고, 매년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의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자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자활사업 평가를 통해 나타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의 부족에 대해 행자부와 계속 협의하고 지자체를 독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과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매년 확대한 점, 자활대상자 선정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추진 및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근로능력 판정 매뉴얼 개발 등은 정책이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모니터링과 상황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외에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켰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u>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u>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자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함에 있어 자활사업 지침 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칭)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국민과 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에게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내용을 홍보하며, 자활사업 추진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실시 기관별로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 및 리플렛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자활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과 방식을 살펴본 결과, 분기별로 자활성공률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평가 방식과

평가 내용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역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8)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는 2007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의 경우, 2006년 조사 결과 가사·간병도우미 참여자의 75.8%, 수혜자의 83.2%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79.5%의 만족도를 보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 가사·간병도우미 만족도는 6점에 해당된다. 단,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제외된 것으로 추후 평가에서는 자활사업, 가사간병도우미를 모두 반영한 만족도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공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공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 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자활지원 확대와 지원체계 정비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대상

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지원 확대 및 강화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에 3만명으로 나타나,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자활사업지원 확대 및 강화	2006년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총 수
	㉓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수가 3.0만명 이상
	㉔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수가 2.9~3.0만명 미만
	㉕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수가 2.8~2.9만명 미만
	㉖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수가 2.7~2.8만명 미만
	㉗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수가 2.7만명 미만

3. 사회복지서비스

가. 노인복지서비스

1) 과제명: 소득보장 체계 구축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경로연금제도개선을 위해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2004년 저소득노인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었으며, 2005년에는 경로연금 확대개편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의 순차적인 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 추진, 실시하게 된 것은 괄목할 만하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사업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연차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로연금제도의 취지가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들의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반 고령노인의 소득보장체계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6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급여대상자 선정을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 혹은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대상자와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더구나 제도가 적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 차등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⑤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제도의 목표가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재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측면에서 경로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기초노령연금으로 방향전환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기민하게 대처하였다. 즉,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되어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 등을 상황변화에 맞게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제도 내 국고차등보조제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였다. 이러한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노인인구비율 등을 감안하는 국고차등 보조 방안 마련과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부담 최소화 및 효율적인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법령 발의 후 신속하게 다양한 욕구 출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부처간 회의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대응 연구를 신속히 수행하였다.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정자치부 시·군·구 운영지원센터, 16개 시·도 등과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재산 실태조사를 실시(2006. 8. 14~9. 8)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도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하였는데,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 관계부처 회의(2006. 9), 경제상황 점검회의(2006. 9), 전문가 자문회의(2006. 10), 관계부처 차관회의(2006.10) 등을 개최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 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1960~1970년대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문제는 전체 국민들의 관심사인 동시에, 재원을 납부하는 세대간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06년에는 사실 기존의 경로연금제도에 대한 평가이므로 과도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민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선별적 급여체계인 경로연금제도를 보다 보편적 형태인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전략은 현대 복지국가로 발전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재원을 고려한 급여수준의

적정성, 수급대상 선정의 합리성 등이 자체적으로 마련됨으로써 제도시행의 취지를 배가하고 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사회복지급여의 한계는 급여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간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소득, 자산조사 등을 통해 수급권을 판별하기 때문에 불만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급여수준이 높아지고 급여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인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수급권 판결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이의신청기간을 통한 소명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소득재산에 대한 공적 자료를 정보센터 DB에 구축하여 조회결과 지급대상 여부가 곧바로 판정됨으로써 담당자의 재량에 의한 자의적 결정여지를 없앴으로써 불만소지를 줄였다. 또한 기준소득 경계선상에 있는 계층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과분감액제도를 둬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구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대상자가 2008년에는 전체 노인의 60%(약 300만명), 2009년에는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명)로 확대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М·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 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2006년도 경로연금제도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정량평가를 위해 과거정부 및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물론 절대적인 수급자 또는 급여수준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로연금의 주요 수급대상은 공적연금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수많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급여수준도 속성상 물가수준을 적기에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상대적인 평가를 위해 65세 인구대비 또는 수급자수의 증감을 등을 활용할 수 있겠으나, 재원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 정부 5년간 평균수급자수는 57만명이며, 2005년에는 619천명, 2006년도에는 613천명으로 수급자 수가 파악되었다. 또한 국민의 정부 급여수준은 기초보장 수급노인이 4~5만원, 저소득노인이 22.5~3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부터 2006월말 현재까지는 30.6~35천원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수급자수의 증감	⑩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증가
	⑥ 전년도 대비 또는 국민의 정부 대비 중 하나만 증가
	②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감소
급여수준의 증감 (1인당 급여수준)	⑩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증가
	⑥ 전년도 대비 또는 국민의 정부 대비 중 하나만 증가
	②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감소
제도개선 사항 여부	⑩ 제도개선 법령이 있음(향후 마련 포함)
	② 제도개선 법령 없음(향후 마련 포함)

2) 과제명: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평가는 제도모형의 구축과 인프라의 확충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시범사업의 수행결과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후자는 인프라의 확충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먼저, 시범사업의 수행여부를 보면 당초계획에 따라 수행되었고, 1차 사업평가보고서도 작성되어 발간된 상태이다. 인프라의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설의 경우 요양인프라종합투자계획 마련(상반기), 노인요양시설 확충(1~12월), 노인그룹홈·소규모요양시설 세부모형개발·시행(상반기),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1~12월)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인력 중에 중요한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배출의 경우도 노인요양 전문인력 양성·도화 초안 마련(상반기), 노인요양 전문인력 자격기준 등 인력양성체계 법적 근거 마련(6~12월)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자원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한 지표는 예산집행율로 볼 수 있는데, 시범사업의 예산집행율은 2006년도 76.3%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차 시범사업의 급여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고, 그 중에서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100% 사용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본인부담금(총서비스비용의 20%) 및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실제 사용액은 월 한도액의 40%에서 사용되었다. 인프라의 확충율은 계획한 범위 내에서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범지역 내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관외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장기요양사업자는 다양한 요금체제로 시설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고객은 제공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등 시설 선택권을 확대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노인요양시설로의 통합, 지역보호 중심 가정형 그룹홈(노인공동생활가정) 도입 등의 결과를 보였다.

인프라의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점진 결과, 지방재정 부담으로 지자체가 시설 설치에 소극적이거나 시설부지 확보의 곤란, 지역 넘비현상 등으로 기존 대규모 요양시설 설치의 곤란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분권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자체장의 시설설치노력 동의, 소규모의 지역밀착형 시설설치 방안 마련 이외에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배출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p>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p> <p>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p> <p>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p> <p>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p> <p>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p> <p>－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p> <p>－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p>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차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할 때 시범지역 신청시 각 시·도에서 희망 시·군·구의 시설인프라 및 자치단체장의 수행의지를 파악하여 추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하고, 시·군·구 및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시범사업의 안내 등 홍보협조, 시범사업 급여비용의 지출 등이 순조롭게 수행되었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기획예산처 등과 시설확충계획 및 예산확보 등을 협의하고,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를 상향조정, 시설운영비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각 지자체 등과 연계·협조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p>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p> <p>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p> <p>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p> <p>－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p> <p>－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p>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도안내문을 일제히 송부하고, 제도모형에 대한 설명회를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제도 내용과 도입 필요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일부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인프라의 확충사업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재가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의 설명회 개최 및 설명책자 배포를 통해 의견수렴 및 사업이해를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함으로써 자체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등급판정 및 수가체계 등 제도모형의 현실적합성과 국민수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재가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가 및 부처 내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팀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한 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제도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인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는 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 및 수가 상향조정에 대한 요청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시설 인프라의 확충 측면에서는 200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94.1%)이 시설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인프라의 경우에도 입소시설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충족율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재가시설의 경우에는 뚜렷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율 15점, 장기요양인프라 충족율 12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율	<p>⑮ 추진율이 80~100% 미만: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3차레)의 실시여부 및 동 법·시행령·시행규칙을 확정한 경우</p> <p>⑫ 추진율이 60~80% 미만: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3차레)의 실시여부 및 공적노인요양보험법 제정 및 제도도입 확정 여부</p> <p>⑨ 추진율이 40~60% 미만: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3차레)의 실시여부 및 제도모형 수정보완 여부</p> <p>⑥ 추진율이 20~40% 미만: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2차레)의 실시여부 및 제도모형 수정보완 여부</p> <p>③ 추진율이 20% 미만: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1차레)의 실시여부 및 제도모형 개발 여부</p>
장기요양인프라 충족율	<p>(필요대상자수÷입소 또는 이용정원수)×100</p> <p>⑮ 충족율이 80~100% 미만: 법적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대비 필요시설이 모두 확충된 경우 및 요양보호사 배출여부</p> <p>⑫ 충족율이 60~80% 미만: 법적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대비 필요시설이 전체의 80%정도만 확충된 경우 및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준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여부</p> <p>⑨ 충족율이 40~60% 미만: 법적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대비 필요시설이 전체의 60%정도만 확충된 경우 및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준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기준 마련 여부</p> <p>⑥ 충족율이 20~40% 미만: 법적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대비 필요시설이 전체의 40%정도만 확충된 경우 및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준관련 법제정 여부</p> <p>③ 충족율이 20% 미만: 법적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대비 필요시설이 전체의 20%정도만 확충된 경우 및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준 마련</p>

나. 장애인복지서비스

1) 과제명: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월별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p>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p> <p>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p> <p>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p> <p>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p> <p>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p> <p>－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p> <p>※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p>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자원의 효율적 집행 정도를 평가하는 네 가지 세부지표에 대한 근거로서 자원의 투입시기의 경우, 매월 초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집행규모에 있어서는 장애수당의 경우 기초보장수급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겐 월 7만원, 경증장애인에겐 월 2만원을 지급하여 111,931백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1,669백만원을 지출하였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국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6개소 운영과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도 운영에 각각 648백만원과 30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또한 운영방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장애수당 등 집행실적 결산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세부 지표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매분기 집행실적을 파악하고, 16개 시·도로부터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침을 변경하는 등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정부 예산의 심사 및 배분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영역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지원 강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 변화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장애수당 등 집행실적 결산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차년도 지자체 예산 배정에 반영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3점 만점에 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7)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국민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최저점인 2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 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영역의 목적 및 목표 달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성과지표로서 전체 가구 대비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을 설정하였다.

2006년 현재 전국의 총 가구 수는 15,988,599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통계청 홈페이지),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는 전체의 6.9%인 1,098,167가구이다. 한편 가구 구성원 중에서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가구, 즉 장애인가구는 1,966,598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는 전체 장애인 가구의 15.2%인 299,466가구이다. 이렇듯 장애인 가구의 절대빈곤율이 전체 가구의 동 비율에 비해 약 2.2배 높게 나타나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8점에 해당된다.

〈부표 3-1〉 전체 가구 및 장애인 가구 빈곤율

(단위: 가구, %)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 가구
기초수급 가구 수 (A)	299,466	1,098,167
총 가구 수 (B)	1,966,598	15,988,599
가구 빈곤율 (A/B)	15.2	6.9

자료: 1) 통계청 홈페이지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2006.

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7 전국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 연구

평가지표	평가척도
전체 가구 대비 장애인가구 빈곤율	(장애인가구 빈곤율÷전체 가구 빈곤율)×100
	㉔ 전체 가구 대비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150% 이하
	㉔ 전체 가구 대비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150~200% 이하
	㉔ 전체 가구 대비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200~250% 이하
	㉔ 전체 가구 대비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250~300% 이하
	㉔ 전체 가구 대비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00% 이상

2) 과제명: 의료보장 확대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권역별 재활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재활병원신축 수요조사(2006. 3), 사업대상 시·도 선정(2006. 5) 및 국고 교부(2006. 11) 등 일정에 적합하게 추진되었으나 해당 시·도인 인천과 강원지역에서 부지확보,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일부 일정이 지연되었다. 그 외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지원 및 재활보조기구 보급 사업은 추진 계획대로 일정이 지켜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②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권역별 국립대학교병원 부설 재활센터 설립추진의 경우에는 2006~2009년에 걸쳐 총 사업비 810억원(개소당 국고 135억원)의 범위 내에서 6대 권역(경기(인천포함), 강원, 제주, 충청, 영남, 호남)에 150명상 규모의 재활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재활병원신축 수요조사와 사업대상 시·도 선정 및 국고 교부(인천,

강원지역 2개소)를 실시하였다. 2006년 지원 지역(인천·강원)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분기별 추진 실적을 현장방문 및 점검하여 애로사항 수렴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재활병원 발전방향 세미나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하였다.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의 경우 장애유형별 교부품목 5종(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을 841백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시·도별 재활보조기구 수요량을 파악, 사업량을 적정 배분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의 경우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였는데, 총 사업비는 8,651백만원이 지출되었다. 또한 2006년 의료비 지원 예산 부족 내역을 파악하여 시·도별 집행실적을 분석하고 시·도간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다. 대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집행의 평가척도인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등이 모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관련 분야의 후속 중장기계획인 ‘희망한국 21’ 수립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중증장애인 보호대책관련 담당자회의 개최(2006. 11) 및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 현지점검(2006. 11) 등을 통해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이행하였다.

또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장애인 보호인원 및 시설확충 추계자

료를 생산하여 이후의 추진 계획에 반영하였다. 환경변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재활병상 수요의 증대, 지방운영비 부담으로 인한 시설확충의 어려움 등을 전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립재활원 기능 및 역할 강화, 연차적인 재활병원 확충, 지역사회중심 거점보건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분기별 집행실적 파악 및 집행결과에 따른 예산 재배정과 반기별 집행실적 파악 및 집행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지자체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상의 지표분석 결과,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u>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u>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권역별 재활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과 권역별 의료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2005. 12)」과의 연계 하에 권역별 의료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시·도 및 전문가 등으로 재활병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재활보조기구 보급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변화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권역별 재활센터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 실적 등의 자체 평가 결과 사업기간이 평균 3년 소요되어 예산 교부방식을 기존 일괄 교부에서 3개년에 걸쳐 분할 지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지원분(제주)부터 3개년에 걸쳐 분할 지원하되, 실지 사용예정액을 신청 받아 교부하고, 2008~2009년 추가 지원분도 3개년에 걸쳐 분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집행실적 결산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지자체 예산 배정시 이를 반영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8)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권역별 재활센터 설치 추진의 경우, 2006년에 기 지원된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완료되는 2008~2009년 이후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측정할 예정이다. 그 외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등에 대해서는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없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4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구는 등록장애인의 약 1.5%로 추계되는 바, 재활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재활병원 병상 수를 의미하는 재활병상 충족율을 의료보장 확대 영역의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적 및 목표 달성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 현재 재활의료서

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수는 약 28천명이며, 이들이 입원하여 치료할 수 있는 재활병상 수는 4,500병상으로서 재활병상충족율은 16.1% 수준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8점에 해당된다.

〈부표 3-2〉 재활병상 충족율

(단위: 개, %)

구분	재활병상 충족율(B/A)	재활병원 병상 수(B)	재활의료서비스 필요 장애인 수(A)
2006	16.1	4,500	28천명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7.

평가지표	평가척도
재활병상 충족율	(전체 재활병원 병상 수÷재활의료서비스 필요 장애인 수)×100
	㉔ 재활병상충족율이 25% 이상
	㉒ 재활병상충족율이 20~25% 미만
	㉐ 재활병상충족율이 15~20% 미만
	㉒ 재활병상충족율이 10~15% 미만
	㉐ 재활병상충족율이 10% 미만

3) 과제명: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확정내시(2006. 1), 분기별 지방비 확보여부 파악 및 현지 확인(2006. 2~3), 16개 시·도 사업집행실태 점검(2006. 10), 월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집행실적 파악(2006. 1~12) 등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㉒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㉒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㉒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㉒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㉒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생활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서비스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편의시설 설치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활시설 신축 62개소, 증개축 16개소, 개보수 53개소, 장비보강 60개소, 편의시설 설치 16개소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거점 보건소 45개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134개소에 운영 지원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회계구분의 적절성, 재원분담 가능성, 지원방식, 사업추진 주체, 지원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을 70:3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거점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의 효율성 집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상기의 기술을 고려하여,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분기별 예산집행 실태 파악 및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등록장애인구의 증가 추이 및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재활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는 전망 하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중심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 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관련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변화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생활시설 확충 영역과 관련하여, 신규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장애인 및 가족 만족도 조사(2007. 1. 25~2. 9)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만족도 평균 76.68점으로 만족 수준 이상을 나타내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자체 평가는 국립재활원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단을 통해 2006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환경이나 자원투입 수준을 파악하고, 보건소 유형 및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균 76.68점의 만족도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시설 입소의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지 못할 것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5점 만점 중 평균 4.4점의 만족도 점수(백점 환산시 88점)를 나타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요양서비스 필요 대상 장애인 수 중 실제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 수를 의미하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충족율을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확대 영역의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적 및 목표 달성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충족율은 71%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4점에 해당된다.

〈부표 3-3〉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충족율

(단위: 개, %)

구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충족율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수(B)	생활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 수(A)
2006	71%	26,572	약 37천명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7.

평가지표	평가척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충족율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수÷요양서비스 필요 중증장애인 수)×100
	③⑩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충족율이 80% 이상
	②④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충족율이 70~80% 미만
	①⑧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충족율이 60~70% 미만
	⑫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충족율이 50~60% 미만
	⑥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충족율이 50% 미만

4) 과제명: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편의증진심의회 운영, 편의시설 실태조사, 법령 개정, 편의시설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이 계획대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시행과 관련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부처간 추진상황 점검 및 편의시설 실태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제고를 독려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시행과 관련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부처 간 추진상황 점검 및 편의시설 실태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제고를 독려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에 따라 편의증진법 시행령(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개정하는 등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편의증진심의회 운영을 통한 부처간 추진상황 점검 및 안전 도출을 통한 소관사항의 개선 추진 등을 통해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시·도 및 시·군·구 청사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 시·도 및 시·군·구 청사 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2006년도 시·도 및 시·군·구 청사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지자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하였으며, 노인·장애인·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청사 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시·도 및 시·군·구 청사 편의시설 이용자만족도조사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서울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설별 이용 빈도는 근린생활시설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3년도 편의시설 만족도 조사결과(평균 33.2%)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4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 참여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블럭 등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의해 실제로 어느 정도 설치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통해 사업의 목적 및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편의시설 설치율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가 지난 2003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는 2006년에 실시된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을 대체지표로 선정하였다. 2006년 현재 전국의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91.73%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4점에 해당된다.

〈부표 3-4〉 전국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구분	전국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	91.73

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 연구」, 2007.

평가지표	평가척도
	(실제 편의시설 설치 수÷편의시설 설치 대상 수)×100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⑩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이 100%
	⑭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이 90~100% 미만
	⑮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이 80~90% 미만
	⑫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이 70~80% 미만
	⑥ 편의시설 설치율이 70% 미만

다. 가정복지서비스

1) 과제명: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동 과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2006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을 마련하고 매월 계획을 수립, 집행하여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한 계획은 모두 일정대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어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u>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u>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동 과제는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계획과 재정집행계획에 따라 자원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운영방안을 결정하였으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2006년 8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별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평가매뉴

얼을 개발하여 국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운영상황 및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향상된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u>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u>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동 과제는 지역 유관기관, 보육교육기관, 기업,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가족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분야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차 상담 후 병원이나 보건소, 알콜상담소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교육분야는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하여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원봉사분야는 지역자원봉사은행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PCRM, 보도자료를 통한 상시홍보와 온라인, 언론매체, 리플렛, 책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드라마 제작지원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실적이 있고 인지도 향상 효과가 근거자료로 제시되었으므로 정책 인지도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자체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해 2005년 평가위원회에서 1차 지표를 개발한 이후 여성가족부, 평가위원회, 중앙센터, 지역센터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06년 최종 평가지표 개발하였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가정학, 사회복지학, 행정

학, 여성학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다학제적으로 고르게 평가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실제 평가시 상호 다른 영역의 평가위원 2인, 여성가족부, 중앙센터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개소한지 1년 이상 경과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실적, 운영체계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 및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자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시된 근거자료에 의하면 조사결과 100점 만점에 88점으로 나타나 100점을 100%로 간주하여 88%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가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М·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가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3개소만을 시범 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6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모두 달성하여 목표치 대비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 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표치 대비 설치율	(건강가정지원센터 수÷2006년의 목표치)×100
	⑩ 90% 이상
	⑨ 80~90% 미만
	⑧ 70~80% 미만
	⑦ 60~70% 미만
	⑥ 60% 미만

2) 과제명: 가정관련 교육지원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가정관련 교육지원은 가족교육·상담 공통사업프로그램(4종) 개발, 센터별 가족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방센터 가족교육·상담관련 운영실적 평가 및 분석 등에 대해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므로 기한 내에 모두 계획된 업무를 완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동 과제는 2004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제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으며 결혼준비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의 가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관리는 프로그램 제공과 이에 대한 실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교육팀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원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운영방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자료제시가 불충분하여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중간점검과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운영상황 및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평가를 위하여 11월에 평가매뉴얼을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으며(11. 30~12. 12),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2. 14)”를 개최하여 센터 운영 및 사업내용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여러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였으나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법원, 노동부, 법무부 등과 연계하여 이혼전 상담, 통합적 가족·고용서비스, 수형자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차원에서는 주민자치단체, 복지관련시설, 학교, 가족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 국방부 군 가족 서비스 지원 등 관련기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활성화를 추진 중이므로 여러 관련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KT 임직원을 대상으로, 10개의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기업체, 관공서, 군부대 등 2,507명에 대해 “기업으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정책 인지도 향상 여부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평가는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11월에 실시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가 실시되었다. 평가내용은 가족교육프로그램 계획의 전문성, 가족교육프로그램 계획의 달성도, 가족교육프로그램의 연중성 및 지속성 등이 해당된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2006년 가족교육사업의 참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88%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가정관련 교육은 중앙 및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2006년에는 50,000명에게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78,851명이 교육을 받아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가정관련 교육 수혜율	(가정관련 교육 이수자÷2006년의 목표치)×100
	③⑩ 가정관련 교육 수혜율이 목표치 대비 90% 이상
	②④ 가정관련 교육 수혜율이 목표치 대비 80~90% 미만
	①⑧ 가정관련 교육 수혜율이 목표치 대비 70~80% 미만
	①② 가정관련 교육 수혜율이 목표치 대비 60~70% 미만
	⑥ 가정관련 교육 수혜율이 목표치 대비 60% 미만

라. 아동복지서비스

1) 과제명: 아동권리의 증진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권리 증진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목표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들이 충실히 완료되었다. 특히,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포함된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의 설치는 외부 비영리 민간기관 위탁형태로 완료되었으며, 연차별 국민 교육·홍보계획도 추진일정에 준하여 모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참여복지의 자원집행은 당초 사업추진 계획에 비추어 적기에 사용되고,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모니터링 기능의 체계적이고 객관적 수행을 위한 민간비영리 조직과의 계약방식 채택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도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아동권리의 증진이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정부예산의 규모가 매우 제한적으로 집행됨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아동의 권리를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아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근본적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광역단위의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교사, 경찰, 법조계,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폭력예방 및 아동권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였다.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 경주 되었으나, 실질적인 폭력 예방효과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④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②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12명과 정부부처 책임자 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계와 협력을 논의하는 조직체이다. 동 위원회의 운영은 아동복지 전반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아동권리분과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정책포럼 등의 운영을 통해 아동권리 관련 정부사업에 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아동권리의 증진과 관련하여 아동,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는 다른 어떤 단위사업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아동권리 관련 사업의 단계별 보도자료의 시의적절한 배포는 물론,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포럼의 개최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관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홍보의 전파성을 강화시키고, 홍보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전략을 시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민의식 수준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오프라인의 대면접촉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국민의식 수준의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⑥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아동권리의 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반기별 점검을 통한 사업추진의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흡한 분야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였으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동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팀이 직접 수행하는 자체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시행방식의 적정성과 평가내용에서 1점씩 감점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8)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된 국민 또는 이해당사자의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백분율로 제시하여 평가하는 지표이다. 즉, 전체 만족도 조사대상 인원수 대비 해당사업

의 정책성과에 만족하는 사람의 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100% 만족한 경우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만족도 비율을 10% 구간으로 감점되는데, 70% 미만인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 또는 이해당사자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에 대한 만족도조사 자료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점수는 최저점인 2점을 부여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마지막으로 사업목적 대비 달성수준에 대한 평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이행과정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여부와 아동권리 관련 홍보 및 교육사업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을 근거로 한다. 우선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의 물론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옴부즈퍼슨, 옴부즈키즈를 위촉·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동 사업의 대표 이해당사자인 아동의 직접적 참여기회를 제공한 경우 1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평가지표 해당 개수에 따라 점수가 감점하는데,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를 우선 점검기준으로 고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옴부즈키즈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이 참여하는 다양한 아동권리 증진 교육, 관련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5점에 해당된다. 한편, 홍보·교육사업의 목표대비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는 2005년도 기준으로 추진계획 4회 대비 6회 홍보·교육 행사 완료, 2006년도 기준, 추진계획 5회 대비 9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달성 비율이 90% 이상으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이행과정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여부	(1)아동권리 협약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 (2)아동권리 협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ombudsman, ombuds kids를 위촉·운영 (3)아동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증진 기회의 제공
	⑮ 평가척도 중 3개가 모두 시행된 경우 ⑫ 평가척도 중 2개만 시행된 경우(평가척도 (1) 반드시 포함) ⑨ 평가척도 중 평가척도 (1)만 시행된 경우 ⑥ 평가척도 중 평가척도 (1)을 제외한 2개만 시행된 경우 ③ 평가척도 중 1개만 시행된 경우(평가척도 (1) 제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추진 목표 대비 추진실적	(홍보·교육사업 실시 횟수÷전체 홍보·교육 실시 목표)×100 ⑮ 홍보·교육사업의 목표 대비 달성 비율 90% 이상 달성 ⑫ 80~90% 미만 달성 ⑨ 60~80% 미만 달성 ⑥ 40~60% 미만 달성 ③ 40% 미만 달성

2) 과제명: 국내입양 활성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은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외입양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입양 홍보 및 활성화 대책의 마련 등이 추진계획에 준하여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6년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던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이 일정 준수하여 구축·운영됨으로써 입양대상 아동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에 종합적인 입양대상 아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당해연도에는 입양에 관한 국민의식의 개선과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국내입양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관련 국민의식의 개선을 우선 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참여정부는 국내입양 홍보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 바, 총 976백만원(복권기금)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비 집행된 후에는 사업결과를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즉, 입양 홍보사업에 대한 자원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및 사후관리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의 수립이후 입양휴가제도,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완화,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도 등의 추가대책을 포함한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까지 발표되었으나(2006. 7. 10), 동 사업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의 지원(614백만원)에 이용되거나 입양기관의 상담인력에 대한 인건비(2006년 기준 301백만원) 집행 또는 입양인한글학교(2006년 기준 200백만원)에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향후 기 발표된 종합대책 등을 근거로 사업예산이 마련되어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평가대상 연도인 2006년도 사업에서 자원의 집행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동 지표는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각종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간담회, 공청회 등을 포함한 활동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명확한 여건진단을 통해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이 뚜렷하게 개선된 경우를 10점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의 진행과정은 물론 해외입양 추진계획서를 통한 사업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입양가족대회, 입양세미나, 그리고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동 정책의 추진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다만 뿌리 깊은 혈연주의 가족문화,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 전통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입양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입양대상 아동의 혈액형, 외모,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면서 1세 이상의 연장아동 또는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2006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자면,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 경주되어 입양에 관한 국민의식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실질적인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어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의 마련 및 추진과정에서 입양부모를 비롯하여 입양기관 관계자, 그리고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수수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및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양육 보조금과 의료비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입양도 출산과 유사한 가족행사로 간주하여 근로자 부모의 휴가비용을 인정하는 입양휴가제도의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학계, 종교계, 입양단체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무원 및 근로자의 입양휴가제 우선 도입을 위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사회문화장관계 장관회의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출산휴가와 유사한 기준으로 입양휴가제를 2007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 완료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 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입양특례법 개정(2005. 3)으로 제정된 입양의 날(5. 1)과 입양주간(5. 1~6) 행사를 통해 입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의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민간단체인 한국입양홍보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입양에 대한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고, 공개입양의 장려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국내입양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초·중고생 때부터 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국내입양 활성화사업은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을 통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홍보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복권기금 사업으로서 기금운영관리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부모 자격완화 및 입양휴가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국민 만족도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8)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한국입양홍보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 입양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일반국민은 물론 이해당사자의 정책만족도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조사대상 인원수 대비 여건이 허락된다면 입양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백분율로 제시하면 2005년 61.8%에서 2006년 63.0%로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장애아입양양육보조금의 실제 도움정도를 확인하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매우’ 또는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혈연중심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없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이 사업추진 역량이 발휘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민을 대표하는 조사대상에 대한 입양활성화 정책의 만족도를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설정된 평가척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М·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text{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 \div \text{전체조사대상인원수} \times 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마지막으로 사업목적 및 목표대비 달성수준은 해외입양 대비 국내입양 건수 및 국내입양 장려를 위한 홍보사업의 목표대비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다. 보건복지 통계 연보 및 사업추진 실적자료 등을 통해 전체 입양 대비 국내입양 비율을 산출한다. 2006년도 전체 3,231명의 입양아동 중에서 국내입양 아동은 1,332명으로 국내입양이 전체 입양건수의 41.2%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2점에 해당된다.

한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시행 목표 대비 추진실적은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포함한 홍보 추진 실적을 포함하여 홍보행사 및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정책홍보물 (팸플렛, 책자 발송 등) 등의 다각적 홍보·교육사업의 추진 여부를 평가한다. 그리고 정책인지도의 향상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 여론조사, 간담회 등의 실시여부를 확인하였다. 2006년 3월 TV, 인터넷,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시행계획에 따라 4월 중 홍보매체 및 주요 홍보 테마를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홍보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월별 진행사항 및 홍보결과를 점검·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목표대비 동 사업의 달성 비율을 90% 이상으로 판단하고,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전체 입양건수 대비 국내입양 비율	(국내 입양아동수÷전체 입양아동수)×100
	⑮ 전체 입양 아동수 대비 국내 입양아동수 비율이 50% 이상
	⑫ 40~50% 미만
	⑨ 30~40% 미만
	⑥ 20~30% 미만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추진 목표 대비 추진실적	(홍보·교육사업 실시 횟수÷전체 홍보·교육 실시 목표)×100
	⑮ 홍보·교육사업의 목표 대비 달성 비율 90% 이상 달성
	⑫ 80~90% 미만 달성
	⑨ 60~80% 미만 달성
	⑥ 40~60% 미만 달성
	③ 40% 미만 달성

4. 사회보험

가. 국민연금

1) 과제명: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참여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의식하는 정치권의 개입 등으로 적기에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실현 가능한 사안들에 대한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거시적 차원의 개혁은 최근 들어서야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담당부처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공단의 자원을 활용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통계에 기초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신빈곤층의 확대 및 양극화 심화로 일부 지표들의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참여정부 목표 수립당시 납부예외 축소를 위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개인별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의혹 등으로 실시·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내실화를 위한 다른 부분의 노력은 대체로 무난하게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는 국민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납부예외 축소를 위한 사후관리방안은 내놓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제도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에 수반되는 연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특히 각 정당에서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노사정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있어서 수차에 걸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제도내실화는 사회보험 3주체가 서로 이해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연금개혁과정에서는 보다 중립적인 연금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각 정당간의 합의를 이루도록 암암리에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금관련 연구소 특히 국민연금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이를 수 있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제도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군복무, 출산 등의 가입기간 인정 문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전자는 제도 내에서 후자는 '기초노령연금법' 통과로 일정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제도 내실화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향후 마련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평가를 통해 적정 가입기간 인정문제, 사업장가입자 확대 단계 등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 추계팀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연금제도의 내실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급여대체율 감소에 따른 감정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가입기간 인정, 급여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국민연금 제도 내실화의 정량평가를 위한 지표로 소득파악율(=1-납부예외율), 가입기간확대, 사업장가입확대, 징수율 및 각 제도 연계·구축 등에 관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파악률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득파악률은 납부예외 요인을 줄이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5년간 평균 파악률은 58.9%인 것에 반해, 2006년도에 45.7%로 전년도 49.2%보다 3.5%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영업의 경기침체와 종전의 5인 미만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철저한 분석은 종전 지역가입자 중 최근 사업장으로 전환된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하다. 둘째, 가입기간 인정제는 최근

법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은 6개월, 출산기간은 2자녀인 경우 12개월, 3자녀 이후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사업장가입자확대는 순조롭게 이루어져, 국민의 정부 5년 평균 22만 사업장의 560만명이 가입하였으나, 2005년에는 65만 사업장 795만명, 2006년에는 77만사업장의 860만 사업장가입자로 확대되었다. 넷째, 징수율은 경기침체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5년간 98.8%이었으나, 2005년 85.4%, 2006년에는 84.3%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4대 사회보험간 연계 체계가 구축되고, 노후소득보장을 다층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소득과약률	⑤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증가 ③ 전년도 대비 또는 국민의 정부 대비 중 하나만 증가 ①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감소
가입기간확대	⑤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증가 ③ 전년도 대비 또는 국민의 정부 대비 중 하나만 증가 ①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감소
사업장가입자확대	⑤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증가 ③ 전년도 대비 또는 국민의 정부 대비 중 하나만 증가 ①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감소
징수율	⑤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증가 ③ 전년도 대비 또는 국민의 정부 대비 중 하나만 증가 ① 전년도 및 국민의 정부 대비 모두 감소
4대 사회보험제도간 연계 체계구축 정도	⑤ 제도간 연계 개선노력/활용 있음 ① 제도간 연계 개선노력/활용 없음
다층체계 연금제도 구축 방안연구 마련	⑤ 제도개선 연구 있음 ① 제도개선 연구 없음

2) 과제명: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국민연금 급여합리화는 최근의 국민연금 개정으로 그동안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내용들이 일거에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정치권의 논리에 밀려 보다 합리적인 급여수준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급여합리화 작업은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선안을 만들면서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으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가칭 ‘국민연금 의혹사건’들에 대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급여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에 수반되는 연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특히 각 정당에서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노사정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있어서 수차에 걸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설정

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급여내실화는 수급조건을 다소 완화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 더구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으로 여성수급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여성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급여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개혁안이 마련되면서 일기 시작한 국민연금 불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법조항을 철저히 이해시키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각 연금에 대한 수급조건, 중복급여 인정 등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지게 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연금급여 합리화의 내용은 법 개정을 통해 완성되었을 지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작업은 다소 소홀한 면이 있다. 수년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평가를 통해 실현 가능한 선택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정 안정화 등의 거시적 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되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법 통과 이후 연금급여 대체율이 감소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연금급여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1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8)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연금급여의 내실화는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불만과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소득대체율 감소로 부정적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예로서 조기노령연금 급여의 감액폭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급여합리화의 대전제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취지임으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연금재정안정과 급여의 적절성간의 상충관계(trade-off)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국민연금 급여의 합리화를 정량평과를 위한 지표로 연금급여 제도개선 여부를 고려하였다. 주요 연금인 노령, 장애, 유족연금제도 개선여부와 기타급여의 주요인인 병급조정, 일시금 등에 대한 개선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연금 수급조건이 개선되었다. 수급개시 시점연장에 따른 할증연금제도가 신설(1년당 연 6%)되고, 감액노령연금이 현실화되었으며, 조기노령연금 감액폭도

1년당 연 6%로 증가하였다. 둘째, 장애연금 수급조건이 개선되었다. 연금수급 개시 시점을 초진일부터 2년에서 1년 6개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결정시점을 6개월 단축하였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조건이 개선되었다. 남녀 공히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일단 3년간 수급하고, 55세부터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중복급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연금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의 20%, 반환일시금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섯째, 사망일시금제도가 개선되었다. 유족연금 수급액의 합계와 사망일시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반환일시금제도가 개선되었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로 이동하는 경우 즉각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였으나, 향후 제도간 연계에 대비하여 60세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노령연금 수급조건 개선		⑧ (향후)제도개선 사항 있음(향후 마련 포함) ① (향후)제도개선 사항 없음(향후 마련 포함)
장애연금 수급조건 개선		⑧ (향후)제도개선 사항 있음(향후 마련 포함) ① (향후)제도개선 사항 없음(향후 마련 포함)
유족연금 수급조건 개선		⑧ (향후)제도개선 사항 있음(향후 마련 포함) ① (향후)제도개선 사항 없음(향후 마련 포함)
기타급여의 합리화	병급조정 제도 개선	② (향후)제도개선 사항 있음(향후 마련 포함) ① (향후)제도개선 사항 없음(향후 마련 포함)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② (향후)제도개선 사항 있음(향후 마련 포함) ① (향후)제도개선 사항 없음(향후 마련 포함)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② (향후)제도개선 사항 있음(향후 마련 포함) ① (향후)제도개선 사항 없음(향후 마련 포함)

나. 건강보험

1) 과제명: 급여(보장성 강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각 연도별 추진계획은 2004년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 및 응급·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2005년 진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고액 중증질환군 선정 및 보장성 강화, 전액 본인부담항목의 개선, 소액진료비 보험재정 축소, 2006년 내시경 수술 재료의 보

협급여화, 건강보험 보장범위의 정립, 체납자 해소 추진 등이었다. 추진계획 된 내용을 각 연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u>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u>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투입시기와 집행규모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입원환자 식대 사후관리(공단)와 보장성 강화 항목 모니터링(건강심사평가원 전담팀)을 실시하여 추후관리도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관리방법이 소극적이어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2006년에 보장성 강화 항목 및 입원환자 식대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에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내에 입원환자식대 모니터링팀을

가동하여 만족도가 낮은 요양기관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 병·의원 협회, 영양사협회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 인지도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 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움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 지표를 선정하여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도 조사결과는 없으나 만족도를 추측할 수 있는 사례조사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로 74.4%를 보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암 환자 급여율은 2005년 66.1%로 크게 향상되었다. 당초 설정한 사업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암 환자 급여율	③⑩ 65% 이상 ②④ 60~65% 미만 ①⑧ 55~60% 미만 ⑫ 50~55% 미만 ⑥ 50% 미만

2) 과제명: 재정(재정건실화, 부담 형평성 확보)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및 보험료율 제고,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등의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연도별로 제시한 사업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추진계획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사업추진 성과도 다소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보험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각 시기별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 그러나 관리방법 및 사후관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재정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④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②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과 밀접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한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 인지도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상·하반기 2회 자체평가를 적절한 지표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

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미납부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없어 만족도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낮을 것으로 추측되며,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4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보험료 징수율은 2006년 97.4%를 달성하였으며, 2004년 및 2005년에 단기채정수지 흑자를 달성했으며, 2006년에는 누적수지가 흑자로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건강보험료 징수율	⑮ 97.2% 이상 달성 ⑫ 97.0 ~ 97.2% 미만 ⑨ 96.8 ~ 97.0% 미만 ⑥ 96.6 ~ 97.8% 미만 ③ 96.6% 미만
재정수지 적자의 타당성	⑮ 흑자 ⑨ 적자(타당성 있음) ③ 적자(타당성 없음)

다. 고용보험

1) 과제명: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지원수준 인상을 통한 고용안정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2)유사 지원제도의 통폐합을 통하여 사업의 분류 및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3)취업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도입하고, (4)'고용창출지원금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부족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 사업은 2004~2006년의 3년에 걸친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2004년에 (1), (3), (4)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6년에는 (2)번 과제가 추진되어 추진일정 상 지연사항이 없이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들이 시행되었으나 (2)번 사업의 경우, 고용안정사업의 분류체계와 과제프로그램들이 너무 다기화되어 있고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이 미완성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사업의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기금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되어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업을 위한 기금재정의 투입시기 및 집행규모는 사업목표와 가치를 고려할 경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외부평가를 통해 투입 기금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아울러 시행 2~3년이 지난 2007년 본 사업들은 외부연구기관을 통해 심층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후관리도 적절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리방법'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가 2~3년이 지난 2007년에야 이루어진 점, 그리고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평가체계의 구축이 지금 시작된 점 등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정책연구자들 내·외부에서 너무 사업이 다기화되어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사업의 집행부처 주도적인 부분적인 제도의 개선 등은 이루어졌으나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모니터링 및 공청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2007년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사업이 시작되어 향후 본 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은 늦게나마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이 지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u>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u>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패키지인 고용안정사업은 노동-고용정책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타 부처와의 업무연계 및 협조 체계의 필요성은 낮다. 다만 노동정책관련 기관과의 업무연계 및 협조 체계는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부는 2004~2006년의 사업시행 기간 동안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청 및 전경련 등과 정책 및 제도협의를 통하여 2005년에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제도를 개선한 실적은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사업집행부처인 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와 고용안정사업에 대해 그동안 대국민 홍보와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안내책자 발간, TV 및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제도의 홍보에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과 같은 특정 사업들은 사용주의 지원실적이 급격하게 늘었고, 이에 따라 사업의 집행실적이 2005년 2,034억원에서 2006년 3,782억원으로 급증하였다. 단,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전반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와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지도는 아직 향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안정사업 중 활용도가 급증하거나 사업비중이 높은 개별사업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뢰하였으며(2006년), 고용안정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심층평가사업을 동 연구원에 의뢰(2007년)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각 사업의 해당 팀과 과에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서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6년 ‘고용안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척도 중 3.41점으로 중간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2007년 동 연구원이 시행한 고용안정사업 22개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사업의 수혜기업들은 높은 만족도(80% 이상)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혜대상 근로자들의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만족도 점수가 사업주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²⁾.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2) 노동연구원,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2007.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М·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동 사업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요건과 지원절차를 완화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고용안정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2004~2006년의 기간 동안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였고, 활용실적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인 정책목표와 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체계의 단순화는 시도되었으나 아직 그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4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고용안정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의 인상 여부 • 지원금 수급요건의 완화 여부 • 필요한 사업의 도입 여부 • 사업체계 단순화 여부 • 필요한 법령 개정 여부 ⑩ 평가척도 중 5개 모두 시행 ②④ 평가척도 중 4개 시행 ⑩⑧ 평가척도 중 3개 시행 ⑫ 평가척도 중 2개 시행 ⑥ 평가척도 중 1개만 시행

2) 과제명: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동 사업은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1)‘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을 통해 재직자 능력개발사업을 보다 활성화는 사업, (2)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사업, (3)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해 실업자, 신규 미취업자, 영세 지역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 실시를 통해 취업능력향상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이 우수한 시설, 장비, 프로그램 등을 보유한 대기업(협력업체), 사업주단체(산업, 업종별 중소기업), 공공훈련기관, 대학(지역 중소기업)에서의 훈련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추진일정은 2004~2006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의 경우 노동부는 2004년 30개 운영기관에 15,000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실적을 올렸고, 2005년에는 47개 운영기관을 통해 33천개 중소기업이, 2006년에는 57개 운영기관을 통해 63천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참여 근로자수는 14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 사업의 경우 2004년 13,000백만원에서, 2005년 18,930백만원, 2006년 29,316백만원 등으로 지원실적이 증가하여왔고,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사업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취약계층 77,844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계획 일정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노동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한 분기에 집중되거나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의 집행규모는 2006년에 전액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로 자원의 집행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동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매월 사업실적을 분석하고, 컨소시엄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하였으며 사후적으로는 매년 운영기관의 평가를 통해 A~E 등급으로 분류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의 차등집행 등을 시행하였다.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 사업의 경우 촉진사업의 대상을 50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2003년)에서 40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부를 확대하였다.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89,705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목표 대비 110%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2006년 시행 이후 2007년 기간 동안 평가나 사후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본 사업들은 투입시기, 집행규모 등은 적정하나 관리방법(취약계층 직업훈련), 사후관리 등이 아직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직업능력개발 격차

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예산도 2005년 398억에서 2006년 450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 OECD에서 우수사례로 소개(Employment Outlook, 2004).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촉진 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투자가 미흡하거나 감소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시된 사업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적인 능력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적절하게 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례로 판단된다. 그러나 세 가지 사업 모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 추진된 사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사업의 경우 직업훈련전달체계의 특성상 지방자치 정부와 민관 훈련기관간의 협력체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별도의 협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2006년 신규 운영기관 선정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각 운영기관의 적극적 홍보활동을 지원하였고, 일간지 등에 138회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입법예고를 거치고, 개정 이후 홈페이지 등재, 고용보험사업 안내책자 발간 등 홍보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사업의 경우, 실업자 훈련 등에 대하여 과정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안내하였고, 승인현황을 부처 홈페이지 및 직업훈련정보망에 게시하여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홍보한 실적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 주요정책과제 평가 대상사업이며, 상하반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를 거쳐 국무조정실에서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촉진 사업의 경우,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거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사업의 경우, 2006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훈련기관과 훈련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사업 모두 자체평가의 방식과 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평가의 내용은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8)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직업능력개발원(2004년)의 조사에 의하면 컨소시엄 참여 사업주, 근로자 만족도 조사에서 91.2%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사업의 경우 전반적인 측면에서 훈련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는 제도 자체의 효과성과 효용성 지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아닌 비교대상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에 대한 델파이 조사 등의 결과와의 비교평가 필요하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사업은 이상의 평가자료를 종합해 볼 때 시장과 제도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일반 사업으로부터 특수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민과 근로자의 필요(need)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계획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진행과 결과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원요건의 완화와 제도홍보를 통해 사업 초기보다는 다음 년도에 사업실적이 향상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늘고 집행예산이 늘어난 것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므로 사업목적과 목표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성과 평가와 분석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4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참여 기업의 증가 여부 • 훈련참여 근로자의 증가 여부 • 필요한 사업의 도입 여부 • 취약계층 직업훈련 증가 여부 • 필요한 법령 개정 여부
	⑩ 평가척도 중 5개 모두 시행 ②④ 평가척도 중 4개 시행 ⑩⑧ 평가척도 중 3개 시행 ⑩② 평가척도 중 2개 시행 ⑥ 평가척도 중 1개만 시행

라. 산재보험

1) 과제명: 산재보험 수혜 확대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수혜확대를 위하여 연차별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였다. 2004년도에는 2천만원 미만 공사 중 건설면허업자가 행하는 공사와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관계법령에 반영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업무상 질환 인정기준판단 개선·보완을 위하여 근로격계질환 인정지침을 마련하였다(2004년 11월). 2005년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조사 및 노심혈관계질환, 업무상 정신질환 인정기준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산재보험법개정(안)과 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산재보험에 수혜확대, 즉 적용대상 확대는 법령개정사항으로 해당법령개정(안)을 2006년 12월에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업무상질병인정기준 판단 개선·보완은 해당 법령의 개정 및 지침마련을 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방안은 2003년도부터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그 필요성이 노·사·정·학계 및 당사자들 간에 논의가 되어 왔으며, 2006년 노사정 위원회를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주제 중 하나로 논의되어 별도 추진하기로 합의되어 2006년 12월 산재보험법개정(안)입법예고에 반영되었다. 최근 수년간 논의가 되어 온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및 업무상정신질환 등 업무상질병인정기준 판단 개선·보완은 학계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한 노측, 사측,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한 후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2006년 10월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협의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따라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여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판단 개선·보완을 위하여 학계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노사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산재보험법 및 징수법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각종 언론이 보도하였으며, 노사단체 및 가련 단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정신질환 등의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판단 개선을 위한 학계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개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자체평가를 실시한 근거는 없으나, 법령개정 사항 또는 지침개정·보완사항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개정(안) 입법공고, 관련 지침 제정 공포가 이루어졌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1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5)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은 2003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항에 대해 2006년 12월 산재보험법개정(안) 입법예고로 마무리가 되는 형태로 관련 단체에서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대통령령(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일부 의문을 표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형태 산재보험법개정(안)과 보험료징수법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2007년 5월)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업무지침과 업무상정신질환업무지침이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4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	⑮ 산재보험법개정, 보험료징수법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 보험징수법시행령개정 ⑫ 산재보험법개정, 보험료징수법개정 ⑨ 산재보험법개정(안)국회상정, 보험료징수법개정(안)국회상정 ⑥ 산재보험법개정(안)입법예고, 보험료징수법개정(안)입법예고 ③ 산재보험법개정논의, 보험료징수법개정논의
업무상 인정기준 판단 개선·보완 여부	⑮ 업무상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업무상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⑫ 업무상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또는 업무상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⑨ 업무상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관계전문가·관련단체 의견수렴, 업무상정신질환에 대한 관계전문가·관련단체 의견수렴 ⑥ 업무상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관계전문가·관련단체 의견수렴 또는 업무상정신질환에 대한 관계전문가·관련단체 의견수렴 ③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 정신질환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실시

2) 과제명: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산재보험재정운영체계개선을 위하여 연차별계획을 세우고 준비 및 시행을 하였다. 2004년도에 산재보험업종재분류와 관련하여 기타의 각종사업에 속한 교육서비스업을 분리·신설하여 2005년도 보험요율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규정제정 및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산운용업무지침 및 리스크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아울러 사무수탁사 단일화 및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05년도에 산재보험업종재분류와 관련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속하여 있는 순수경비업을 분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속한 유아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2006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현장서비스보상담당인원 252명 증원(간호사 120명, 재활상담사 95명)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였다. 아울러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6년도에 산재보험 업종 재분류 및 재정안정화와 관련하여 별목업을 임업에 통합하였으며, 양식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신설하였으며 부족한 책임준비금적립을 위해 추가적립분을 2007년 산재보험요율에 반영, 고시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관리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산재보험 업종재분류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통하여 업종재분류의 근거 및 필요

성에 의거하여 업종재분류를 하여 2007년 산재보험요율고시에 반영하였다. 의료기관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범사업(2006년 5월)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한 후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현장 중심으로 보상기간을 개편하였다(2006년 10월).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별목업의 임업으로의 통합요구(산림청)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2006년 5~12월)의 의제에 포함하여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연구용역을 통하여 타업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한 후 2006년 12월 업종별 산재보험요율고시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②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산재보험업종재분류와 관련하여 사업주단체, 산림청, 국세청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업종 재분류에 의한 산재보험요율고시를 언론기관을 통하여 홍보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렸다.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에 대하여 방송, 라디오 등의 언론매체와 리플렛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산재보험 재정안정화와 관련하여 수지차 목표를 세우고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수입·지출 재추계를 수시로 행하였다.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평가 연구용역과 서비스 내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공단을 통하여 하고 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2006년 실시한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한 만족도는 56.0%로 2005년 조사 당시의 만족도(46.6%)보다 9.4%p 상승하였으나,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2006년도 산재보험 결산 결과 수지차는 목표치대비 71.8% 달성하였으며, 대부분의 입원 산재환자 상담이 이루어졌고, 요양종결자의 평균사회복귀기간 단축은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산재보험 업종재분류	⑤ 산재보험업종재분류 및 요율고시에 반영: 2개 업종 이상 ④ 산재보험업종 재분류 및 요율고시에 반영: 1개 업종 ③ 산재보험업종 재분류를 위한 연구용역 완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② 산재보험업종 재분류를 위한 연구용역 완료 ① 산재보험업종 재분류를 위한 연구용역 용역 중
수지차의 목표달성 여부	⑩ 100% 달성 ⑧ 80~100% 미만 달성 ⑥ 60~80% 미만 달성 ④ 40~60% 미만 달성 ② 40% 미만 달성
최초 입원 산재환자 상담 여부	⑤ 100% 달성 ④ 80~100% 미만 달성 ③ 60~80% 미만 달성 ② 40~60% 미만 달성 ① 40% 미만 달성
요양종결자의 평균사회복귀기간 단축여부	⑩ 5.0% 이상 감소 ⑧ 4.0~5.0% 미만 단축 ⑥ 3.0~4.0% 미만 단축 ④ 2.0~3.0% 미만 단축 ② 2.0% 미만 단축

5. 참여복지를 위한 관련 복지정책

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1) 과제명: 최저소득층 지원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2006년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분기별 추진 실적평가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연 단위 공급계획에 따른 공급현황으로 추진 일정 준수 여부를 대체하였다. 국민임대주택 11만호 공급계획에 약 97,000호 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은 매매임대 공급이 6,000호 공급 계획에 6,339호 공급, 전세임대 공급이 5,500호 공급에 5,589호 공급,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이 1,000호 공급에

1,036호 공급으로 계획대비 초과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근거로 최저소득층 지원을 분석해 볼 때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2006년 실적은 추진이 지연되었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은 계획된 업무를 기한 내에 모두 마무리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2006년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 재정지원액의 70%를 상반기에 투입·집행하여 재정의 투입시기는 적절하였다고 평가되며, 분기별 집행규모 또한 주어진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 없이 집행하였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관리방법은 국민임대주택이 기본적으로 소득 1~4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능력 등을 감안,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을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거 면적에 대한 욕구는 소득이 아니라 입주가구의 가구원수와 가구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주거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복지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는 복지서비스 연계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욕구와 필요에 대한 자원연계가 용이하나, 맞춤형 임대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이라는 대상자의 복지욕구에 부합한 밀접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향후 공급실적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저소

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평가 개선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정책의 결정과 수행에 있어서 행정여건과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점검,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실시한 모니터링은 주택건설지원 협의회 10회, 주거환경자문위원회 4회, 수요평가소위원회 1회 및 연구용역, 입주자 주거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설단가의 현실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아파트 규모의 다양화 및 입주자 부담비율을 인하하는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은 주택건설지원협의회를 통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토지공사·지자체와 관련기관인 환경부·농림부 등 협조 체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하였다고 평가된다. 그 이유는 국민임대주택 홍보전시관, 홈페이지

지, TV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2006년도 국민임대주택의 미입주율이 0.5%에 그치는 등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성과달성정도에 대한 자체 평가 및 방식을 살펴볼 경우,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기타 민원사항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자체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평가 방식에 있어 평가주체가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국한되어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타 민원사항 등에 관한 평가 내용은 수혜예정자 및 인근 지역 주민들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8)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이해 당사자의 만족도 측정은 목표 달성 정도의 측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0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조사결과, 만족도는 90.7%로 나타나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4년 88%, 2005년 90%로 만족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성과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사항이다. 이에 참여복지 5개년계획 하에서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평가지표를 근거로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분석해볼 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2006년 기준으로 계획 대비 88%의 실적률을 달성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률 또한 민간부문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2006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은 총 주택수 대비 5.8%(목표5.9%)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도 국민임대주택의 준공실적 대비 입주율은 9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대비 공급실적	$(\text{공급실적} \div \text{건설계획}) \times 100$
	⑩ 90% 이상
	⑧ 80~90% 미만
	⑥ 70~80% 미만
	④ 60~70% 미만
총 주택 수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율	$(\text{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율} \div \text{해당년도 계획된 목표율}) \times 100$
	⑩ 90% 이상
	⑧ 80~90% 미만
	⑥ 70~80% 미만
	④ 60~70% 미만
국민임대주택 준공실적 대비 입주율	$(\text{입주세대} \div \text{국민임대주택 준공실적}) \times 100$
	⑩ 95% 이상
	⑧ 90~95% 미만
	⑥ 85~90% 미만
	④ 80~85% 미만
	② 80% 미만

나. 정보격차 해소

1) 과제명: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본 과제는 정보 취약계층 누구나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차별 없는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충, 정보이용센터 설치 지원, 정보통신기기 보급(중고 PC 보급, 보조기기 보급, 보조기술 개발지원)으로 구분된다. 2006년도에 이들 사업은 분기별로 추진일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투입시기와 집행규모는 여러 부처와 자문위원단에 의해 개발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목표가 설정되었다. 관리방법은 첫째, 10개 광역 지자체, 통신사업자, 정보통신부, 정보사회진흥원이 참여하는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협의회"를 통하여 초고속망 구축사업 관리, 둘째, 지역별 정보이용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역단위 정보이용시설 지원센터' 구축·운영, 셋째, 정보이용시설 구축, 중고 PC, 보조기기 보급, 보조기술 개발 등 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및 실무협의를 통하여 사업 관리를 통해 적절하게 수행되었다. 사후관리는 연 1회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취약계층에게 보급된 중고 PC의 A/S를 위한 정비센터 운영, 반기별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조업체별 A/S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온라인 디지털 체험관 (www.kado.or.kr)' 내에 A/S 문의 코너를 신설하여 사용자 불만사항 처리함으로써 적절하게 수행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충 과제에서는 정책관리시스템(GPLCS) 운영,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협의회 운영, 현장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보이용센터 설치 지원 과제에서는 정보이용시설 실태조사,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보통신 기기 보급 과제에서는 중고 PC 민간단체 지원 실태 점검, 보조기술 개발지원 과제 진행 현장 실사, 보조기기 수혜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은 2006년부터 정보통신부, 지자체, KT가 공동으로 1:1:2 비율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을 희망하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정보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광역지자체와 운영협의체 회의,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 정보통신기기 보급은 관계부처(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MS, 한컴, 하우리 등) 업무협조를 통해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치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2006년도 4건의 보도자료 배포와 우수사례 발굴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상담원 222명에 대한 양성교육 및 1,972건의 장애인 대상 상담, 보조기기 전시회, 고객만족 서약식(공급업체 임직원 23명), 보조기기 사용방법 교육(27명 수혜)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조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 그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충 사업의 자체평가는 계약서상의 계획 물량 구축 여부

및 만족도 수준 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3,011개 마을 75,990 가구에 초고속망을 구축하여 홈페이지 98% 달성, 초고속망 신규 구축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수혜자 만족도는 78.59점으로 목표 77점 대비 초과 달성하였다. 정보이용센터 설치지원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 사업 자체평가는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1,762명을 대상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체평가 방식과 내용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성과를 측정·분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으로 인한 실생활에서의 기여도 및 도움정도,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9)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94.45%³⁾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보이용시설, 중고 PC 보급, 보조기기 보급, 보조기술 개발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격차해소 환경조성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는 96.8%⁴⁾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3) (보통이상 만족 511명÷총 응답자 541명)×100

4) (보통이상 만족 1,695명÷총 응답자 1,762명)×100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М·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text{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 \div \text{전체조사대상인원수} \times 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접근격차지수는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의 격차를 측정한 것으로 정보통신기기 보유정도, PC 기종, 인터넷 접속속도, 필요시 컴퓨터·인터넷 접근가능정도를 총괄적으로 측정한 지수이다. 접근격차 결과는 목표 달성 103.9%⁵⁾로 초과 달성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취약계층 접근격차 수준	$\text{접근격차 목표 달성도} = (100 - 2006\text{년 취약계층 평균 접근격차 실적}) \div (100 - 2006\text{년 취약계층 평균 접근격차 목표}) \times 100$
	⑩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 ⑨ 목표대비 90~100% 미만 달성 ⑧ 목표대비 80~90% 미만 달성 ⑦ 목표대비 70~80% 미만 달성 ⑥ 목표대비 70% 미만 달성

2) 과제명: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도모를 목표로 한다. 본 과제는 2006년도에 분기별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

5) $\{(100 - 19.8\text{점}) \div (100 - 22.8\text{점})\} \times 100$

행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의 연차별 추진 방향과 목표에 따라 투입 시기, 집행규모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관리방법은 2006~2010년까지 취약계층 500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취약계층별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함으로써 적정하게 수행되었다. 사후관리는 연 1회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IT전문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인력Pool을 구축하고 노동부와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였으므로 적정하게 수행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장애인, 고령층, 문해기관 강사 등 사업관계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국 8개 권역의 교육지원기관 관계자 등을 면담하였으며; 농업인, 어업인, 결혼이민자, 전업주부, 저소득층 맞춤형과정 설계를 위해 해당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온라인교육 콘텐츠의 개발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사항 및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p>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p> <p>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p> <p>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p> <p>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p> <p>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p>
	<p>－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p> <p>－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p>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시민사회 단체, 학계, 업체 등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중심 정책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였다. 또한 정부부처(농림부, 노동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2곳) 정보화교육실정에 맞춘 11종의 계층별 과정의 공동 개발·보급을 통해 통합적인 부처지원 사업을 강화하였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해양수산부, 경북도청, 노동부)에 기 개발한 교육콘텐츠를 보급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민간기업(KT, SK텔레콤, 삼성SDS, SK C&C, KTF, DAUM, 한국MS, 인텔코리아)과 정부 단체의 공동 봉사활동으로 민간 협력 자원봉사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여론을 환기 하였다. 정보화교육 수료생의 성취감 고취와 정보화 참여 동기 형성을 위해 정보화 경진대회(3개)를 개최하여 총 867명이 참석하였고 42건의 언론홍보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IT세상' 행사개최와 어린이날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초청 IT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고령층, 비문해자, 새터민 교육 수혜자 및 강사를 대상 (311건 접수)으로 총 46명의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한겨레신문 등 5개 매체에 보도하고 수상작을 근간으로 우수 사례집과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육생에게 보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도청, 한국농아인협회 등 25개 기관에 101개 콘텐츠를 보급하고 (주)희망복지TV, 나라방송 등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하였다. 그러나 국민 대상 본 사업의 인지도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아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는 확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 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2006년 말에 수혜자 및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용 위주의 정보화교육 과제에 대해 교육수혜자 2,0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콘텐츠개발제공 과제에 대해서는 사이트 회원 5,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면접, 이메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질적인 교육 수혜자를 대상으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만족도와 함께 실생활에 도움정도 및 본 과제에 참여한 결과 및 효과에 보다 중점을 두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9)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국민정보화교육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총 응답자 중 보통이상 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8.4%)이므로 총 응답자 1,700명 중 보통이상 만족을 1,672명으로 추산(1,700명×98.4%)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6) (보통이상 만족 1,672명÷총 응답자 1,700명)×100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역량격차 지수는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의 격차를 측정한 지수이다. 2006년도 역량격차 해소 목표 대비 실적은 101.7%⁷⁾로 초과 달성되었으므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취약계층 역량격차 수준	역량격차 목표 달성도=(100-2006년 취약계층 평균 역량격차 실적)÷(100-2006년 취약계층 평균 역량격차 목표) ⑩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 ⑨ 목표대비 90~100% 미만 달성 ⑧ 목표대비 80~90% 미만 달성 ⑦ 목표대비 70~80% 미만 달성 ⑥ 목표대비 70% 미만 달성

다. 근로자복지정책 추진

1) 과제명: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월 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결혼 등 목돈이 소요된 생활필수자금을 근로자에게 저리로 융자해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의(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각각

7) $(100-57.1\text{점})\div(100-57.8\text{점})\times 100$

700만원, 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확대를 위하여 연차별 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2004년에는 7,196명에 대하여 473억원, 2005년도에는 5,855명에 대하여 387억원, 2006년에는 5,110명에 대하여 338억원이 지원되어 각 년도 목표인원을 초과하여 혜택을 받았으며 매년 지원금액은 모두 소진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2006년에 저임금근로자 우선순위에 의한 월 단위 선발방식의 도입으로 대부재원의 조기소진을 막고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된 대부재원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연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졌다. 2005년의 경우 월평균임금 110만원 이하 근로자가 23.1% 130만원 이하 근로자의 비율은 29.8%이다. 신청자가 많아 탈락율이 2006년 39.8%에 이를 정도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수혜율 제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대부신청서를 공단지사에서 접수받고 선발을 공단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여 소속 기관 업무 부담 경감도도 및 부대경비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윤리대상자 월 단위 선발방식에 의하여 고객의 대기시간이 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공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부와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승인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일간지 5개 신문에 사업에 대한 광고, 공단홈페이지와 복지길라잡이를 통한 홍보 그리고 45만개 사업장에 대하여 리플렛을 배포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내부경영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외부기관에 의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행하였으며, 97.66%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text{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 \div \text{전체조사대상인원수} \times 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대부 신청자가 계획 당시의 목표인원을 초과하여 오히려 탈락율이 39.8%에 이르고 대부금액은 모두 소진되어 신청자들의 금액이 목표금액을 초과하여 부족율이 60.0%를 나타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목표치 대비 선발인원 비율	⑮ 100% 선발 ⑫ 90~100% 미만 선발 ⑨ 80~90% 미만 선발 ⑥ 70~80% 미만 선발 ③ 70% 미만 선발
목표치 대비 금액 활용률	⑮ 100% 이용 ⑫ 90~100% 미만 이용 ⑨ 80~90% 미만 이용 ⑥ 70~80% 미만 이용 ③ 70% 미만 이용

2) 과제명: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속 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가 민간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연간 20만원 한도)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접근제한성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공을 꾀하고자 하는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사업」은 공단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 4월 시행 첫해에는 이용비용 지원율이 50%이었으나 2006년에는 80%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u>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u>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선발된 근로자들의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금을 다음달 초에 정산하고 있으며, 매월 '복지시설이용현황', '지원액 집행내역', '이용자 실태분석' 등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한 관리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매월 사업분석을 행하여 사업진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대상 시설이 저임금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이 적은 숙박·문화체육시설로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계획은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료 배포 신문사 3개사, 이메일(PCRM), 일간지 2개지, 월간지 1개지, 135,000개 사업장에 리플렛 1회 발송, 업무제휴사(LG카드)와 연계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

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외부기관에 내부경영평가를 의뢰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외부전문기관에 의하여 우편 및 전화로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혜자 만족도는 96.83%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파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파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2006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사업인원과 지원금액 측면에서 모두 달성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목표치 대비 선발인원 비율	⑮ 100% 선발 ⑫ 90~100% 미만 선발 ⑨ 80~90% 미만 선발 ⑥ 70~80% 미만 선발 ③ 70% 미만 선발
	⑮ 100% 이용 ⑫ 90~100% 미만 이용 ⑨ 80~90% 미만 이용 ⑥ 70~80% 미만 이용 ③ 70% 미만 이용

3) 과제명: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이 사업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2004년 정부부문 적용제외 직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민간부문 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하였다.

2005년 정부부문 적용제의 직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삭제하고 2006년부터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하여 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을 꾀하였다. 2006년 정부부문 장애인의무고용직종이 36%에서 84%로 확대되었으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계약 입찰시 가산점 부여 제도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장애인 중심기업 선정, 장애인 창업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감안하여 사업시기, 예산 등을 배정,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지도·점검·실사 등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법개정 후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및 적절한 대책 강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장애인창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창업전 상권분석과 창업후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u>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u>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장애인공무원 채용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창업장애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영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에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정기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 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였다. 또한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설명회 개최, 설명책자 제작·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수시로 홍보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장애인의무고용 관계법 개정 후 시행현황에 대한 평가가 사업단위별로 진행되었으며, 추가적인 영향평가가 계획되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8)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창업자 중 74%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М·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2006년말 장애인공무원수는 12,219명으로 전년도(6,853명)에 비하여 78.3%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수는 2006년말 63,422명으로 전년도(55,009명)에 비하여 15.3%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 신규로 장애인 중심기업(표준사업장) 15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200명의 신규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창업지원은 126명이 창업에 성공하였으며 목표치(107명)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부부문 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율	(장애인 공무원 수÷전년도말 장애인 공무원 수)×100
	⑩ 15% 이상
	⑧ 12~15% 미만
	⑥ 9~12% 미만
	④ 5~9% 미만
	② 5% 미만
민간부문 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율	(장애인 근로자 수÷전년도말 장애인 근로자 수)×100
	⑩ 15% 이상
	⑧ 12~15% 미만
	⑥ 9~12% 미만
	④ 5~9% 미만
	② 5% 미만
장애인 중심기업의(장애인 표준사업장) 신규고용창출 목표 달성율	(신규고용인원÷목표인원)×100
	⑤ 100% 고용
	④ 90~100% 미만 고용
	③ 80~90% 미만 고용
	② 70~80% 미만 고용
	① 70% 미만 고용
장애인 창업지원 목표달성율	(신규창업인원÷목표인원)×100
	⑤ 100% 창업
	④ 90~100% 미만 창업
	③ 80~90% 미만 창업
	② 70~80% 미만 창업
	① 70% 미만 창업

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1) 과제명: 보육료 지원 확대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성격상 사업내용 변경이 발생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분기별 추진일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었다. 1월에 2006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2월에는 보육제정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시에 보육료 지원확대를 추진하였고, 1, 4, 7, 11월에 분기별 국고보조

금 교부를 결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매월 20일경에 월별 보육료를 교부, 지원하였다. 또한 5, 7, 9월에 보육료 지자체 집행실적을 정산하고, 11월에는 정산결과를 분석한 후 부족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로 기한 내에 충당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첫째, 사업을 위한 자원의 투입 시기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보육료 국고보조금 최종 확정 내시에 근거하여 매월 20일경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연도말 원활한 보육예산 집행을 위해 12월분 국고보조금을 11월말에 지자체에 조기 교부하였다.

둘째, 집행규모는 총 4,993억원(578,291명)이다. 차등보육료 3,591억원(424,463명), 만5세아 무상보육료 1,180억원(141,815명), 장애아 무상보육료 222억원(12,013명)이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과 소득계층별로 추정된 아동 비율에 기초하여 추정된 것으로 하반기에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다.

셋째, 국고보조금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매월 20일경 예산을 시·도에 교부하였고,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업무가 집중되는 2~4월에는 인터넷, 전화 등 각종 민원 폭증에 따른 행정인력 적정 운영을 모색하였으며, 지원대상자 대폭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부족함에 따라 3/4분기에는 당초 계획보다 13% 증액하여 교부하고(당초 교부 67%에서 80%로 변경), 연도말 원활한 보육예산 집행을 위해 12월 국고보조금을 11월 말에 지자체에 조기 교부하였다.

넷째, 사후관리로는 지자체 보육료 국고보조금 교부 후 사후관리를 위해 정산을

실시하고 과부족액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3회, 3, 6, 8월말 기준). 소요 예산 부족액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용 및 예비비 편성 조치를 취하여(11월), 부족예산 예비비 편성 확보 후 4/4분기 국고보조금 지자체 교부를 완료하였다.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첫째, 2006년 보육료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비율, 지원단가 등 보육료 지원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일선 공무원이 소득인정액 파악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조합에 복지행정시스템에 내용 갱신 협조를 요청하고, 또한 2006년 만5세아 무상보육 관련 읍·면지역 조정 협조를 요청하였다

둘째, 영아반 보육료 일원화에 따른 보육시설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6개 시·도 과장회의(2. 23)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차상위계층에 대한 차액수납 여부 결정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3. 23).

셋째, 2006년 보육료 예산 부족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2005년도 말 보육료 실제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소득분포비율을 반영하였으나, 대상 아동 증가로 2006년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7년 예산편성 기준을 변경하여 신청하였다. 국회상임위 예산심의시 2006년 6월말 보육료 실제 집행실적 분석에 따른 2007

년 부족예산 추가편성 요구를 반영하였다. 2006년 6월말 보육료 시·도 집행예산 파악 분석 결과에 따른 보육료 부족예산 확보 조치방안을 강구하였다. 지자체 3/4분기 보육료 집행실적 정산을 8월말 기준으로 조기 실시하여 부족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소요 부족예산액 규모를 파악하여 예비비를 신청하였다.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의로 보육료 부족예산을 예비비 편성이 확보되는 즉시 시·도 교부를 완료하였다(11. 29)

넷째, 보육료 지원대상자 재산 및 소득조사 운영 실태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공정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할 목적으로 2007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실태 파악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10~11월), 2007년 보육료 지원기준, 지원금액, 수납한도액 결정 및 수납 방법 등 지침내용에 대한 지자체,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이상과 같이 변화된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관련기관이나 정책과의 협조는 대상별로 보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행정자치부로 구분된다.

먼저 업주의 주요 파트너인 시·도와 시·군·구와는 협력은 첫째, 2006년 보육사업 안내 개정 관련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16개) 및 시·군·구(232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지자체 시·군·구 실무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지원비율, 산정방식, 지원시점, 지원절차,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단가, 지원방법, 소득 및 재산조사시 변경사항 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는 보육료 지원단가 산출 방식 개선, 지원기준 변경에 반영되었다. 또한 영아반 보육료 일원화에 대한 효율적인 시·도의 수납한도액 결정을 위한 시·도 과장 회의를 실시하여, 각 시·도별 수납한도액 결정현황을 파악하고 2층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 수납 제한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11월에는 2007년 보육료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지자체 의견을 조회하였다.

2007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조사, 부모제출 서류,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침 내용관련 기초 지자체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행 선정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조사, 일반재산, 승용차재산 등의 산정 간소화 방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로 변경 및 만5세아 전면 무상보육, 2006년 보육료 지원 세부내용 및 2006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변경내용 설명하고 협의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는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지침내용을 협의하였다(6회).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지침내용을 협의하여 만5세아무상보육료 농·어촌 대상기준을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광역시 군 지역 포함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고, 기획예산처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2006년 국고보조금 과부족에 따른 대처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외에도 2007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간소화방안 협의,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및 기준 통합방안을 협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을 협의하여 2007년 입양아무상보육료 신규 지원 예산편성을 추진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보육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내용 관련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06년 및 2007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육료) 수립·제출(2

회) 등을 협조하였다. 또한 2007년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선정 작업을 위한 업무 협의로 읍·면·동사무소 업무체계 변경 및 보건복지부 업무 추가로 업무 분산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 실적으로 보육료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제출하였다(3월, 10월, 11월).

농림부와는 농·산·어촌 투융자 계획 검토 자료로 만5세아 보육료 지원현황 및 지원 계획을 협조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개편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작업 체계 변경 여부를 협의하고(2회),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실태조사서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9월, 11월).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국민 및 보육료 지원 대상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전국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금융기관, 소아과 병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였다. 홍보 자료로 4회에 걸쳐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리플렛 “보육료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졌다”를 180만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안내책자 발간 자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용”을 수록하여 홍보하였다. 또한 기본보조금 지원 홍보책자 “우리아이 대한민국이 키웁니다”를 1만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어린이집이 달라졌어요” 리플렛을 19만부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국정홍보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도 계속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당초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2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22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인지도의 변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2004년 실태조사 결과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지는 않으나 최근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 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5개의 평가항목과 이에 따른 9개의 평가지표를 추출하여 평가지표별로 배점을 부여하고 사업부서 자체평가와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5개의 평가항목은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목표의 달성도로 구분하였고, 9개의 평가지표 및 배점은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7점), 의견 수립의 충실성(4점), 성과목표 및 성과자표의 적정성(6점),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5점),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지 여부(7점), 자원의 효율적 집행(5점), 행정여건 상황 변화에의 대응성(7점),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 운영(4점),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 여부(40점)를 적용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설문조사 전문기관 “파워리서치”에 의뢰하여 10. 25~11. 8 기간동안 보육료 지원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혜자 만족도 점수는 77.7점이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가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가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차등보육료는 실적 대비 100%,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91.9%, 장애아 무상보육은 80.1%이다. 만5세는 전체 인원이 감소추세이며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인원수가 감소되었고, 장애아 비전담 통합시설이용 아동은 해당반별 보육료를 지원하므로 인원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차등보육료는 15점, 만5세아 무상보육 8점, 장애아 무상보육은 3점을 부여하여,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6점에 해당된다.

〈부표 5-1〉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목표 및 실적

(단위: 명, %)

구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계획 대비 실적
차등보육료	407,250	424,463	104.2
만5세아 무상보육료	154,349	141,815	91.9
장애아 무상보육료	15,000	12,013	80.1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07.

평가지표	평가척도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수 계획 대비 실적 비율	(보육료 지원 아동 계획÷보육아동수)×100
	⑮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100% 달성
	⑫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90~99% 미만
	⑨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80~89% 미만
	⑥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70~79% 미만
	③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70% 미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아동수 계획 대비 실적 비율	(보육료 지원 아동 계획÷보육아동수)×100
	⑩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100% 달성
	⑧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90~99% 미만
	⑥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80~89% 미만
	④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70~79% 미만
	②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70% 미만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아동수 계획 대비 실적 비율	(보육료 지원 아동 계획÷보육아동수)×100
	⑤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100% 달성
	④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90~99% 미만
	③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80~89% 미만
	②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70~79% 미만
	① 2006년 목표치 대비 실적 70% 미만

마.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 구현

1) 과제명: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국민문화역량 제고는 크게 ‘문화바우처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당초 설정했던 추진 일정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여부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문화바우처 사업은 16개 지역

주관사업자 선정 기준과 평가항목 충족 등의 단체 선별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계획 대비 시행이 다소 지연된 점이 있었으며,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강사파견 활성화,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일정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유아·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여건 마련 사업은 사업 일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

비록 문화바우처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체 일정을 준수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유아·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여건 마련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문화바우처 사업은 사업 시작단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인당 지원금액(3만원 정도)을 설정하는 등 예산의 집행규모 또한 적절히 조정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관리, 인터넷을 통한 접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사업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관람후기 접수 및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사업관련 기관, 단체들에 대한 사전 설명회 및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예산집행 규모 설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한 체계적 사업 관리 및 각종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정책 환류를 통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바우처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전반적으로 관련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문화바우처 사업은 2005년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나, 2006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과 통합,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사업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상황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정책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사업추진 주체들이 이러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추진 사업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교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황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문화바우처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홍보처,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사업 추진 및 정책 홍보에 있어서 실질적 협력이 필요한 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꾸준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예술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내 정보화담당관실, 지자체와 교육청 및 사업 주관단체와 학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연계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문화바우처 사업은 각 시·도청과 공공기관(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포함하여 11,580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문화바우처 사업 홈페이지에 사업관련 기관 15개처의 배너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예술교육 또한 사업설명회 및 주관단체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와 정책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 개최, 포털사이트 아르떼 운영, TV를 통한 정책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문화바우처 사업은 사업주관처에 대한 평가와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내부평가를 공정성 있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또한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 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평가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자체 평가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문화바우처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 조사는 동일한 기준이 아닌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 조사되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평가는 시행한 여러 사업에 대한 총괄적 평가가 아니라 특정 사업(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만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엄밀한 기준에 따라 아래 평가척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문화바우처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가 각각 80점 대 초반과 70%대 후반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70~80%대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⁸⁾.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공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공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모두 최종 실적치가 목표치를 10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

8) 문화바우처 사업 이용자 만족도: 82.2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학생 80.7%, 교사 76.4%, 강사 74.%

는 30점에 해당된다.

〈부표 5-2〉 문화바우처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단위: 명, 천명)

작안사항	작안사항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문화바우처 사업(수혜자)	120,000	164,54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참여자)	1,270	1,548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2007.

평가지표	평가척도
문화바우처 수혜 비율	$(\text{수혜자수 실적치} \div \text{수혜자수 목표치}) \times 100$
	⑮ 100% 이상
	⑫ 90~100% 미만
	⑨ 80~90% 미만
	⑥ 70~80% 미만
	③ 70% 미만
문화예술교육 수혜 비율	$(\text{수혜자수 실적치} \div \text{수혜자수 목표치}) \times 100$
	⑮ 100% 이상
	⑫ 90~100% 미만
	⑨ 80~90% 미만
	⑥ 70~80% 미만
	③ 70% 미만

2) 과제명: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과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인프라 시설의 건립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각 시설은 일정에 맞게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미술관의 경우 지방비 확보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수립한 재정지원기준에 의해 투입되는 것으로 단위시설별 예산집행 규모나 총 시설건립지원 예산집행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집행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되게 하기 위하여 정기실적보고서 접수,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사업집행여부 조정 등 진행관리나 사후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투입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연간계획 및 지방비 확보시기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지원을 받아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 등을 미리 고려하여 관련 예산의 투입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청북도 등 2개도가 태권도박물관 등 3개 사업(2,547백만원)을 포기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이 유보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문화기반시설 건립의 경우, 국고의 지원결정 여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준비 여부가 더욱 중요한 여건으로 제기된다. 따라서 당초 중앙정부차원에서 수립된 지원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의 대응 방안이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각 문화시설은 정기적인 집행실적 집계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을 시 검토 후 승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으나, 추진실적 저조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를 감사원으로 부터 지적받는 등 개선사항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u>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u>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의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검토, 집행실적 확인, 해당 지자체와 공동실사 독려 등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조항에 대한 준수 사항 및 이에 대한 이행추구

역할 등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문화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지원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판단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문화기반시설 건립의 사업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 공청회 개최 및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의 국고지원내역에 대한 정보 및 박물관현황(증가추이)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여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미술관 백서, 연보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문예회관을 시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문화기반시설 여건, 지역주민의 여론, 예술단체 및 공연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책의 인지도 향상 여부는 파악하기 다소 어렵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교부율 및 사업별 실적 행를 점검을 통해 실적을 평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재정사업 자율평가, 군특사업 자체평가 등을 통해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할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시설 건립지원 사업 계획 및 집행에 반영하여 적절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문화기반시설 건립 추진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유보, 취소되는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취약한 점 등을 볼 때, 자체평가의 내용이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9)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대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없다. 다만,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3년 주기로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문화시설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200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70% 초반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부표 5-3〉 프로그램 및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프로그램 만족도	시설 만족도
문화예술회관	74.2	70.5
박물관	72.3	71.6
도서관	71.5	72.1

자료: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6.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과 관련한 목표치 대비 실적치를 살펴보면, 모두 100%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부표 5-4〉 문화기반시설 건립 추진실적

(단위: 개)

구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도서관 건립	53	53
박물관 건립	16	16
미술관 건립	6	6
문예회관 건립	15	15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2007.

평가지표	평가척도
공공문화기반시설 확충성과	(시설확충 실적치÷시설확충 목표치)×100
	㉔ 100% 이상
	㉔ 90~100% 미만
	㉔ 80~90% 미만
	㉔ 70~80% 미만
	㉔ 70% 미만

3) 과제명: 생활체육 활성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확대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당초 사업계획 승인과 월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받아 이를 당초 계획일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전체 일정은 당초계획에 맞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②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사업수행기관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각 시·도는 연2회(상·하반기) 자체 심사분석 및 기금성과 평가(평가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통해 사업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기금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기금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

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확대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사업주체인 국민생활체육협회의 자체 사업조정 Task Force Team을 통해 사업간 기본특성은 유사하나 사업별 수혜대상의 차이 및 사업 운영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분리 지원되고 있는 유사 지원사업간 통합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각 사업마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자 욕구 및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부터 사업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준공 후 지원기관에 사업진행 및 준공 이후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게 하는 등 여하한 환경 변화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p>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p> <p>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p> <p>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p> <p>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p> <p>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p> <p>－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p> <p>－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p>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체육시설 확충 사업인 잔디우레탄조성사업의 경우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학교인조잔디구장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일부 관련 사업에 대해 연계 및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p>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p> <p>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실적이 없는 경우</p> <p>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실적도 없는 경우</p> <p>－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p> <p>－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p>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국민 스포츠 7330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체육동호인 클럽활성화를 위하여 각 단위 사업별로 인터넷 홍보, 거리현수막, 중앙·지방방송 및

인쇄매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기관과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실적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며, 시·도 공무원, 체육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회를 매년 연말 개최하는 등 자체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체평가 시행 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생활체육공원 사업을 제외한 기금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성과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금성과 평가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

과 수혜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70% 중·후반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부표 5-5〉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확대 만족도 결과

(단위: 점)

사업명	만족도 조사결과(100점 만점)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확대	
- 종목별동호인행사지원	77.09
- 종목별클럽리그제운영	79.81
- 지역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76.18
-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76.67
- 스포츠클럽 지원	78.12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2007.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7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frac{\text{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text{전체조사대상인원수}} \times 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각각의 사업들은 목표치 대비 실적치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사업의 경우 100% 이상의 실적치를 보이고 있으나 몇 개의 사업에서 목표치를 100%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총괄적으로 90~100%대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4점에 해당된다.

〈부표 5-6〉 생활체육활성화 추진 실적

(단위: 개소, 명)

구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생활체육공간확충		
- 생활체육공원	32개소 지원	28개소 지원
-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200개소 지원	169개소 지원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6개소 지원	7개소 지원
- 국민체육센터	7개소 지원	6개소 지원
- 게이트볼경기장	2개소 지원	2개소 지원
- 잔디·우레탄운동장	50개소 지원	100개소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확대		
- 종목별동호인행사지원	43종목 123개 대회 지원	43종목 128개 대회 지원, 118,789명 참가
- 종목별클럽리그제운영	10종목 16,270클럽 381,063명 234시·군·구 108,292동호인클럽리그 2,966,917명	10종목 22,315클럽 552,447명 참가 234시·군·구 110,027동호인클럽리그 3,602,376명
- 지역스포츠클럽활성화 지원	시·도생활체육대회 500회 지원	시도생활체육대회 441회 대회 지원 208,834명 참가
-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41종목 60,000명	43종목 60,000명 참가
-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9개 스포츠클럽 지원, 운영	9개 스포츠클럽 지원, 운영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2007.

평가지표	평가척도
	(참여율 실적치÷참여율 목표치)×100
생활체육 참여율	㉓ 100% 이상 ㉒ 90~100% 미만 ㉑ 80~90% 미만 ㉐ 70~80% 미만 ㉏ 70% 미만

4) 과제명: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참여기회 증진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광 사업은 전체 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여행 실시 시기는 당초 8월에서 9월로 지연되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사업시작일의 지연으로 인해 자원투입시기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으나, 관광 프로그램 일정별로 배정된 예산(대상별)을 사업추진 시기에 맞게 지원하여 진행하고, 여행사들의 복지관광 예약금 외 대부분의 경비를 행사완료 후 사업진행결과와 함께 청구 받아 지급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사업추진시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별도로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장애인 관련 사업 등 프로그램의 추진에 있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진 추가 동행

원칙을 수립하는 등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보건복지부 및 16개 시·도 복지담당공무원들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올해 사업은 복지관광 참여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지방

자체단체와의 협력과 추천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일반에 대한 홍보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행정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공문 등을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시행은 유사한 성격인 문화바우처 사업 시행방식과 비교할 때 다소 수동적인 것으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각 복지관광의 개최시마다 그 행사에 참가한 대표자로 구성된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업마다 이용자 만족도를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평가한 내용은 다음 사업의 개선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단순한 객관식 설문 응답이 아닌 주관식 및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어 질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 파악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취약계층 복지관광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참여자 의견 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87.1%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부표 5-7〉 복지관광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만족	조금만족	보통	조금불만족	매우불만족	무응답
전체	70.3	16.8	8.9	1.8	0.4	2.0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2007.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당초 취약계층 복지관광 실시 대상인원 목표치는 1,000명이었으나 실적치가 1,015명이 되어 목표치를 100%이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취약계층 관광지원 수혜 비율	(수혜자수 실적치÷수혜자수 목표치)×100
	⑩ 100% 이상
	④ 90~100% 미만
	⑧ 80~90% 미만
	⑫ 70~80% 미만
	⑥ 70% 미만

5) 과제명: 청소년분야(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1990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부재, 낙후된 시설, 부족한 예산,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어렵게 운영되었다. 2006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현장답사,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전국실태조사,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근거마련,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 제도개선 마련을 위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일정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2005년도부터 군특회계를 도입하면서 각 지자체는 전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있으며 지방비 50%로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의 투입시기와 집행규모를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원기준은 최소 열람석 50석 이상, 상근자 1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평가할 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년 1회 지자체로부터 개별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공부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정책수립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공부방 학습지원 및 문화체험활동 사업”을 신규 공모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②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청소년공부방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되어 학교 또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수시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지자체 및 공부방별 홈페이지, 홍보전단지, 반상회, 현수막 등을 통하여 각 지역의 청소년공부방 위치, 제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 월곡 청소년공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 및 지역 대학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지원 등을 홍보하여 국정브리핑에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자료가 제시되었으나 전체적인 자체평가 방식과 내용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4점 만점에 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6)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2006년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를 2006년 5월부터 전국의 청소년공부방 621개소를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한 달 간 실시하였다. 조사방식은 현장답사와 실태조사표 작성으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이용자들은 95.7%가 청소년공부방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7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청소년분야의 사업 중 “소외청소년 수련활동 지원”과 “소외청소년 문화향수권 신장”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 이후 사실상 다른 사업에 흡수되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사업에 대한 평가만 실시되었다.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수혜비율’은 2006년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한 청소년 수가 2,459,000명으로 목표치인 2,480,000명 대비 99.2%가 달성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2점에 해당된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확대’ 평가지표 결과, 프로그램 수가 2005년 240개에서 2006년 250개로 전년 대비 4.17% 증가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text{수혜자수} \div \text{실적치} \div \text{수혜자 수 목표치}) \times 100$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수혜비율 (연인원)	⑮ 100% 이상 ⑫ 90~100% 미만 ⑨ 80~90% 미만 ⑥ 70~80% 미만 ③ 70% 미만
	$(\text{현년도 프로그램 수혜자 수} - \text{전년도 수혜자수}) \div \text{전년도 수혜자수} \times 100$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확대 (연인원)	⑮ 30% 이상 ⑫ 10~30% 미만 ⑨ $\pm 10\%$ ⑥ -10~-30% 미만 ③ -30% 이하

바.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1) 과제명: 특수교육강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특수교육강화 과제는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일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되었다. 다만,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이 당초 2006년도 추진계획상 31개교 20,000백만원을 투여하

기로 하였으나 학기 중 공사 진행의 어려움으로(교육인적자원부 추진실적 보고서 참조) 인해 결국 30개교, 12,096백만원에 그쳤다. 따라서 분기별 자체점검 결과 추진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이므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지표분석에 따라 자원의 '투입시기'가 적정하고 '집행규모'도 2005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2006년 사업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처의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자원의 '운영관리방법' 및 '사후관리' 역시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각종 정책에 대한 부처의 적극적

인 모니터링 실시 여부와 이를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대한 적시적이고 적절한 탄력적 대응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지표기준을 토대로 살펴볼 때, 설명회(통지)나 워크숍 개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모니터링이 문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애로점에 따른 탄력적 대응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작성 및 배부는 단순한 정책 모니터링에서 나아가 정책의 실질적 효율성을 도모한 정책방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특수교육의 사업 성격상 관련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의 정책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특수교육강화는 다양한 부처 및 기관, 지역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실적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현재 본 과제에 대한 국민 이해당사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 파악 여부를 지표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부분 사업과제들이 대체로 그러하다. 다만, 장애인식 개선 ‘희망으로 콘서트’ 개최(2006. 6)와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이용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발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건강장애학생 실태조사 등을 간접적으로 인지도를 확대한 방안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의 일환들이 각각의 사업과제나 정책에 대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지도 확대 효과를 주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향후 인지도 향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발굴하여 확보하는 것이 요청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성과지표 달성 실태조사와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병원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N=51명) 평균 92점이 나왔으나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에 대한 학부모 및 교사(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76%, 77%에 달하여 평균 80~90%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특수교육강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여부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 지표들은 연구자가 해당부처의 2006년도 추

진실적을 토대로 구안한 것을 당해 부서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먼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확대는 지원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추진계획(2,000명÷3,202백만원) 대비 실적(2,363명÷3,202백만원)을 비교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지원대상 학생수가 확대되어졌음을 확인하여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학습자료개발 보급률은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하였다. 학습자료개발 보급률은 추진계획상 자료개발 보급실적 대비 실제 개발보급 실적을 비교하여 그 비율을 산출한 결과로 평가하였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도 학습자료개발 보급 예산을 15,193백만원으로 계획하여 동년에 이 예산 모두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개의 하위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통합학급교원 특수교육관련 연수과정 확대비율이고, 또 하나는 특수교육전문성 함양 연수과정 참가교원 확대비율이다. 두 개의 평가지표 모두 전년도(2005년) 대비 2006년의 개선·확대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지표이다. 먼저, 시·도 교육연수원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 중 특수교육 과정 개설 비율은 2005년의 경우 746개 과정 중 578개 과정이 개설되었고(개설비율: 77.5%), 2006년의 경우에는 696개 과정 중 564개 과정(개설비율: 81.0%)이 개설되었다. 당초에는 (당해년도 연수과정 수÷전년도 연수과정 수)×100이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므로 평가결과는 1점에 해당하였다. 이후 담당자와의 추후 협의과정에서 본 지표가 갖는 타당성이 의심되어 다시, (당해년도 전체연수과정 대비 통합학급교육관련 연수과정 비율÷전년도 전체연수과정 대비 통합학급교육관련 연수과정 비율)×100의 지표로 재조정하였다. 이는 추진실적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추후 연락하여 논의한 결과이다. 즉, 전체 과정수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특수교육 강좌개설 과정 수로만 비교 평가하는 것보다 당해연도 전체 과정 수에 대한 개설비율의 추이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실적은 2005년 12,172명의 교원이 참여하였고, 2006년에는 17,280명으로 약 140%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여 설정된 평가

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이 결과는 앞의 연수과정 평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특수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수과정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평소 특수교육연수과정에 대한 현직 교원들의 수요조사가 필히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전체 교사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사실에서 연수과정의 다양성을 기초로 규모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규모를 기준으로 수요에 근거해 다른 내용의 연수과정을 개설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필히 고려하고 반영하여 향후 연수과정 확대비율을 수정·보완하여 어떤 평가지표를 구안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수 확대비율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대상 학생수 실적÷2,000명)×100
	⑩ 100% 이상 달성
	⑧ 90~100% 미만
	⑥ 80~90% 미만
	④ 70~80% 미만
	② 70% 미만
학습자료개발 보급률	(학습자료개발 보급실적÷추진계획상 자료개발 보급 실적)×100
	⑩ 100% 이상 달성
	⑧ 90~100% 미만
	⑥ 80~90% 미만
	④ 70~80% 미만
	② 70% 미만
통합학급교원 특수교육관련 연수과정 확대비율	(당해년도 연수과정 수÷전년도 연수과정 수)×100
	⑤ 10% 이상 확대
	④ 5~10% 미만 연수과정 확대
	③ 전년대비 5% 미만 연수과정 확대
	② 변동 없으나 새로운 유형의 연수과정 개설
	① 감소 혹은 변동 없음
특수교육전문성 함양 연수과정 참가교원 확대비율	(당해년도 연수과정 참가교원수÷전년도 연수과정 교원수)×100
	⑤ 10% 이상 확대
	④ 5%~10% 미만 연수과정 확대
	③ 전년대비 5% 미만 연수과정 확대
	② 변동 없으나 새로운 유형의 연수과정 개설
	① 감소 혹은 변동 없음

2) 과제명: 유아교육기회확대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유아공교육화의 조기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등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비 지원 및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추진 일정을 늦추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유아교육비 지원은 매분기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소요액을 신청 받아 기별 전월에 교부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 금액을 합하여 해당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매분기 집행현황 및 다음 분기 지원현황을 받아서 미집행분 발생시 다음 분기 집행에서 감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청에서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구성이 적절하였다. 따라서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에 모두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유아교육비 지원 중간점검 실시 후 집행실적이 낮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 전수 조사하여 유아교육비 집행 잔액 처리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회 개최(2006. 8), 부내 협의회 개최(2006. 9) 및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 전용 등을 검토(2006. 10)하는 등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판단된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사업’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종일제 담당 정교사 배치 요구, 종일제 운영시간 및 기간의 현실화, 늦은 시간 운영에 따른 안정성 보장 등을 요구하여, 종일제를 전담할 정교사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배정하였고, 종일반 환경개선비에 폐쇄회로 TV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돕고 인근 경찰관서와의 비상 연계체제를 강화하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유아교육비는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등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확대는 시·도 교육청의 종일제 유치원 확대 및 지원방안과 연계하였으며, 육아정책개발센터와 연계·협조하여 종일제 유치원을 홍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국민과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반사회 자료 배포, 포스터

개발 및 보급 등을 병행 추진하였다. 다만 이에 대한 인지도 파악여부 및 인지도 향상여부에 대한 만족할만한 객관자료가 없어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유아교육비 지원확대 사업은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확대사업은 시도교육청 및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였다. 특히 시도 교육청 혁신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하였고, PIMS를 활용하여 정책고객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유아교육비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만족한다가 47.1%에 달하여 예상외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실적보고서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지

원절차의 복잡성, 차량기준의 불합리성으로 나타난 바, 향후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교육인적자원부 단독사업의 성격으로 평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만3~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유아교육비 지원)와 여성가족부(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동일 기준으로 분리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어느 한 부처 단독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부모 불만족 사유인 차량기준 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2006. 1. 9)를 시도하였으나, 여가부의 반대로 기준을 완화하지 못하였다”고 추후 부처안을 제출하였다.⁹⁾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은 동 평가항목에서 6점을 받았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점에 해당되나 사업의 성격과 동일 사업에 대한 부처형평을 참고하여 6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유아교육기회확대사업의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수혜율, 둘째,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수혜율, 유치원일반 운영비율이 그것이다.

이 중 만5세 취원아 무상교육비 수혜율 추진실적과 만3~4세 취원아의 차등교육비

9) - 교육인적자원부(안): 10년 미만 2000cc이상 차량 ⇒ 5년 미만의 2000cc이상의 차량으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조건 없이 모든 차량을 일반재산으로 환산하는 방안 제시
- 여가부 반대사유: 보육료 예산 부족(2006년 790억원 예비비 사용)

수혜율 실적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각각 100% 달성으로 10점에 해당된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율은 71.5%에 달해 평가결과는 약 102%이므로 8점에 달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모두 2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수혜율	(만 5세 취원아의 무상교육비 수혜율 실적÷43.1%)×100
	⑮ 100% 이상 달성
	⑫ 90~100% 미만
	⑨ 80~90% 미만
	⑥ 70~80% 미만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수혜율	(만 3·4세 취원아의 차등교육비 수혜율 실적÷34.7%)×100
	⑤ 100% 이상 달성
	④ 90~100% 미만
	③ 80~90% 미만
	② 70~80% 미만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율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율 실적÷70%)×100
	⑩ 110% 이상 달성
	⑧ 100~110% 미만
	⑥ 90~100% 미만
	④ 80~90% 미만
	② 80% 미만

3) 과제명: 저소득층 교육지원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저소득층 교육지원과제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지원과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저소득층 자녀교육비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초과달성(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158천명→165천명)하였으므로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확대 역시 전체학생의 6.3% 수준으로 급식비지원확대를 추진하였으나, 6.8%로 초과달성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실정 및 소득여건 등 자체실정을 고려한 지원기준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편성방식 지원에서 학비면제로 전환하여 학비지원방식을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수요조사 및 소요예산 확보는 시·도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의 연도별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목표(지원율)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원(예산)의 투입시기와 운영방안은, 매년 초 시·도 교육청이 각급학교별 소요예산을 배정하고, 학교장은 저소득층자녀의 보호자로부터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고 동 예산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급식비를 대체하여 집행하며, 학교장은 분기별 또는 연도 말에 집행결과를 자체적으로 정산하고, 교육청에 보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에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학비지원 신청자의 허위서류 제출로 비대상자가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중지원, 허위서류 제출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을 경우는 회수조치를 하고 있다. 또 지역실정과 재정여건에 따라 등록금을 결정하고, 지방이양 취지에 맞게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비지원은 2005년부터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 2회(4월과 12월) 시·도 교육청의 급식지원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등 상황 변화에 대처하며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구축,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원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동사무소 등)과 자료공유 및 협의를 통해 증빙서류 간소화 등 학비지원 대상자의 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학교 밖에서 식사하는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사회복지전담공무원)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아동급식 대책협의회 운영 3회).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우편 등으로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이때 학부모(보호자)에게 학비지원 신청절차, 방법 및 신청서를 제출할 학교주소와 담임교사를 안내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안내할 수 있는 학교 연락처를 알리고 있다.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확대사업은 2006년 4월, 16개 시·도 교육청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언론을 통해 발표(2006. 4. 20)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반 국민 모두에 대한 홍보성과는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사업에는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시·도 교육청에 사업자체를 이관한 과제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도 교육청에서 각급학교(관련공문, 가정통신문 발송)식의 행정전달체계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인지도 파악을 위한 객관적 자료의 불충분으로 이에 대한 평가가 현 수준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현재 본 사업은 지방교육혁신평가 중 재정운영분야 평가로 사업의 안정적 관리 및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자체평가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투여자원에 대한 관리적 차원에서의 자체평가라 할 수 있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갖는 효과를 목적 대비 측정하는 자체평가로 보기는 다소 미약하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목적대비 사업의 효과를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업평가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확대사업은 2006년부터 교육부 주요정책평가과제로 선정되어 외부평가위원을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3점으로 하였다.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8)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처음에는 만족도 조사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미비로 평가가 다소 곤란하였다. 실
적보고서에는 담임교사 추천제로 학비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였으나 객
관적인 데이터는 적시되지 않고 있다. 수혜집단 대상이 크므로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가급적 향후에는 표본집단을 선정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성
과지표에 합치하는 자료 확보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이후 평가과정에서 부서의 담당
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따른 만족도 결과를 전달받은 결과, 가정
부담 경감에 대한 응답결과가 78.9%임이 확인되어져 이를 만족도 조사결과로 인정
하였다.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 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 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전체학생 대비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학생비율이 2006년도에 6.8%에 달해 지표에
따르면 107%를 상회하고 있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계획대비 실적률은 104%
에 머물고 있어 12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7
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비율	(전체학생대비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학생비율 실적÷6.3%)×100
	⑮ 105% 이상 달성
	⑫ 100~105% 미만
	⑨ 90~100% 미만
	⑥ 80~90% 미만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계획대비 실적율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대상 학생수 실적÷158,000명)×100
	⑮ 105% 이상 달성
	⑫ 100~105% 미만
	⑨ 90~100% 미만
	⑥ 80~90% 미만
	③ 80% 미만

4) 과제명: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사업의 주요 사업들은 장애인 특별전형 활성화, 교수학습여건 조성 및 지원, 편의시설 확충, 학자금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등이다. 사업들은 계획대비 추진일정이 준수되었으므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담당부서가 제출한 실적내용에 근거하여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 제반 영역별 평가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⑤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본 사업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국고지원 중간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2006. 8), 이에 따른 지적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저조, 대학 자체 대응 투자 미흡 등이 제시되어 이의 조치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전액 집행 및 대학 대응자금 비율 준수 등 국고보조금 집행의 철저 촉구(2006. 9)를 한 바 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대학문화개방 확대 및 장애학생 특성에 따른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등을 목표로 설정하되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쉽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개별 대학의 의지에 따라 대학간 편차가 나타나고 이것이 곧 장애학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사업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반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대학과의 연계협력을 시도하여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유도, 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학자금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역시 유관부처(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외 기타 담당부처) 및 기관들(건강보험관리공단, 대학, 금융기관) 등과 적극 연계협력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대학별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 평가결과를 점검, 발표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한 바

있으며(2006. 2),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언론보도, 우수사례 집 발간 배포, 이상의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탑재 등 다양한 홍보를 한 실적은 있으나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객관적인 실적이 없다. 이는 학자금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④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를 평가(2005. 11~2006. 2)하였고,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등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2006. 8)을 실시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실적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각 대학의 만족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를 평균으로 하여 지표를 삼는 것은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만족도는 평가척도상 평균으로 하여 7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text{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 \div \text{전체조사대상인원수} \times 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본 사업의 목적 및 목표달성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지표로 삼은 것은 장애인 특별전형 교육기회 확대비율과 고등교육기관 저소득층 특별전형기회 확대비율이다. 이중 첫 번째인 장애인 특별전형 교육기회 확대비율은 전년도 대비 약 9% 이상 달성하여 12점에 해당하며 두 번째인 고등교육기관 저소득층 특별전형기회 확대비율은 아래의 공식에 대입하여 현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여 10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장애인 특별전형 교육기회 확대비율	(당해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학교수 \div 전년도 학교수) $\times 100$
	⑮ 10% 이상 달성
	⑫ 5~10% 미만
	⑨ 5% 미만
	⑥ 변동 없음
	③ 감소
고등교육기관 저소득층 특별전형기회 확대비율	1)(저소득층 특별전형기회 제공 고등교육기관 수 실적 \div 전체 고등교육기관 수) $\times 100 = A$ 2)($A \div 3.9$) $\times 100$
	⑮ 100% 달성
	⑫ 90~100% 미만
	⑨ 80~90% 미만
	⑥ 70~80% 미만
	③ 70% 미만

사.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 부적응 예방

1) 과제명: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사업은 학교상담운영체제 혁신강화와 대안교육활성화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각 사업들은 대체로 추진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수행했으나,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보가 추진계획대비 부족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대안교육활성화 사업은 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무리 없이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학교상담운영체제 혁신강화사업은 관리방법 및 집행규모를 제외하고 투입시기, 사후관리 부분에서 다소 걱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해서는 2005년도 실적기준을 이용하거나 2007년도 계획을 이용하고 2006년도 현재 203명 계획대비 175명 배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다. 또한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혹은 순회교사 등의 사후관리방법에 대해 정확한 기술이 추진실적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학교상담운영체제 혁신강화사업과 대안교육활성화 사업 모두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은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복지 관련 전문가 지도 및 평가(중간모니터링)를 실시한 바 있고, 전문상담순회교사 상담실적을 매월 보고받고 있으며 상담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학생비행 사전 예방활동 및 부적응행동 상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 활동보고도 매월 받고 있으며 활동에 대한 평가관련 정책연구(2006. 12)도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 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②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학교상담운영체제 혁신강화사업은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사회복지사협회 등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맺고 추진되고 있으며, 대안교육활성화사업은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상정시(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9) 사전 협의를 통해 연계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중도탈락 등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에 통일부 등과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학교상담운영체제 혁신강화사업은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없고(배움터 지킴이 발대식 정도)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반면 대안교육활성화는 언론보도, 관련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한 바 있으나 역시 이로 인한 인지도 제고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가 없어 전체를 고려하면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특히 학교상담운영체제 혁신강화사업의 대국민 및 이해당사자 홍보전략을 향후 구안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에 대한 자체평가가 실시된 바 있고 배움터 지킴이 활동평가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안교육활성화는 자체평가계획에 의거하여 격주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만 전문상담교사 및 순회교사 등에 대한 평가가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 할 만하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6)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당초에는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가 미비하였으나 추후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2007년도 대안교육연수추진계획서” 내의 2006년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전달받았다. 2006년도 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95.5%이므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text{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 \div \text{전체조사대상인원수} \times 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목적 및 목표에 대한 평가지표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상담자원봉사자 지원학교 확대비율,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활용비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추진계획대비 실적의 비율이 86.2%로 나타나 9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상담자원봉사자 지원학교 확대비율과 배움터 지킴이 활용비율은 각각 500개교와 100개교로 모두 달성하여 100%로 나타나 각각 10점과 5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4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text{전문상담교사 배치 수} \div 203\text{명}) \times 100$ ⑮ 100% 이상 달성 ⑫ 90~100% 미만 ⑨ 80~90% 미만 ⑥ 70~80% 미만 ③ 70% 미만
	$(\text{상담자원봉사자 지원학교수} \div 500\text{개교}) \times 100$ ⑩ 100% 이상 달성 ⑧ 90~100% 미만 ⑥ 80~90% 미만 ④ 70~80% 미만 ② 70% 미만
배움터 지킴이 활용비율	$(\text{배움터지킴이 배치 학교규모} \div 100\text{개교}) \times 100$ ⑤ 110% 이상 달성 ④ 105~110% 미만 ③ 100~105% 미만 ② 90~100% 미만 ① 90% 미만

2) 과제명: 귀국학생 교육지원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추진계획 대비 추진일정에 대해 평가한 결과, 당초 추진일정에 맞춰 모든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추진실적에 따르면 모든 사업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모든 사업들이 추진일정에 맞춰 완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연역적 추론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방과후 한국어반(KSL)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언급한 바, 대체로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시·도 교육청별로 특색사업을 추진한 것을 모니터링 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예시나 이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다문화가정 정책지원과 연계 협력하였다고 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카운터파트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다문화관련 정책사업들은 최근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다수 사업들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과 운영이 요망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귀국학생 교육지원은 이해당사자에게 제한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나, 가능하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정책에 대한 홍보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도 갖는다. 예컨대, 최근 해외유학 학생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사례도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홍보실적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 등에 대한 대응성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자체평가 시행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자체 모니터링 실시여부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평균점수를 설정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6)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KSL 참여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중 연수운영 및 관리, 연수 내용 및 질에 대한 참가교원들의 만족도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본 사업은 국내적응 프로그램 대상학생 만족도와 한국어반 지도교사 직무연수 대상교원 만족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국내적응 프로그램 대상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84%의 학생들이 만족하여 15점, 한국어반 지도교사 직무연수 만족도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15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내적응 프로그램 대상학생 만족도	2006년 8개 시·도 교육청 주관 특색 있는 적응 프로그램 참여 귀국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⑮ 80% 이상 만족 ⑫ 70~80% 미만 ⑨ 60~70% 미만 ⑥ 50~60% 미만 ③ 50% 미만
한국어반 지도교사 직무연수 대상교원 만족도	2006년 국제교육진흥원 주관 연수 참가 교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⑮ 80% 이상 만족 ⑫ 70~80% 미만 ⑨ 60~70% 미만 ⑥ 50~60% 미만 ③ 50% 미만

아.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1) 과제명: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확대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투자우선지역)은 2003년부터 실시하여 2006년 기준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된 사업이다. 신규지역 15개 지역이 포함되어 사업이 계획에 따른 일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투입시기의 고려, 집행규모, 운영방안, 사후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투자우선지역사업은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열악한 곳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행정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업 참여 학교가 탈퇴하거나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 각 학교 및 지역에서는 학교복지위원회와 지역운영협의회를 통해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따르는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지역마다 사업모니터링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p>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p> <p>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p> <p>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p> <p>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p> <p>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p>
	<p>－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p> <p>－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p>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시행과정에서 투자우선지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문화예술관련시설 및 단체, 복지관련시설 및 단체,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과 적극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핵심 역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므로 당연히 네트워킹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③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사업의 성격상 낙인효과 때문에 널리 홍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관계자 연수 등을 통해 나름의 홍보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책에 대한 인지도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어도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일부라도 표집하여 인지도 파악의 객관적인 자료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③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시·도 및 중앙단위에서의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만족도 조사, 연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절한 평가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나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학생의 경우 92.5%, 학부모의 경우 95.6%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대상 학생의 학력신장 향상 정도는 아직 구체적인 평가도구의 개발미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난점을 갖고 있는 사안이나, 2007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력을 포함하여 대상학생 전반의 향상 및 변화 정도를 점검하고 평가할 중단평가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근 사업평가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0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평가보고서)의 일부 지역(부산 해운대, 서울 관악구)을 중심으로 사업수행에 따른 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진학생이 2년간의 사업참여에 따라 읽기, 쓰기, 기초수학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분명한 학업신장 향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계량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가시적으로 분명한 신장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대상학생 학력신장 향상정도	(2006년도 대상학생 학력÷2003(혹은2004년) 대상학생 학력)×100
	㉔ 10% 이상 향상
	㉔ 7~10% 미만
	㉔ 5~7% 미만
	㉔ 5% 미만
	㉔ 감소 혹은 변동 없음

2) 과제명: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모두 완료되었고, 농·산·어촌 학교 군 구성운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도 일정에 따른 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도시문화 체험학습 운영도 무리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의 제반사업들 모두 일정을 준수하여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㉔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㉔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㉔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㉔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㉔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도 교육감 및 지역교육장, 학교가 시행주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투입시기와 집행규모, 관리방법 및 사후관리가 제반 사업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본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대부분이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일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계획에 따라 무리 없이 타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사업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며, 설문지를 통한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통해 사업을 중간점검하고 있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②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사업에 따라 관련기관 및 정책과의 연계와 공조, 협력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실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공립병설 유치원 신증설,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등)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사업실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는 사업의 성격상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가 해당되는 사업만 고려하였으며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4월, 7월에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시·도 교육청별 홈페이지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타의 다른 과제처럼 정책에 대한 인지도 변화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없고, 다만 농·산·어촌 우수교 교장선생님들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찬회 자료집이 있었다.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대부분의 사업이 적절하게 자체평가를 하고 있거나 중간점검을 하고 있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본 과제는 다양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만족도 조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은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조사: 목표치 50점 이상, 실적치 62.9점),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중심학교 77.6%, 협력학교 57.5%), 도시문화체험학습 운영(목표치 85%, 실적치 90%),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사업((학생 90.0%, 학부모 89.5%, 담당교사 81.7%) 등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점수를 평균화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각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전체조사대상인원수)×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농어촌학교 도시문화체험학습 운영비율은 현재 70%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5점에 해당된다.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은 계획대비 실적에 있어 당초 150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하였으나 121학급에 그쳐 80.6%에 달해 3점에 해당된다. 복식수업교재개발 보급,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농어촌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등은 모두 계획대비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각기 100%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하여 모두 5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2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농어촌학교 도시문화체험학습 운영비율	$\{도시문화 체험 학생수 \div 면지역(도서벽지 포함) 초등학생 수(301,515명)\} \times 100$ ⑤ 70% 이상 ④ 65~70% 미만 ③ 60~65% 미만 ② 55~60% 미만 ① 55% 미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2006년 실적 \div 계획) \times 100$ ⑤ 100% 신증설 ④ 90~100% 미만 ③ 80~90% 미만 ② 70~80% 미만 ① 70% 미만 구축
복식수업 교재 개발 보급	$(2006년 실적 \div 계획) \times 100$ ⑤ 100% 완료 ④ 90~100% 미만 ③ 80~90% 미만 ② 70~80% 미만 ① 70% 미만 구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2006년 실적 \div 계획) \times 100$ ⑤ 100% 달성 ④ 90~100% 미만 ③ 80~90% 미만 ② 70~80% 미만 ① 70% 미만 구축

평가지표	평가척도
농어촌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	(2006년 실적÷계획)×100
	⑤ 100% 달성
	④ 90~100% 미만
	③ 80~90% 미만
	② 70~80% 미만
	① 70% 미만 구축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2006년 실적÷계획)×100
	⑤ 100% 달성
	④ 90~100% 미만
	③ 80~90% 미만
	② 70~80% 미만
	① 70% 미만 구축

자.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1) 과제명: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밝고 즐거운 교육환경 만들기는 학생인권 보호차원의 차별금지 유도, 학생인권 제고 방법 발굴, 학생인권보호 정책연구 실시, 인성교육 우수방법 발굴 및 인성교육 분위기 조성 등의 단위사업들로 구성되어졌다. 단위 사업별로 시행일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어져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본 과제는 시·도 교육청 및 학교, 관계단체·기관과의 유기적 체제에 기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성격을 가지며, 각 사업별로 시기를 나누어 계획된 예산을 배분하여 집행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는 시·도 교육청의 책임아래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특별히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②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본 과제는 학교폭력, 학생 인권보호, 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바, 사업 성격상 정책연구, 정책연구학교 운영, 인권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개최 등으로 계획 대비 일관된 추진을 요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초기에는 각 단위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결과가 취합되지 않아 실적보고서의 통계취합 및 교육청과의 공동분석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그런 후 해당 부서 담당자와 연락 후 각 과제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받은 결과, 주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학교폭력 및 인권보호 등)이 이루어졌고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워크숍, 발표회 등)를 확인하였다. 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하였다고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성격상 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인권의 문제가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인권단체, 학부모단체 등과의 연계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2006년에는 MBC-FM, SBS-FM에서 가수 싸이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를 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중파를 통한 대국민 홍보실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정책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아울러 학생인권 보호 및 제고를 위한 사업의 성격상,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전략 구축 및 실행은 중요하므로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본 과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통계취합 및 교육청과의 공동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자체평가는 실시하였으나, 학교단위 및 교육청 단위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인권 보호차원에서 학부모단체 및 관련단체와의 연계협력 평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6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6)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본 과제에 대해 만족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만족도 조사에 대한 객관화된 조사결과 제시가 없어 중간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7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text{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 \div \text{전체조사대상인원수} \times 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본 과제의 목표달성도는 정책연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개선에 대한 만족도를 근거로 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1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전국 32개 학교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학생인권개선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만족도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아 중간점수를 부여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학생인권보호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학교(06.12선정) 학생대상 학생인권개선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⑩ 80% 이상 만족
	④ 75~80% 미만
	⑬ 70~75% 미만
	⑫ 60~70% 미만
	⑥ 60% 미만

차.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복지정책 추진체계 구축

1) 과제명: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구축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계획대비 추진실적에 일정에 따라 준수하였으므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본 사업은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이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영역 등 전반적인 수준에서 효율적 집행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본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설치되어진 중앙연구지원센터 및 각 지역운영협의회 연구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에 따라 상황변화

에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란 과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운 사업의 한계를 갖고 있으나 인지도

파악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필요하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5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중앙연구지원센터, 지방연구지원센터, 시·도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감독 등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본 과제와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가시화된 성과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М·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text{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 \div \text{전체조사대상인원수} \times 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지역 수는 당해연도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100% 달성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3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역 수	당해연도 계획 대비 추진실적
	⑩ 100% 달성 ⑨ 90~100% 미만 ⑧ 80~90% 미만 ⑦ 70~80% 미만 ⑥ 70% 미만 구축

2) 과제명: 민간의 참여활성화

□ 지표명: ① 추진일정 준수 여부

민간의 참여활성화과제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⑩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⑧ 분기별 자체점검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된 사항이 1개인 경우 ⑥ 지연사항이 2개인 경우 ④ 지연사항이 3개인 경우 ① 지연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당초 평가계획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소명이 있더라도 지연으로 판단

□ 지표명: ② 자원의 효율적 집행

본 사업의 성격상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이외에도 지자체의 예산과 함께 대학생 멘토라는 인적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투입의 시기와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 투입시기 • 집행규모 • 관리방법 • 사후관리
	⑩ 4개 모두 적정 ⑧ 3개 적정 ⑥ 2개 적정 ④ 1개 적정 ① 모두 부적절 - 논리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법률 제·개정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이에 대해 소명 하는 경우 투입시기와 집행규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표명: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대학생 멘토 모임의 활성화, 사전 멘토 연수, 중간점검 등을 통해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경우 ⑧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은 경우 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모니터링’은 각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였는지의 의미는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는가를 말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한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 지표명: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대학교, 서울시 교육청, 동작 교육청 및 관악 교육청, 동작구청 등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⑩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⑤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①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운영 실적도 없는 경우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정책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명백히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표명: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멘토 모집을 위해 대학 등에 홍보를 하고 있었고, 학교 홍보 이외에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책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관련부처 장(부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에 따라 본 과제는 국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한 실적들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른 인지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인지도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데이터가 확보가 요청된다.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하였는가	⑩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경우
	⑤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① 국민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공청회, 설명회, 정책홍보물(책자 등) 발송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이 포함됨

□ 지표명: ⑥ 자체평가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대학생 멘토링 평가를 위해 멘티와 멘토,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있었고, 멘티 학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 등을 통해 검사, 비교 평가 등을 하고 있었다.

자체평가 시행여부는 2점 만점에 2점, 자체평가 방식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0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최종점검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② 최종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는 시행하였는가
	④ 자체평가의 방식은 적절한가
	④ 자체평가의 내용은 적절한가
	- 배점구간은 10~0점임
세 척도의 점수합계=(10)	

□ 지표명: ⑦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5점 만점 기준으로 멘티는 3.7, 멘토 3.8, 그리고 학부모 3.91로 만족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9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국민·이해당사자가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⑩ 100% 만족 ⑨ 90~100% 미만 만족 ⑦ 80~90% 미만 만족 ⑥ 70~80% 미만 만족 ④ 60~70% 미만 만족 ② 60% 미만 만족 - PCRM·인터뷰·여론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백분율($\text{성과에 만족하는 인원수} \div \text{전체조사대상인원수} \times 100$)로 환산하여 산출

□ 지표명: ⑧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

지역별 대학생 멘토링 실태는 16개 시·도 중 전남과 제주가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87.5%) 6점에 해당된다. 국민 이해당사자 만족도는 학부모와 멘토, 멘티의 만족도로 대체한 결과 8점에 해당하였다. 대학생 멘토링의 봉사학점 인정정도는 14개 시·도에서 참여하는 59개의 대학 중 학점인정 대학이 46개(77.9%) 대학으로 나타나 4점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설정된 평가척도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18점에 해당된다.

평가지표	평가척도
지역별 대학생 멘토링 실태 파악 정도	(2006년 기준 대학생 멘토링 실태파악이 완료된 시도교육청의 수 실적 \div 16개 시도교육청) \times 100 ⑩ 100% 파악 ⑧ 90~100% 미만 ⑥ 80~90% 미만 ④ 70~80% 미만 ② 70% 미만
국민이해당사자 만족도	멘티/멘토/학부모 만족도(5점 척도) 평균 기준 ⑩ 4.0 이상 ⑧ 3.8~4.0 미만 ⑥ 3.5~3.8 미만 ④ 3.0~3.5 미만 ② 3.0 미만
대학생 멘토링의 봉사학점 인정정도	(학점인정 대학 수 \div 멘토링 사업 수행 대학 수) \times 100 ⑩ 100% ⑧ 90~100% 미만 ⑥ 80~90% 미만 ④ 70~80% 미만 ② 70% 미만